한성대학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한국서양사학회, 이주사학회 공동학술대회

글로벌 이주시대
공동체 이론과 실제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10:30 ~ 18:00

한성대학교 컨퍼런스홀

〈주 최〉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한국서양사학회, 이주사학회

〈후 원〉
한국연구재단 / 교육부

프로그램

대학원생 세션 / 사회 : 윤용선(한성대학교)	
10:30~11:10	발표1 **진나라**(한성대학교 국제이주협력학과 석사과정)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대학생 인식 분석 –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토론 **김나경**(전남대학교)
11:10~11:50	발표2 **동찬위**(한성대학교 국제이주협력학과 석사과정) 여성 결혼 이민자 혼인 위기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중국 한족 여성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토론 **이소영**(선문대학교)
11:50~13:00	등 록
13:00~13:20	각 기관장 인사말 / 사회 : 권은혜(한성대학교) 개회사 : **황혜성** (한성대학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장) 환영사 : **이창원** (한성대학교 총장) 축 사 : **박 단** (서양사학회 회장, 서강대학교) **오영인** (이주사학회 회장, 평택대학교)
제1세션 / 사회 : 권은혜(한성대학교)	
13:20~14:00	발표1 **김지윤**(한성대학교) 모빌리티 시대의 이주 : 이주 담론의 차별화 토론 **서선영**(충북대학교)
14:00~14:40	발표2 **고가영**(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유입과 광주 '고려인 마을' 공동체의 확장 토론 **양승조**(숭실대학교)
14:40~14:50	휴식
제2세션 / 사회 : 박효근(세종대학교)	
14:50~15:30	발표3 **문종현**(세종대학교) 식민지 시대 알제리로의 여성 이주 – 프랑스 만들기와 여성 토론 **양재혁**(한성대학교)
15:30~16:10	발표4 **이찬행**(충북대학교) 갱스터 랩과 로스앤젤레스 인종 갈등 토론 **김성엽**(서울대학교)
16:10~16:20	휴식
제3세션 / 사회 : 이용일(대구교육대학교)	
16:20~17:00	발표5 **김만권**(경희대학교) 다원성과 공동체 : 이주민과 '겹' 공동체 토론 **서대승**(서울대학교)
17:00~17:30	종합토론
17:30~17:50	한국서양사학회 우수석사논문상 시상식
17:50	폐회사 : **조규태**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장)

목 차

대학원생 세션

발표.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대학생 인식 분석
-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_ 진나라 9

발표. 여성 결혼 이민자 혼인 위기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
- 중국 한족 여성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_ 동찬위 16

제1세션

발표1. 모빌리티 시대의 이주: 이주 담론의 차별화_ 김지윤 31

발표2.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유입과 광구 '고려인 마을' 공동체의 확장_ 고가영 56

제2세션

발표3. 식민지 시대 알제리로의 여성 이주
- 프랑스 만들기와 여성_ 문종현 91

발표4. 갱스타 랩과 로스앤젤레스 인종 갈등_ 이찬행 107

제3세션

발표5. 다원성과 공동체 : 이주민과 '겹' 공동체_ 김만권 121

대학원 세션

진나라 (한성대학교 국제이주협력학과 석사과정)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대학생 인식 분석
–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

동찬위 (한성대학교 국제이주협력학과 석사과정)
여성 결혼 이민자 혼인 위기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
- 중국 한족 여성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대학생 인식 분석
-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진 나 라
한성대학교 대학원
국제이주협력학과

〈목 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Ⅲ. 연구방법 및 구성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Ⅰ. 서론

‘다문화(Multi-Culture)’는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 다양한 개념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다면성 의미가 사라진 채 ‘다문화가족’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정기선, 2021: p.2). 현재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와 사람이 결합된 합성어의 사용이 흔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합성어의 사용은 약자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고착시킬 수 있는 언어 습관이 된다(하재연, 2018: p.1). 즉 대상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용어가 될 수 있으며, 특별하거나 약자라는 이미지를 담은 용어가 된다. 「2022년도 서울시 홍보물 인종·이주민 차별표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홍보물 차별표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다문화'와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결된 단어들이 다수 발견되었다(오정은, 2022: p.25). '한국인이 아닌 대상'을 행정적으로 지칭할 때 '다문화'로 수식하여 용어를 쉽게 활용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차별로 분류하고 있다(오정은, 2022: p.46). 차별적 요소가 있는 다문화 합성어는 다문화사회 또는 글로벌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사람을 지칭하는 다문화 합성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면 문제가 된다. 이주민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구분에 무감각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자들도 차별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그들은 지속적인 사회적 약자로 남게 되고 주변화 될 가능성이 있다.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인터넷에 '다문화 용어'를 검색하기만 하여도 용어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이 다수 발견된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장한업, 2011; 이민경, 이수정 ,2011; 최유숙, 2017; 서종남, 2010; 국가인권위원회, 2021; 오정은, 2022)에서도 특정 대상을 구분 짓는 '다문화'용어 또는 차별인식 관련 논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이어져 온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차별표현에 대한 대체용어 개발에 초점을 두었으며, 여전히 기존의 표현들이 사용된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또한 '다문화'용어에 대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대상들의 인식을 조사하지 않은 부분이 아쉬운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체용어에 초점을 두지 않은 채, 다문화 합성어의 개념과 문제점을 다룬다. 또한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다양한 지역 출신이 많아 국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성과 변화를 받아들여 미래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합성어 인식을 조사하는 점이 특징이다.

2. ‘다문화’의 개념

‘다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광범위한 표현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3.02.01.검색). 여기서 ‘문화’는 사회 구성원에 의해 만들어진 행동·생활양식 또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얻은 물질·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포함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3.02.01.검색). 문화의 광범위한 의미는 일의적 규명이 어렵다. 따라서 광의와 협의로 구별할 수 있다. 광의로 문화의 의미를 정의한다면, “예술 이상의 생활양식, 행위양식 및 가치관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협의로 문화의 의미를 정의한다면 “정치·경제·사회의 영역”과는 구별되는 “예술·종교·학문·교육 등을 포함한 총체”이다(최용전, 2019: p.849).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문화’는 다양한 모습과 생활방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최희선, 2018: p.10).

3. ‘다문화 합성어’의 개념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합성어(compound)’란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3.02.01.검색). 둘 이상의 단어를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으로 ‘새로운 개념이 생성되었을 때 기존에 존재하는 단어를 활용하여 필요한 단어를 경제적으로 생성’하는 경우가 많다. 합성어는 단어의 특성과 같으나 결합된 단어들의 각각의 개념이 확대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합성어는 인지·문화·사회 통념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한다(이주희, 2005: pp.1~2, pp.15~16). 따라서 본 연구의 ‘다문화 합성어’란 ‘다양한 문화’를 일컫는 용어인 ‘다문화’에 다른 단어를 결합한 것이다. 즉, 용어가 합성어의 형태를 가지며 ‘다문화+α’로 통칭되는 것을 의미한다(오정은, 2022: p.34).

4. ‘다문화 합성어’의 문제점

‘다문화’라는 용어 뒤에 ‘축제, 프로그램, 자녀, 초등학생, 어린이, 여성, 부부 등’과 같이 다른 단어를 합성하여 사용하는 용어가 흔히 발견된다. 합성어는 생성되는 과정에서 인지·문화·사회 통념 등이 반영된다(이주희, 2005: pp.15~16). ‘다문화 축제, 다문화 교육’과 같이 ‘다문화’의 본래 의미인 ‘다양한 문화’를 뜻하는 경우는 합성어 생성 과정에서도 단어가 가진 각각의 의미를 유지한다. 그러나 사람을 지칭하는 다문화 합성어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는 본래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인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별’의 사전적 개념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3.02.01.검색). 이에 따라 다문화 합성어가 차별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문화’배경이 없는 사람들과 차이를 두어 구별을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차별’에 해당한다. 여러 집단 간의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해치는 차별 용어와 그 표현도 문제는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다. 따라서 차별 표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따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과정은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박재현, 2009: p.144).

Ⅲ.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Google Forms’를 사용했다. 플랫폼에 설문지를 탑재한 후, 2023년 4월 18일부터 2023년 4월 24일까지 응답지 수집을 진행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회수된 응답지는 총 241개이며, 이 가운데 유효한 응답지는 202개이다. 연구의 진행을 위한 설문 대상은 서울소재 대학의 재학생으로 설정하였다. 서울지역의 대학교에는 다양한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많아 국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집단에서 임의 확률 방식으로 대상의 전공, 연령, 성별, 출신지역 등이 무작위 추출되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미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학생은 다양성과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 고려 대상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설문 대상으로 의의가 있다.

Ⅳ. 연구결과

1. 다문화 합성어 접촉 경험

대학생들은 다문화 합성어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또는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다문화 합성어 중 어떤 유형이 더 많이 사용되는지 조사하기 위해 '최근 1년간 일상에서 다문화 합성어를 접한 경험'을 질문을 하고, 이를 5점 척도로 나타냈다. 그 결과, 대부분 다문화 합성어에 그다지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 여성', '다문화 부부', '다문화 아동·어린이', '다문화 초등학생',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다문화 남성', '다문화 중·고등학생', '다문화 장병/군인', '다문화인', '비다문화' 보다 접촉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광범위한 대상보다 세부적인 대상을 지칭할 때 다문화 합성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는 어린 아이와 여성에게 더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다문화 합성어의 이미지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다문화 합성어의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해 '다문화'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연상되는 대상, '다문화 여성', '다문화 아동·어린이',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 각각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과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에 대해 연상되는 형용사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다문화 여성'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는 '전업 주부 결혼이주여성'을 떠올렸으며, '어려움'이 있는 이미지를 연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수많은 응답자는 '다문화 아동·어린이'와 '다문화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떠올렸고, 편견이 있는 이미지를 떠올린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여성', '다문화 아동', '다문화 청소년'에 연상되는 형용사의 경우도

부정적 형용사가 높게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피부색이 까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난한', '불쌍한' 순으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났다.

3.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인식

다문화 합성어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다문화'를 사용한 용어가 너무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혀 아니다'와 '모르겠다'를 제외한 결과는 총 113명(56.0%)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합성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편임을 알 수 있다. '다문화'로 불리는 사람들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응답을 요청한 결과, '네'라는 응답이 116명(57.4%)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다문화'로 불리더라도 '한국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이 '다문화'에 대하여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떠올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하여 사람을 '다문화'로 지칭하는 것이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 '아니오'가 85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모르겠다' 75명(37.1%), '네' 42명(20.8%) 순이었다. '네'를 선택한 응답자 42명에게 '사람을 다문화로 지칭해야 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대부분 정책적 지원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들에게 다문화 합성어에 대하여 생각이나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총 36명(17.8%)이 의견을 기술했다. 이들의 의견에는 '사람을 다문화로 부르는 것이 차별은 아니지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사실임으로, 언어에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혀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개인을 지칭할 때 그 배경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특히나 아동과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다문화라는 표현을 언급하는 것은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그 외에도 '다문화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우리와 다르다고 분류하는 것'이라는 의견, '다문화에 대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성과 한국의 농촌지역 거주 남성의 국제결혼이 떠오른다'는 의견, '특정 집단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으나 특정 상황에서는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과 '대체 용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났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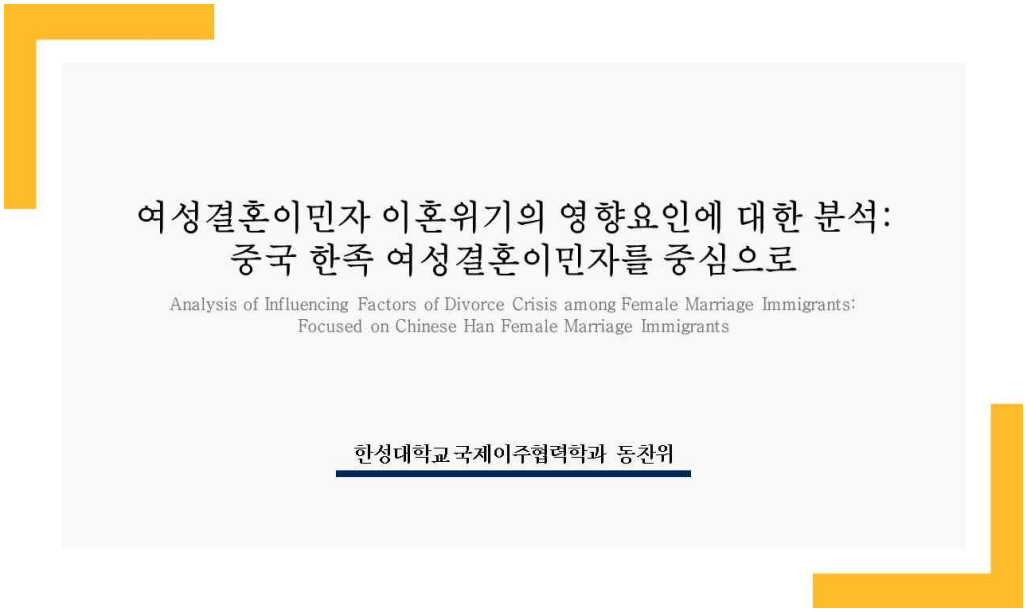
자라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차별적 표현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고착시킬 수 있는 언어 습관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하재연, 2018: p.1).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용어 자체의 문제보다는 '다문화'로 지칭되는 사람들을 우리와 비교하여 열등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이다. 누군가의 행위와 실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이 가진 인식과 태도이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다문화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선곡유화, 2013: p.174). 따라서 '다문화'가 본래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들이 참여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 사회가 '다문화'를 좁고 한정적인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적극적인 다문화 교육 마련을 제안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다문화'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고, 부정적 이미지로 굳어진 인식을 고쳐나가야 한다. 또한 무분별하게 다문화 합성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해 차별적 표현임을 분석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이에 따라 차별성을 띠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 이혼위기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동 찬 위
한성대학교 대학원
국제이주협력학과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 관련 이론적 검토
3.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III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 실태

1.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유입 및 정착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

IV 여성 결혼이민자 이혼위기의 영향 요인

1. 가족 내 문제
2. 사회적 문제

V 결론 및 제안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결혼이민자는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10년 만에 18.6% 증가했다.

-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 구성비는 6.2%로 전년보다 0.1%p 증가했다. 한국 남자와 이혼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중국(38.1%), 베트남(26.3%), 태국(7.9%) 순이었다. 이 중 중국 여성의 이혼 비율이 가장 높다.

- 다문화가정의 해체, 부부갈등, 가족관계, 가정폭력, 경제적 갈등, 정서적 문제, 인신공격, 자유의 제한 등 다양한 요소들이 부부의 이혼을 초래하여 다문화가정의 해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

- 다문화가정이 해체되어 한부모가정이 된 외국인 여성들은 일반적인 한국 이혼녀들에 비해 국제이혼 여성이 이혼 후 적응과정에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친지들의 몰이해와 **자녀 양육의 문제**를 더 많이 겪게 된다.

-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는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공포와 불안감, 고독감에 젖어 일상생활에서 무력증 및 갈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가정 출신의 자녀들보다 결혼 후 더 많이 이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중국 한족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
  - 중국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결혼 및 이혼은 모든 외국 여성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 중국 한족 출신 여성은 중국 조선족 출신 여성에 비해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성장환경과 한국의 생활방식 간 차이가 더 크다.

- **이혼 위기 개입 방안 제시 불필요한 이혼 줄이 할 수 있음**
  - 일부 이혼 이주여성의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을 비롯한 참을 수 없는 가정 내 문제로 인한 이혼이지만 초기 **사회적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언어 및 직무 기능 습득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한족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혼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가족 해체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결합하여 불필요한 이혼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이혼위기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의 추이 분석,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현황 판단
-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의 영향 요인 파악
- 적절한 이혼위기 해소 방안을 제시, 건강한 다문화 가정 구축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 관련 이론적 검토
3.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연구주제	연구자	연구결과
여성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가족의 이혼 원인을 다각화하는 연구	김두섭·이명진(2007)	다문화가족 부부 간 교육문화 차이와 나이 차이도 이혼 결정 단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설동훈(2009)	여성 결혼이민자와 남편의 생활방식 차이와 성격 차이가 부부 갈등의 첫 번째 요인을 제시
	박재규(2011)	연령대별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국제결혼 관계에서 결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선희(2014)	일부 이혼 이주여성의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을 비롯한 참을 수 없는 가정 내 문제로 인한 이혼이지만 초기 사회적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음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 후 생활과 자녀양육 문제를 분석하고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이해경(2015)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 후 삶을 7단계로 나누고 심층면접 결과에 따라 이혼 충격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
	김희주(2018)	배제의 개념을 사용하여 한부모 여성과 결혼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의 원인과 과정을 연구하고 지원 정책과 실천적 의의를 제공
	최천근(2020)	국적·연령별 한부모 여성 결혼이민자의 빈곤 상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상별로 차별화된 빈곤퇴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
	조세은·김혜미(2022)	이혼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경력을 검토하고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여성 결혼이민자 이혼 후 생활의 안정을 찾는 방법에 대해 논의

II. 이론적 배경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 관련 이론적 검토

1) 이혼위기의 개념

이혼위기의 개념 위기의 한자적 의미는 **위험한 일이지만 기회가 된다**는 뜻이다 (진위펀,2014).

영어로 해석하면 위기(crisis)는 "**어렵거나 결정적인 시기,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전환점**"이라고 정의된다.

=>두 가지 동·서양의 개념정의를 통합해보면, 이혼위기의 개념은 결혼한 부부들이 그들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위험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일정한 불균형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손과 교정, 치유가 가능한 불안과 갈등으로 찬 선택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박순희, 1974).

이혼의도는 이혼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혼의도는 **이혼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결혼관계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즉 **이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생각**까지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에 대해 국제결혼관계에 있는 외국인 여성이 이혼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정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 관련 이론적 검토

2) 이혼위기의 영향요인

Ponzzetti(1992)는 개인들이 자신이나 배우자에 대해 느끼는 반응, 행동, 느낌에서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네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또한 남,녀에 따라 언급되는 이혼 사유가 다르므로 네가지 영역에서 남,녀가 주로 주장하는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개하였다. 위 연구에서, 이혼의 영향요인을 다음과 같다.

개인 영역	부부관계상 영역	사회관계망 영역	환경 영역
-배우자의 행동 -자유를 원함 -성격이나 가치관의 변화 -감정적인 문제 -근본적으로 행복하지 못함	-의사소통의 어려움 -생활방식의 차이 -성적인 문제나 성적 부조화 -신체적 학대나 폭력 -성 역할에 대한 갈등 -사랑의 결핍 -부조화 -권위적/통제적임	-부정행위 -결혼생활에 제3자 개입	-외적인 세력 -재정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

주미대(1982)는 이혼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사상적 요인, 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종교적 요인** 등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이혼위기 영향요인은 가족 내 문제와 사회적 문제로 나누었다.

II.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①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국 한족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이다. 이혼위기에 처했거나 겪었던 여성 결혼이민자 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한다. 심층면접대상자의 개인 배경적 특성은 다음 표과 같다.

번호	이름	나이	출신	국적	결혼	자녀	나이차	결혼경로	한국어 능력
1	A	27	중국한족	중국	2019	0명	2세	친구 소개	중
2	B	30	중국한족	중국	2017	2명	6세	친구 소개	중
3	C	31	중국한족	한국	2017	1명	3세	학교 연애	상
4	D	36	중국한족	중국	2011	2명	10세	시내 연애	상

② 연구절차

예비조사 => 여성결혼이민자 1명을 선정해 2시간가량 면접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여성결혼이민자 면접에 대한 반응과 의견 등을 관찰하여 그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최종 면접 질문을 결정하기 위해 수정하고 보완한다.

본조사 => 본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며, 각 대화 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통제된다. 면접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녹음 및 문자 채팅 기록을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③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선택한 자료분석방법은 기록된 면담 내용을 **범주화**하여 이미 분류된 내용을 공통주제로 다시 찾아 **소주제**를 정하는 방식이다. 소주제를 정한 이후의 면담 자료는 연구의 관련 자료와 대조하여 분석한다.

III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 실태

1.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유입 및 정착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

III.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 실태
1.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 유입 및 정착

1980년대 이후 산업화로 한국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한국 남성의 결혼 수요가 늘면서 전체 국제결혼의 72%를 차지하는 외국인 여성이 많이 들어왔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계기는 1992년 **중국·베트남과 수교**한 것이 계기가 됐다. 또 1990년 이후 한국 예술 분야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류 문화**로 해외 여성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추이, 2001-2021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외국인 혼인 건수는 1만3천102건에서 2020년 1만5천341건에 비해 2천239건 감소한다.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은 8985건으로 전년 대비 19.1% 감소하고,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혼인은 4117건으로 2.9% 감소한다.

III.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 실태
2.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

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 2011-2021

(단위 : 건,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男+외국女	8,349	7,878	7,588	6,998	5,743	5,610	5,206	5,174	4,917	4,378	4,315	100.0	-63	-1.4
중 국	4,783	4,204	3,797	3,402	2,830	2,703	2,351	2,275	2,104	1,674	1,584	36.7	-90	-5.4
베 트 남	1,931	1,992	2,057	1,821	1,480	1,570	1,575	1,570	1,463	1,408	1,349	31.3	-59	-4.2
태 국	137	129	133	107	101	107	132	143	169	229	276	6.4	47	20.5
필 리 핀	328	395	435	449	366	298	242	257	231	229	216	5.0	-13	-5.7
일 본	292	254	259	290	235	186	172	180	193	142	143	3.3	1	0.7
미 국	85	105	114	117	107	111	137	114	127	87	129	3.0	42	48.3
캄보디아	192	180	152	155	137	157	134	157	139	120	119	2.8	-1	-0.8
기 타	601	619	641	657	487	478	463	478	491	489	499	11.6	10	2.0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한국 남자와 이혼은 2021년 총 4,315건으로, 이혼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중국(36.7%), 베트남(31.3%), 태국(6.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년대비 외국인과의 이혼건수는 중국(-90건), 베트남(-59건), 필리핀(-13건) 순으로 많이 감소한다.

IV 여성 결혼이민자 이혼위기의 영향 요인

1. 가족 내 문제

2. 사회적 문제

IV. 여성 결혼이민자 이혼위기의 영향 요인 1. 가족 내 문제

1) 경제적 문제

저는 외동딸이고 부모님도 돈이 많으셔서 중국집에 원래 차가 두 대 있는데 부모님께서 큰 집도 사주셨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결혼해서 서울에 살면 집값도 비싸요. 차를 팔면 주차공간이 있는 집을 다시 찾아야 했고, 차 유지비와 유류비도 큰 지출이어서 차를 사지 못했어요. 지금은 매달 정해진 집세 등 생활비를 빼고 쇼핑, 미용, 피트니스 등으로 돈을 모을 수 없어요. 회사에서 가까운 큰 집으로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고 보니 한국에 사는 것보다 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걸까? 늘 머릿속에 떠오르던 질문이었지만 남편과 이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그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내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럴 때마다 회사를 그만두고 중국으로 돌아가 살고 싶지만, 막상 돌아가 벌거 중인 두 나라의 결혼 상태가 된다면 힘들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A)

중국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일부 여성들은 중국에서의 생활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가정 환경이 이전보다 좋아지기를 바라며 더 좋은 차를 사거나 더 큰 집으로 바꾸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땅값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이러한 소원을 이루기까지는 매우 힘들고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모으느라 생활자금이 빠듯해지자 일부 여성들은 **자신의 생활여건이 떨어진**다고 느껴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모국으로 돌아가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IV. 여성 결혼이민자 이혼위기의 영향 요인 1. 가족 내 문제

2) 부부간의 갈등, 가족간의 관계 문제

시어머니는 내가 잘 못할 때마다 "왜 또 그래! 도대체 왜 외국인과 결혼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자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런 투덜대는 말을 많이 들으면 빨리 시어머니 집에서 도망치려고만 해요.(B)

당시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결혼을 결심했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커요. 결혼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완전히 고통스러웠고, 가족 모임에서 실수할 때마다 꾸중을 들었어요. 시누이도 내가 실수하는 장면을 기대한 듯 비웃으며 쳐다봤어요.(D)

한국인 배우자로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준비과정이 부족한 채로 혼인을 서둘러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가족 내의 차별로 인해, 상당한 부적응 문제를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며,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시부모의 며느리에 대한 통제**가 존재함으로 인해, 시댁과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혼인상태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결혼적응 단계에 더 큰 장애가 생겨 별거와 이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IV. 여성 결혼이민자 이혼위기의 영향 요인 1. 가족 내 문제

3) 자녀 양육 문제

결혼보다 아이를 키우는 데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고, 따뜻한 가정 환경, 안정적인 경제 상황, 출산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 그리고 아이를 돌반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아직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 부모님은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아이를 낳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싸워요.(A)

왜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차별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아이가 다른 아이도 이런 이유로 친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C)

첫째 아이의 교육 문제에 대해 당시 저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항상 자신이 아이가 말하는 한국어에 영향을 줄까 봐 걱정해요. 그래서 얘랑 얘기를 덜 하게 되고요. 지금도 큰아들과 나 사이에는 늘 소외감이 있어요.(D)

어릴 때부터 한국어와 중국어를 배우는 아이를 원했지만 남편 가족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심지어 집에서 아이와 중국어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건 정말 무리예요.(C)

자녀 양육 문제도 다문화 가정의 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문제 중 하나이다.
아이 낳는 것에 대한 거부감
자녀가 혼혈인 신분으로 겪는 차별과 배제의 문제
자녀 언어습득 문제서 시작된 교육방식 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쌓이면 결혼의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IV. 여성 결혼이민자 이혼위기의 영향 요인 1. 가족 내 문제

4) 가정폭력

매번 싸울 때마다 남편은 컴퓨터 게임을 하며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나는 화가 나서 컴퓨터를 껐는데, 그는 마우스를 바닥에 던지고 나를 세게 벽에 밀어붙였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고 이 남자와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머리에 떠올랐어요.(B)

남편은 집에서 욕설을 많이 하는데, 욕설은 크고 모욕적이어서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결혼하기 전과 전혀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C)

다문화가정에서 **언어적, 행동적 폭력, 인권침해, 가혹행위**는 이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제도적으로 체류자 중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쉽다.

IV. 여성 결혼이민자 이혼위기의 영향 요인 1. 가족 내 문제

5) 연령, 직업, 학력 등의 차이

남편이 저보다 10살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달라요. 그는 심지어 저의 생각을 통제하려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스운 생각만 하고 유치하고 철없다고 말해요.(D)

막 졸업했을 때, 나는 직업이 별로고 월급도 적어서 사고 싶은 옷을 보면 남편 눈치를 봐야 해요. 비천하게 살고 있다고 느꼈어요.(C)

연령 차이, 직업, 학력 차이도 이혼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가족관계 요인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이 25-29세일 때, 부부의 연령차가 가장 많을 때,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 직업이 무직이거나 기타일 때, 월평균 소득이 가장 낮을 때,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관계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여성 결혼이민자 이혼위기의 영향 요인 2. 사회적 문제

1) 의사소통 문제

항상 쇼핑을 하다가 직원이 내 한국말을 듣고 내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갑자기 태도가 나빠져요.(A)

처음 꽃집을 열었을 때는 항상 고객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어 경영이 좋지 않았어요.(D)

중국으로 돌아가 살고 싶은 것은 한편으로는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언어 문제이기도 해요. 남편이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결혼을 해도 한국어가 많이 늘지 않았어요. 일도 중국 고객 접대에는 한국어를 잘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살다보면 한국어가 서툴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에 생활이 편할 것 같아요.(A)

의사소통 문제는 언어장애로 인한 부부간의 몰이해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부부들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달라 부부간의 친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언어 소통 문제는 업무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객, 상사, 동료들로부터 무시와 차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문화적 차이

나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시켜 먹어서 결혼 후 살이 많이 쪘어요. 남편은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몸매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내가 게으르고 운동도 안 하고 매일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하곤 했어요. 내가 뚱뚱해지고 못생겨졌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속상해요.(A)

나는 부모님과 친구처럼 지냈지만 시어머니 집에 갈 때마다 버릇이 많아 봉건사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B)

한국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남편, 친지, 직장동료와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민속 · 전통습관, 생활방식, 가치관, 종교신념** 등 문화적 차이로부터 의식대립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과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안

V. 결론 및 제안

결론

본 연구는 이혼위기에 처한 인 중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혼의도 사유를 분석하였다. 이혼위기에 영향을 **가정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로 나누다.

가정 내 문제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첫째,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만족도 저하 문제를 들 수 있다.
둘째는 부부간의 갈등과 여성 결혼이민자와 시어머니 등 다른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문제이다.
셋째, 자녀 양육문제는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서 더욱 중요시되기 때문에 자녀 양육문제는 가정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넷째, 가정 폭력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이혼을 결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다섯째,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연령, 학력, 직업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경우 대인관계 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사회적 문제에는 의사소통 문제와 문화적 차이가 포함된다.

V. 결론 및 제안

제안

- **전문법률자문기구의 설립**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 결정과 이혼을 증가 추이를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가 결혼생활 중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완충장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소가 문제 해결의 통로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지원을 제공되어야 한다.

-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역할도 겸하여 이러한 여성들의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 **부부관계를 굳건히 하기 위한 가족지식 학습**

여러 중국 한족 여성 다문화가족을 조직하여 함께 교류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가족 간에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내 한국인 남성의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활동도 필요한다.

- **경제적 독립을 위한 직업훈련**

학력이 낮아 직업선택에 지장을 받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 구성**

가정과 연계된 한국어 교육 매체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사회적 지원망을 구축하고, 각종 교육센터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원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다. 주부 자원봉사 활동, 한국여성과 여성 결혼이민자 간 1:1 멘토링 사업 추진 등도 가능하다.

제1세션

김지윤 (한성대학교)
모빌리티 시대의 이주: 이주 담론의 차별화

고가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유입과 광주 '고려인 마을' 공동체의 확장

발표 1

모빌리티 시대의 이주: 이주 담론의 차별화

김 지 윤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목 차〉

Ⅰ. 서론: 모빌리티 턴의 가능성
Ⅱ. 모빌리티 턴의 철학적 논의들
Ⅲ. 모빌리티 연구대상의 외연 확장
Ⅳ. 이주 모빌리티의 윤리적 질문

I. 서론: 모빌리티 턴의 가능성

2000년대 중반 이동성(mobility) 중심의 패러다임 등장인 '모빌리티 턴(mobility turn)'은1990년대부터 현대사회의 사회적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정주(dwelling)를 인간의 정상적이며 지배적인 상태로 보던 패러다임이 사람은 물론 사물, 사상, 문화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동 중이며 이러한 이동성의 시각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철학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루크레티우스(Lucretius)부터 중세 스피노자 그리고 현대의 들뢰즈에 이르는 다수의 철학자들이 이미 이동성에 기반한 존재론과 인식론적 논의를 전개시켜왔으며, 이들의 논의가 인류학, 사

회학, 지리학 등의 기반에서 모빌리티 담론에 관심을 가져온 학자들(Appadurai, 1986; Clifford, 1997; Urry, 2000; Bauman, 2011; Cresswell, 2006, 2011; Sheller, 2021)에게 상당한 영향[1]을 주었다. 이동성에 대한 이해는 공간적 이동과 시간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연구대상일 수밖에 없다(Cresswell, 2006: 1). 그럼에도 모빌리티 턴 이후, 기존에 각 분과 학문에서 연구되던 이동성의 형태나 관련 주제들이, 특히 인류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된 이주, 여행, 도시에서 걷기나 다양한 형태의 이동수단을 통한 반복적인 이동, 신체내의 대사활동, 그리고 사물과 사상의 움직임까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을 가로지르는 이동성이 이동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모빌리티[2]의 영어 발음을 그대로 음차하여 모빌리티 패러다임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모빌리티 턴 이후 모빌리티라는 단어는 21세기 지구화의 모든 흐름을 개념화하는 주요 개념어로 자리잡고 있다. 존 어리는 '이동적(mobile)'이 가진 여러 의미를 물건과 사람이 지니는 어떤 속성으로서 이동가능하다는 능력, 통제하기 어렵고 무질서해 보인다는 의미에서 폭민, 상향 혹은 하향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 이주와 같은 장기적이며 지리적인 이동으로 크게 구분한다. 이후 서있기, 빈둥거리기, 걷기, 오르기, 춤추기, 다양한 이동수단(자전거, 버스,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휠체어, 목발 등)에 의해 강화된 이동의 형태를 망라한다고 설명한다(존 어리, 2022[2007]: 24-26).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너무나 방대한 모빌리티의 형태를 체계적으로 제시

1) '이동성의 사회학(mobile sociology)' 연구자로 알려질 만큼 존 어리(John Urry)는 이미 1990년대 초반에 『기호와 공간의 경제학(Economies of Signs and Space)』(1993)를 통해 후기산업시대의 글로벌 경제에서 이주하는 주체, 문화산업이 이미지와 상징 등 기호가 유통되는 시공간을 창조해낸 방식 등에 대해 분석하였고, 관광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Tourist Gaze (1990)는 현재까지도 관광에 대한 대표적인 개론서로서 다른 학자와의 공동 작업으로 내용을 시대에 따라 보완하여 Tourist Gaze 3.0 (2011)을 펴냈다. 모빌리티 턴은 이후 미미 셸러(Mimi Sheller)를 대표로 주로 사회학 및 지리학 전공의 영국 학자들이 논의를 확장시키며 2003년 랭카스터 대학에서 모빌리티에 관한 연구센터인 Center for Mobilities Research (CeMoRe)를 설립하였고 CeMoRe 주도로 관련 저널인 Journal Mobilities (2006)를 창간한 이후 '모빌리티 턴' 이후 관련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2) 이동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무브먼트(movement)와 모빌리티(mobility)는 한국어로 모두 이동 혹은 이동성으로 번역되고 있다. 팀크리스웰이 이 둘을 구분하기도 하였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고, 최근 모빌리티 턴 이후 모빌리티가 다양한 이동성을 모두 함의하는 포괄적인 개념어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글에서는 모빌리티 턴 그 자체를 언급하거나 모빌리티 개념을 원저자가 강조한 경우에는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 외에는 이동성이라는 단어를 모빌리티와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존 어리는 이러한 모빌리티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system)의 검토로 나아간다. 시스템은 특정 모빌리티의 반복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이러한 모빌리티가 어떻게 공간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기대 공간"을 창출하게 한다(ibid., 33)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기술 발전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어서 19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된 국영 우편 시스템, 대중 관광 패키지, 철도 및 항공 시스템과 같은 것들이다. 미미 셸러는 코로나 이후의 모빌리티에 관한 성찰을 포함한 책에서 이러한 기존의 다양한 이동 형태를 중심으로 한 연구 대상의 확장에 인류세 시대의 이동과 대안적 이동의 형태에 논의하면서 이동의 정의(justice)와 윤리적 논의로 담론을 좀 더 확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겪은 이후 이제 이동하는 것 혹은 이동되는 것은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균과 바이러스, 혐오와 같은 정동, 습관이나 가치관 등의 문화와 지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물과 비인간(non-human)적인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모빌리티 턴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대부분의 논의는 숫자와 속도로 시작한다. 이주민의 수, 출생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수, 해외 여행객의 증가, 난민의 급증[3] 등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이는 상당한 수의 인구가 여전히 이러한 이동성의 회로를 따라 이동하고 보다 상대적으로 정주적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 이주자로서 파악된 3%는 송금경제(remittance economy)와 고국의 정치에 원격적으로 참여하거나 초국가적 이동성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나 도시들을 오가며 문화와 사상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함께 이동시키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7%는 직접적인 이주민이 아니다. 물론 최근 모빌리티 턴이 도시 내 이동성과 세포와 같은 미시적 이동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동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인식이 확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주보다 이동이 존재의 근원적인 상태라는 발화를 통

3)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 전 세계 국제 이주자 수는 약 2억 8,100만 명으로,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6%에 해당한다. 2020년 출생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총 2억 8,100만 명은 1990년보다 1억 2,800만 명 더 많으며 1970년 추정치의 3배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다(UN Migration https://worldmigrationreport.iom.int/wmr-2022-interactive, 2023년 5월 8일 접속). 여행 관련 국제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세계의 해외관광객 수는 1950년 2백5십여 명에서 2019년 코로나19 직전까지 14억6천5백만 명으로 약 60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세계 77억 인구의 약 19%가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다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09334/total-number-of-international-tourist-arrivals, 2023년 5월 8일 접속)

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하나의 우산과 같은 개념으로 두었을 때, 여행객과 난민의 이동, 거리 노숙자와 산보자의 이동, 글로벌 엘리트와 기후난민의 이동에 대해 주목하는 우리의 논의는 좀 더 거시적으로 풍성해질 것인가 혹은 놓치게 되는 지점들이 증가하게 될까?

이 글에서는 모빌리티 담론이 확장된 이래 도시 내에서의 걷기,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이동방식, 여행(travel)과 관광(tourism), 이주(migration), 초국가적 이주(transmigration) 등을 포괄하는 우산(umbrallera)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빌리티 턴의 담론적 확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철학적 논의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이를 인문사회학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모빌리티 턴 이후 담론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다양한 이동성의 형태별 카테고리 중 주요한 도시 내 이동성, 사물과 지식 그리고 개념과 같은 비인간적 존재의 이동성, 여행, 이주의 이동 이동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각각의 이동성에서 주요하게 제기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을 전후로 하여 이동성은 본격적으로 윤리적, 정치적 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동성이 곧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로서 낭만화되던 자유주의적 논의가 후퇴하고 누군가의 이동성을 제한하거나 보호하는 것, 차별화된 이동성이 비판받거나 지지받기도 하는 상황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의 흐름과 노동력으로서의 이주민의 흐름은 그리고 미디어에 추동되는 상품으로서의 이미지는 가장 빠르고 무난하게 흐르고 있다. 바이러스와 세균은 글로벌화된 교통 수단과 가속화된 신체의 이동과 함께 단기간에 전세계로 이동하며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와 혐오의 정서 역시 함께 이동한다. 이동성은 점차 분화되며 이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평가와 태도 역시 다양하게 분화된다. 이동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중립적인 적이 없으며 어떤 이동이 환영받고 배척되는지, 개인의 젠더, 종족, 연령, 국적 등에 따라 제약의 정도가 달라지며 그 결과 이동성의 보장은 교육, 직업, 여가, 정치 참여에의 소외 정도와 긴밀히 연결된다는 것이 이미 사회적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는 다시 이동의 문화정치학으로도 이어진다. 이동은 때로 사회에 대한 저항과 위반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개인의 이동성은 개인의 이미지 형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빌리티 턴 이후 정주에서 이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마치 이동하지 않는 것은 그저 멈춰 있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중요한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한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이동 중이라고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만일 멈춰 있는 것도 실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단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정주 역시 이동성의 한 순간이 되어 정주는 정주가 아니라 이동 중인 삶의 한 방식인걸까? 한편에서 이동성은 진전, 자유, 욕망, 저항, 생기로서 이해되고 있다. 이동성은 항상 자유와 연결되는가? 난민이나 이주노동자의 이동성은 이동의 권리로서도 중요하지만 이동하지 않을 권리로서도 중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이동성과 이주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모빌리티 담론이 이동성을 자유와 쉽게 결부시키는 방식, 이동성의 권리만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라 이동하지 않을 권리 보장의 중요성, 그리고 정주와 이동 간의 좀 더 유기적 사고의 가능성 등이 제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이주라는 형태의 이동성의 시작과 과정이 가장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 그리고 이동 이후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동과 정주 사이에 놓이는 그 불안정성 때문에 이주의 다양한 동학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이동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다. 즉 모빌리티 턴 이후 이동성에 관한 학문적 담론에 대한 분석 이후 다양한 이동성의 층위에서 이주라는 이동성에 좀 더 차별적으로 주목해야 할 이유 그리고 이를 통해 제시될 수 있는 좀 더 풍성한 논의들의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II. 모빌리티 턴의 철학적 논의들

1. 정지 혹은 사물 속의 움직임

루크레티우스의 중력에서 약간 벗어난 비껴나감의 운동(clinamen), 스피노자의 능동적인 충동으로서의 코나투스(conatus), 라투르가 언급한 객체도 주체도 아닌 간섭자로서의 행위소(actant), 미셸 세르가 대안적 위상학을 제시하면서 이동, 연결, 매개 자체의 일차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아와 타자 그리고 자연과 문화라는 이분법에서 배제된 제3자이자 하이브리드적 존재로서 제안한 유사-객체(quasi-object) (아네르스 블록・토르벤 엘고르 옌센, 2017) 등과 관련된 논의들은 모빌리티 턴에 있어서 이동성의 창조적, 생성적 힘을 강조하고 있다. 정지해 보이는 사물들마저 항상 이동하고 있으므로 비인간과 인간 존재 모두가 실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는 새로운 존재론 혹은 인식론의 기반은 이러한 철학적 논의에 기대고 있다. 들뢰즈가 강조한 탈주의 선을 그리면서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를 통해 정치적 해방의 가능성으로까지 연결되는 사고 역시 이러한 철학적 논의에 큰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는 사회학적 논의의 기반에서 철학적 논의를 깊게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모빌리티 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철학적 논의들을 중심으로 사회학적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 논의에 한정하여 모빌리티 턴의 주요 논점들을 파악해 보려고 한다.

철학자 루크레티우스는『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에서 원자의 운동이 중력에 의해서 직하강만 한다면 다양성과 생명 창조가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편위 혹은 비껴남(clinamen) (2012: 125-131)의 운동에 대해 설명한다. '최소보다 크지 않게' 발생하는 비껴남은 사선 운동보다는 미세하지만 중력에 의해 그저 직선으로 하강하지도 않는 운동이다(이준엽, 2016: 123). 이렇게 정해진 시공간에서 운동의 방향을 비껴 바꾸는 것은 바로 정신 자체가 이끌어가는 곳, 자신의 의지가 그 시작을 제공한다고 한다. '장소에 있어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정해지지 않은 순간에' 발생하는 비껴남의 운동은 모빌리티 논의에서 강조하는 이동성의 '생성적인' 속성을 설명하는데 항상 인용되고 있다. 바로 이어지는 논의에서 루크레티우스는 사물에 초점

을 멈추어 “멈춰 서 있는 사물 속의 움직임”(132)에 대해 논하면서 다시 사물들의 모든 기원들이 움직임 속에 있다고 한다. 즉 멈춰서 있는 듯 보이는 사물들은 우리의 감각이 그 움직임을 감각하지 못할 뿐이지 감각의 한계를 넘어선다면 그 운동을 감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루크레티우스의 시는 물질의 생기에 대해 감각적, 언어적, 상상적인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Benet, 2020[2010]). 들뢰즈와 가타리는 금속처럼 모빌리티와 가장 거리가 먼 것 같은 물질성에 대해서도 금속의 진동하는 활기를 언급하며 개별적인 신체적 형상을 갖지 않은 물질의 모호한 진동마저도 움직임으로 상상한다.

이러한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은 생기 유물론(vital materialism)은 물질적인 사물들도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시각을 펼친다. 이는 모빌리티를 비인간 혹은 사물들에게로 확장하여 인류세 시대의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유물론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기존 사회학에서 강조해 온 인간의 ‘행위성(agency)’ 대 사회 ‘구조(structure)’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비판한다. 여기서 구조는 인간의 행위성을 제한하는 부정적 작용으로 혹은 단순히 행위성의 배경이나 맥락으로서 수동적으로만 작용하는 반면, 능동적인 행위성은 인간을 통해서만 작동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제인 베넷, 2020[2010]: 94). 본 연구에서는 제인 베넷의 생기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제인 베넷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행위성은 언제나 인간성과 비인간성이 뒤얽힌 네트워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도시의 정전발생 등 현대 사회의 많은 현상들은 더 이상 하나의 원인에 의해 선형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창발적이고 프랙털(fractal)적이며 원인과 결과가 서로 자리를 바꾸며 서로에게 되돌아가는 순환적이기도 하다(ibid., 101). 이러한 맥락에서 “생동하는 물질성(vibrant materiality)”은 인간과 비인간 모두의 신체들을 가로지는 것으로 세포에서 금속이나 전기 그리고 쓰레기에 이르기까지 사물들과 물리적 현상들의 생동적 유물론의 정치적 그리고 이론적 함의들을 통해 물질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생동력 (vital force)”에 주목한다.

루크레티우스처럼 제인 베넷의 생기적 유물론적 시각에서도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다고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되기(becoming)이 인간이 식별할 수 없는 수준과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이어서 인간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는 것이 필

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베넷의 연구에 대한 비판으로 물질의 생명성과 능동성을 일깨우기 위한 "수사적 전략과 개념적 발명"(주재형, 2022: 152-154)으로서 매우 주관적이며 문학적 은유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바로 관찰자인 베넷의 감수성이 사물들의 개체성이나 그 배치에 대해 갖는 매우 주관적인 정동, 특히 인간의 주관적인 관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은 따라서 생기적 유물론자 그리고 객체지향 존재론(Object Oriented Ontology)[4] 등의 논의들이 사물에게 '과도한' 행위자성이나 의도를 부각시키면서 인간의 독점적 지위를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본이나 인간 행위자가 윤리적 책임으로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았음을 지적한다. 2003년 북미에서 일어난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한 제인 베넷의 분석이 전기를 행위자로 소환하면서 여러 물리적 행위들의 중첩된 효과 그리고 심지어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러한 움직임이 정전을 발생시킨 진정한 원인이므로 민영화된 전력회사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정전 사태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질 수 없다'라며 전력회사들이 윤리적 책임에서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사례는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주재형, 2022: 163).

기존의 유물론적 논의에서 사물들의 이동은 이동하는 인간과 함께 부수적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이동하는 인간의 신체에 각인되거나 정신에 학습된 지식과 문화와 같은 비물질적 요소들 역시 인류의 장기적 이동과 이주의 경로를 따라 함께 이동해 왔다. 새로운 객체지향 존재론 혹은 생기적 유물론은 이러한 인간의 주체성에 부수적으로 객체화된 지식, 사상, 개념, 사물, 습관들이 이동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 특히 사물에 초점을 맞추어 사물 자체의 독자적 역능을 통해 이동하며, 심지어 그 이동성은 때때로 혹은 영원히 인간에게 인지되지 않을 것이기도 하다. 인간과 비인간 모두 동일하게 일종의 기계(machine)들로서 기계들의 다양한 회집(assemblages)을 통해 창발하는 것이다(Jane Bennett 2010; Ian Bogost 2012; 레비 R. 브라이

4) 레비 R. 브라이언트는 모든 존재자를 '기계'로 보고 이런 기계들의 회집체를 시공간적으로 이해하는 '존재의 지도학'을 그림으로써 권력의 작용방식을 파악하고 억압적인 사회적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고안하려는 시도로서 그의 객체지향존재론이 정치적이고 윤리적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특정한 윤리적 패러다임이나 정치적 패러다임도 옹호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새로운 존재론적 틀의 개괄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2020: 28)고 밝히고 있다.

언트, 2020). 이러한 논의는 이동성을 통해 사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로까지 확장하면서 모빌리티 논의를 풍성하게 하였고, 정주가 가지고 있던 정상성의 지배적 위치를 해체하는데 크기 기여하였다. 그러나 주로 생물학과 물리학 등 과학적 학문 전통에서 혹은 기계적 모델을 통해 진동, 연결성, 매개체, 접속의 대상과 맥락 등에 대한 매우 중립적이며 객관적 시각의 적용을 통해 현실에서의 인간의 이동성이 가진 다양한 층위와 이동성을 좌우하는 다양한 정동적 요소들을 파악해낼 수 있는 지점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 이주와 이동의 형상들

인류사에서 사냥과 채집의 유목민적 삶에서 농업과 목축의 정주적 삶으로서의 전환이 잉여의 생산물을 통해 원시축적을 가능하게 했고, 이로 인해 계층의 분화와 문화의 발전이 가능했다라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이동보다는 정주에 기반한 삶이 더 문명화되고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삶의 양식이라는 인식은 꽤 오래되었으며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정주보다는 방향성 있는 움직임을 강조한 루크레티우스와 탈주와 리좀적 분산을 강조한 들뢰즈 그리고 생기적 유물론과 같이 사물과 같은 비휴먼적 존재의 이동성까지 정주보다는 이동을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상태로 보는 철학적 논의들은 장소성과 정주에 기반하여 인간 공동체의 형성, 문화의 형성과 전수, 영토적 점유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분쟁, 그리고 이동 자체를 위험하거나 전복적인 행위로 보는 기존의 담론들과 대립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생기적 유물론이나 객체지향 존재론에서 다루던 사물과 비인간적 존재론의 이동에서 잠시 한걸음 물러나 인류의 이동에 좀 더 주목하면서도 이동성을 사회구성의 기본 모드로 바라보는 철학적 논의는 이러한 대립적 관계에서 한걸음 멀어져 있다.

주류 사회란 지역 문화와 공동체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정적인 것이며 다양한 이동을 예외적인 것으로 보던 시각을 넘어서 사회는 오히려 영토・정치・법적・경제적 힘의 확장에 있어서 주기적인 이동성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동의 관점에서 그 정치학을 파악하려는 것이 토마스 네일(Thomas Nail)이 제안한 키노정치학(kinopolitics) 혹은 이동의 정치학이다. 움직임 혹은 이동을 의미하는

‘키노(kino)’에 기반한 정치학은 인류의 모든 역사는 다양한 이동성에 기반해 왔다고 본다. 멈춰 보이는 정주의 사회 역시 일시적이거나 상대적인 정체(junction)의 상태이거나 반복적인 순환(circulation)의 상태라고 본다. 이러한 이동은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구심력에 의해 주변에서 사회의 중심으로 이주의 방향이 그려지기도 하고, 밀어내는 원심력에 의하면 중심에서 주변으로,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긴장력(tensional force)은 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의해 이미 이주해 온 누군가가 다시 밀려나는 이동을, 탄성력(elastic power)은 이동의 확장과 수축을, 변칙적인 힘(pedetic force)은 앞선 힘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이동을 유발한다. 토마스 네일의 논의는 키노정치학을 통해 작용하는 힘들과 함께 그 영향으로 이동하는 주체의 형상을 구분하는데 전형적으로 노마드, 야만인(the barbarian), 방랑자 (the vagabond), 노동자 (the proletariat)로 주요하게 구분된다. 이러한 형상은 한 개인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절대적 관계가 아니며 정주하는 개별적인 인간과 대응하는 개념도 아니다. 모든 인류는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리듬과 강도의 이동성을 보이고 좀 더 정주하는 듯 보이는 혹은 상대적으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힘들의 작용은 인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작동해 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주 중심의 안정된 사회가 식민지배를 통해 제국으로 팽창하거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연결성이 강화된 글로벌 사회로 질적으로 변화하여 정주의 사회에서 이동의 사회로 단절을 경험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다양한 힘들의 복합적 작용의 강도와 지속에 따라 정주적 사회로 혹은 이동의 사회로 보이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동의 정치학은 기존의 인문사회학적 전통에서 이동을 이해하는 인과적 방식, 영토가 성립되고 여기서 누군가가 축출되거나 배제되어 이동이 발생했다는 도식을 뒤집으려 한다. 오히려 이동이 영토를 만들어 냈으며, 포섭(inclusion)과 배제(exclusin) 역시 실은 계속 이동 중인 사람과 사물의 흐름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기에 나타나는 개념화 일뿐, 지속적인 이동에 작동하는 다양한 힘의 작용을 보도록 제시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매우 유동적인 흐름과 그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힘의 작동을 통해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과 인물들을 흐름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그의 모델은 그 설명해내고자 하는 대상과 반대로 매우 기계

적인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논의를 이동에 작동하는 힘과 그로 인한 이주의 형상들을 수많은 역사적 사례들에 적용하여 그 모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이동성의 지역적, 역사적 맥락은 무화되며 그 질적인 내용에 대한 윤리적, 정치적 판단의 여지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정주와 이동의 이분법을 해체하여 이 모든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다양한 힘의 작동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낸 후 사고를 더 진전시켜야 하는 지점은 어디일까?

III. 모빌리티 연구대상의 외연 확장

모빌리티 턴의 주요한 철학적 논의들을 간략히 검토하면서 이동에 주목해야 하는 좀 더 근원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모빌리티 턴이 구축해 온 다양한 이동의 형태들을 항목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모빌리티 연구대상이 어떻게 외연을 확장해 왔는지 보여주고 주요 논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주요하게 검토해 볼 연구 대상으로서의 이동성들은 인류학, 사회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과 학문에서 이미 모빌리티 턴의 등장 이전부터 연구되어 왔다. 그러므로 모빌리티 연구의 담론들이 이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빌리티라는 개념 아래 다시 소환되면서 논의의 지속성을 얻게 되는 지점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본 논의에서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1. 도시에서의 이동(urban mobility)

사건(events)과 장소성에 주목해 온 기존의 연구에서 '걷기'는 최종적으로 관찰되어야 할 사건보다는 과정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의 일부로서 특별할 것 없는 과정으로서 흔히 삭제되곤 했다. 그러나 적어도 도시인류학과 도시사회학에서 '걷기'는 도시 관찰의 방법으로서 혹은 관찰의 주요 대상으로서 주목받아왔다. 19세기 파리와 같은 모더니티의 도시에 도래한 산보자(flâneur)의 걷기는 이보다는 좀

더 한량스럽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산보자는 19세기 산업화 시기에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유형의 인물로 공장과 같은 근대의 산업화된 작업장에서 노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르주아 지식인이다. 보들레르처럼 도시의 예술적 감수성에 빠지거나 산업화시대 노동과 상품생산의 속도에서 비껴나가 느린 걸음으로 목적 없이 빈둥거리며 걷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상품, 유행, 건축 등 현대 대도시의 상품물신성에 매혹되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것과 낡은 것에 대해 관찰하고 기록했던 인물이다(Benjamin, 1976).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의 흔적을 찾아 현대 사회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하는 고고학자와 같은 인물이다.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는 도시에서의 걷는 행위 자체에 주목하여 그 정치적 가능성에까지 주목하게 하였다. 걷는다는 것은 개인의 발화행위(speech act)와 같다. 문법에 맞게 모두가 같은 어순과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지 않고 다양한 언어의 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걷는다는 것 역시 주어진 길을 모두가 똑같이 걷기 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우회를 택하거나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는 일종의 전술(tactics)적인 걷기를 실천한다. 이러한 행위는 마치 권력이 만들어낸 도시의 구조에 저항하거나 공간적인 전용을 통한 사회에 대한 저항, 혹은 전복적인 창조적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Certeau, 1984). 이는 거대 도시의 마천루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현실에 참여하지 않고 관조하는 듯한 전지적 관찰자의 시선과 대비되는 현실에 기반한 실천으로서의 '걷기'의 가능성을 읽어낸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도시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스마트시티(Smart Cities)와 이와 관련한 연구들에서 주목하는 도시 내 이동성은 걷기에서부터 전기를 활용한 일인용 전동 이동수단(personal transporter), 자전거, 자동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기반한 개별 이동의 방향과 속도 등을 중요한 감지(sensing)의 대상이자 분석되어야 할 데이터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개별 주체의 이동에 대해서는 파악하기도 어렵고 데이터로서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군중으로서의 이동성이 주요 초점이 된다. 이동성의 파악과 예측을 위한 매크로 수준의 인프라의 구축과 디지털화, 도시의 인공지능화를 위한 이동성의 데이터로서의 가독성을 높이기기 위한 센서의 구축 등이 중요해진다. 개별 시민 주체의 걷기는 관찰자의 시선을 담보하거나 전술적인 저항으로서의 이미지로 재현되기 보다는 전지적 시점에서 내려다 본 집합

적 데이터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시민들의 참여는 데이터화되고 집단화되어 정부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의 대쉬보드(dash borad)에서 시각화되고 독해되어야 한다(Barns, 2018; Kitchin & McArdle, 2016).

벤야민과 드세르토의 걷기에 대한 분석이 거대 도시의 출현과 성장의 과정에서 새로운 공간 조직에 적응하거나 저항하는 신체의 특별한 문화적 아상블라주(cultural assemblages)에 주목하며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과 저항적 가능성에 까지 나아가면서 '걷기'라는 행위에 대한 지나치게 낭만화 된 혹은 긍정적인 해석이라는 비판(Morris, 2004: 678-686)도 있다. 가령 출퇴근 하는 직장인 혹은 관광객의 쇼핑을 위한 이동 등은 어떤 면에서 저항과 순응 사이에 있는가라는 문제 등이 제기된다. 또한 벤야민과 보들레르가 언급한 산보자는 부르주아 백인 남성으로서의 관찰자로서 거리를 활보하고 노동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적 인물이었다. 과연 이러한 인물에 비해 현대 글로벌 도시에서 단속을 피해 피난처를 발견하기 위한 비자발적 이동을 멈출 수 없는 노숙인의 이동성(Jackson 2012)에서도 관찰자로서의 시선을 기대할 수 있는가? 모빌리티 턴 이후 다수의 연구들이 이렇게 도시에서의 이동성을 언급하여 주목하는 것은 이동의 불평등이기도 하다. 현대 도시에서 이동성은 젠더, 인종, 장애 여부, 교육수준, 소득 수준, 정치 참여에의 정도 등에 따라 제약되기도 소외당하기도 한다. 사회적 계층에 따라 걷기, 공유 교통수단, 대중교통, 자전거, 자동차, 헬리콥터에 이르기까지 이동의 수단도 달라진다. 이동을 둘러싼 문화정치학에서는 오토바이, 스케이트 보드, 파쿠르(parkour), 클라이밍 등을 통해 사회나 계층에 대한 저항적 이미지나 공동체의 미학을 구성하기도 한다(Jaffe & de Koning, 2022).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다시 한번 스마트시티 논의에서 기계 결정론에 의해 그 주체성이 약화되거나 단순히 디지털 데이터화하기 어려운 산발적인 움직임으로서 프랙탈적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문제는 도시 내에서의 걷기 혹은 새로운 교통 수단에 의해 변화하는 개인의 이동성에 대해 지나친 낭만화 그리고 양적인 데이터화 그 사이에 개인의 이동성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도시에서는 도시 내의 반복적인 개인들의 이동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이동과 밀려남이 발생하고 있다. 이동의 양과 질적인 측면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동의 편의, 정의, 정동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낯선 것에서 익숙한 것으로의 여행의 이동성

근대 대중 관광산업을 시작한 토마스 쿡(Thomas Cook)은 "1854년에 '모든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이 변화의 시대에 그대로 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범죄일 것이다. 여행 만세-값싸고 값싼 여행!'" (Brendon, 191:65)이라고 외쳤다. 근대 대중 관광산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도 여행은 인류의 역사만큼 긴 역사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관광학 혹은 여가학에서도 이미 여행을 정주가 아닌 이동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 올림픽이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혹은 신탁을 받기 위한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도시 국가로 이동하거나 전쟁에 동원되거나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유한 로마의 귀족들이 나폴리와 같은 해안가나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자연으로 떠났던 여행(Andrew, 2005) 등이 그러하다. 중세의 종교순례를 위한 여행, 르네상스 시대에 영국의 귀족 자제들이 성년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로서 이탈리아 등으로 고전 문명을 배우기 위해 떠났던 그랜드 투어(the Grand Tour), 18세기 후반부터 산업화에 대한 반감으로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 길들여지지 않은 스코틀랜드의 고지대인 하이랜드(Highlands)나 알프스의 산악 지대로 떠났던 귀족과 예술가들의 모험적 혹은 여가형 여행, 그리고 토마스 쿡이 런던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대중의 계몽과 관람을 위해 기차를 전세내면서 시작된 대중화된 관광 상품을 제국주의의 피식민국가들로 크루즈와 기차 그리고 간혹 비행기를 통해 유럽인들을 관광에 참여시켰던 모든 경로가 현재까지 주요 여행의 경로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여행(travel) 혹은 관광이란 세계화를 가능하게 한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 증가한 이동성과 함께 여가 시간과 소득의 증가에 의해 꾸준히 증가(Andrew, 2005)했다. 여행에 대한 낭만적 시각은 여행이란 세계에 대한 태도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Franklin, 2003: 33)이라거나 계몽적 시각은 여행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들이 상실하게 된 숭고함의 대상인 자연을 마주하거나 자아의 진정한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진정성(authenticity)를 추구하기 위한 행위(MacCannell, 1973)로 본다. 비록 현대 여행에 경험하는 원주민의 공연, 기념품, 현지인과의 조우 등이 대부분 꾸며진 무대와 공연으로서 진정성에 대한 추구는 계속 좌절되더라도

말이다. 이러한 여행에 대해 연구해 온 관광학은 관광객들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관광산업의 인프라, 그리고 여행객들의 이동이 관광지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Jafari, 1997: 8)로 정의된다.

2020년 코로나19 국면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일, 교육, 친교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이동 중이었고 그 수는 매년 예측을 상회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행은 이주나 난민의 이동과는 차별되는 소비의 영역으로서 곧 필수적이지 않고 절박하지 않은 '잉여'의 이동으로 취급되었다 (Larsen et al., 2006). 초기 그리스와 로마 시대 여행은 소수의 특권층이나 수행할 수 있는 사치스러운 행위였고, 여행지에서의 음주가무 등 '일탈적' 행위는 비판받아 왔다. 그랜드투어에 참여한 명문가의 자제들 역시 교육 목적이라는 허울 아래 향락과 일탈을 즐기는 퇴폐적인 무리로서 비난받아 왔다. 토마스 쿡에 의해 단체 관광이 가능해진 이후에는 이러한 관광객에 대한 비난은 더욱 노골적이 되어 패키지 상품으로 조직되어 취향없이 가이드의 지시를 받는 무식한 집단(hordes)으로 그려지곤 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현대 사회에도 이어지며 산업화된 관광의 식민경제적 성격에 대한 대안으로서 윤리적, 지속가능한 여행 등이 등장했지만 이들 역시 상품화되면서 여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멈춘 적이 없다. 누구나 일상과 노동의 반복에서 벗어나 가장 원하는 것이 여행이지만 동시에 여행은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더욱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여행이라는 이동성이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닌 '잉여적' 활동으로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행을 일회적이며 소비적 행위가 아닌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삶을 (재)생산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사회적 삶의 일부("mobile social life")로 보려는 시각(Larsen et al. 2006)이 주목받고 있다. 여행에 대한 낭만화된 시각이 여행의 동기에 대해 '타자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거대하고 보편적인 욕구나,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 전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탐구나 긴 여정'(McKean 1977)으로서 이해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해외에 이미 다양한 이유로 거주하고 있는 친구나 친지를 방문(VFR, visiting friends and relatives)하기 위한 목적의 여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나 친지 등 나에게 '유의미한 타자들(significant others)'이 이미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먼거리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반복

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하기 위한 이동이 곧 여행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동은 기존의 관광객들처럼 새로운 곳을 향하는 일회성의 이동, 새로운 경험과 문화 혹은 상품을 위한 소비가 중심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지의 결혼, 출산, 졸업, 장례 등 중요한 의례에 참여하거나 그들의 일상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재방문으로서 정주, 이주, 기존의 여행과도 차별화된다. 여행과 정주의 사이를 오가는(dwelling-in-travelling) 이동의 혼종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여행에서 여행객은 더 이상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수행성(performance)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여행은 결코 멈춘 적이 없었는데, 비록 이것이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 행위이든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것이든 가장 개별적이면서도 잉여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필수적일 수도 있는 것이 여행이라는 이동성이 가진 모순적인 본질일 수도 있을 것이다.

3. 사물, 지식, 사상의 모빌리티

사물, 지식과 개념, 기호와 이미지, 그리고 욕망과 같은 유무형의 비인간(non-human) 존재들도 모빌리티 논의에서 점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기존에 지식과 개념은 근대화를 통해 식민지로 확산되거나 기호와 이미지의 경제는 미디어 산업이라는 테크놀로지를 통해 확산되며, 상상력을 추동시키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욕망이 실제 관광과 소비를 불러일으킨다는 면에서 미디어경관(mediascape)과 에스노경관(ethnoscape)을 긴밀히 연결시켰던 아파듀라이의 논의 등이 이러한 비물질성이 어떻게 물리적 이동성을 수반하거나 이를 추동시키는지 분석하였다. 달라진 점은 문화의 전파와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분석되던 이러한 현상이 모빌리티라는 개념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사물의 이동성은 주로 교환이나 소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말리노프스키(Bronisław Malinowski)가 분석한 이래 많은 인류학자들이 주목했던 트로브리안드 군도(Trobriand Islands)의 쿨라(kula)와 같은 선물(gift) 교환 시스템은 사물의 이동성이 자본주의적 상품경제 출현 이전에 어떤 식으로 호혜성과 권력관계 형성에

기능했는지 보여준다. 즉각적인 물건의 소유보다는 시간을 두고 비슷한 지위의 인물들 간에 선물 증여를 통해 물건들을 이동시키는 쿨라의 의례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선물의 이동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했는지 잘 보여준다. 자본주의 등장 이후 상품 소비와 상품 시장의 문화적, 경제적, 상징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상품의 이동이 어떻게 유행(fashion), 사치규제법, 문화적 터부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규제되는지 분석한 아파듀라이(Appadurai, 1986)는 선물 경제의 논의를 자본주의 경제에 더 확장시켜 상품의 교환 자체가 상품의 가치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품의 이동은 사회적으로 의미화되고 규제되기도 한다. 최근 이러한 상품의 이동성이 1960년대 이후 질적, 양적으로 강화되고 증가되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 더 빨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탈영토적 순환을 위해 등장한 로지스틱스의 분석은 지구적 규모로 자본주의적 생산과 유통의 지리를 개조한 시공간 압축 과정의 결정적 구조(데보라 코웬, 2017[2014])로 주목받고 있다. 로지스틱스 공간의 "홈없는 seamless" 항로와 관문, 컨테이너의 규격화, 관련 노동자들의 신체와 움직임에 대한 폭력적 관리, 로지스틱스 도시내에서의 빠른 상품 순환을 위한 군사적·식민적 유통 구조의 분석은 상품의 모빌리티가 국가 경계를 넘어 탈영토화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러한 논의는 앞에서 언급한 생기적 유물론 등과 객체지향 존재론과 같은 신유물론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질 만큼 사물의 이동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사물의 미시적 차원에 주목하고 인간의 독단적 존엄성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는 반면, 데보라 코웬의 연구는 상품으로서의 사물들이 자본주의의 이동 경로를 따라 매끄럽게 이동하기 위해 오히려 인간의 신체와 이동을 제한하는 점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갈라진다.

존스와 공저자들은 존 어리와 같은 모빌리티 연구를 오래 수행한 학자들이 여전히 물리적, 육체적 이동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지식과 개념의 이동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음을 강조(Jöns et al., 2017)한다. 여기서 지식(knowledge)은 사회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으로서의 문서, 청사진,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 이는 개인적 지식이 아니라 타인과 소통되며 단순한 정보 이상으로 시간을 두고 축적되어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ibid., 5)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의 성격은 공간적 집중도와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비밀스

럽고 중요한 지식일수록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습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수준의 지식은 공간적으로도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가령, 은밀하게 전수되어 내려오는 특수한 지식이나 대학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 등은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지식보다는 이를 전파하고 수용하는 이들의 공간적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별 주체를 이동시킨다. 글로벌 도시의 엑스팻(expats)이라 불리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통한 기업 지식의 이동, 선진국을 향한 유학생들이나 과거 식민지배 국가로 이동하는 대학 시스템을 통한 교육 내용의 이동성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역이나 영토성에 기반하여 그 자체가 이동할 수 없는 대상과 관련된 지식 역시 이간의 이동을 추동시킨다. 지식의 전파자와 수용자의 이해, 학습, 전수 능력 등도 지식이나 사상의 이동성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의 흐름은 공간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도 단순한 정보의 흐름과 수용은 인터넷 시대에 자본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완벽한 거리의 소멸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면대면 만남이 매개되어야 하는 중요한 지식과 사상의 이동은 인간의 신체와 이들의 회집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적 요소가 필수적이다. 가령 스위스에 근대 국민국가들의 연합인 the Leagues of Nations가 들어서면서 스위스에는 인도주의적, 평화주의적, 비정부조직의 공간적 클러스터가 조직되었고 세계적으로 제3세계 외교 전문가들(subaltern diplomats)과 활동가들의 컨택존(contact zones)이 형성되었다. 신체의 교류를 수반한 지식의 흐름은 지식 거점의 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지식 전파 역시 중요한데 독일, 영국, 미국 등 3개 국가로 향하는 나이지리아 대학 졸업생들의 초국적 이주 경험을 분석한 멜라니 음바(Melanie Mbha)는 교육과 이주 그리고 사회적 통합의 세 가지 연결고리에 주목한다. 음바는 이주를 초기 형태의 유목민, 영국의 식민지 정책, 전후 중등학교 졸업생의 과잉과 관련된 나이지리아 문화의 오랜 특징으로 파악하고 지식에 대한 욕구가 이주와 이후 수용 사회로의 사회적 동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자극제로 보았다(Mbah, 2017). 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일본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 제국의 중심으로 향했던 조선 유학생들의 다양한 이동성, 그리고 그들이 체득하여 이동시킨 지식이 어떻게 조국 근대화의 물질화로 나아가게 된 사례와 유사하다. 중요한 지식의

흐름은 식민지배 기간 그리고 탈식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한 정보보다는 지속적이며 가치 있는 지식의 흐름은 역사적으로 수용사회와 송출사회 간의 반복적인 흐름을 통해 순환하면서 새로운 지위나 정체성의 획득, 근대성의 물질화 등으로 발현되었다.

비인간적 존재로서 사물, 지식, 개념 등의 이동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혹은 새로운 이동성의 발현에 대해서 여기서 모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만, 기존에 모빌리티의 프레임 내에서 사고되지 않았던 현상들이 점차 모빌리티 담론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그 일방적인 문화의 전파와 수용이 아닌 다양한 방향성과 운동의 강도와 속도를 가진 여러 형태의 이동성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일상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4. 이주의 모빌리티

이주의 전지구화, 가속화, 차별화 (노동이주, 난민이주, 영주 이주 등 여러 유형의 이주가 동시 발생), 이주의 여성화, 정치화(Castles et al., 2014) 등이 발생시키는 새로운 문제들은 전지구적 거버넌스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 국민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 절대적 환대의 가능성, 시민권의 재정의 필요성, 9.11 테러 이후 전세계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의 후퇴와 문화적 동화에 대한 요구 등으로 이어진다. 이제 이주는 전 지구적 변화를 이끄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이주자의 경제적 송금은 단순한 자본의 이동이 아니라 이주의 흐름과 반대의 '조용한 역류'(이주의 시대)로서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 GDP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송금의 규모가 큰 사회에 새로운 문화적 경관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소비수요와 고용을 창출하기도 하며, 사회적 송금(Levitt 1995)으로서 이민 수용 사회에서 송출국 사회로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체성, 사회적 행위를 형성하게 하는 사회자본이 되기도 한다.

19세기 중반 이후 시작되어 2차 세계 대전 이후 대량 이주의 시기가 본격화되고 현재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각 국가들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통

제력에 의심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장벽을 설치하고 이주의 차별화를 통해 사람들의 충성심을 확보하려 한다. 그러나 개인들은 정치적 불안정성, 내전의 확산, 인구 압력, 급격한 기후 변동, 종족 갈등, 고용기회 부족에 따른 더 나은 경제적 기회의 모색, 새로운 교육 기회의 탐색, 문화적 상상력의 욕망 충족 등 다양한 이유에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이주를 선택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증가한 초국가적 이주(transnational migration)의 증가는 국민 국가의 정체성이 더 이상 영토적 구분에 의해 쉽게 구분되지 못하고 국경의 경계들마저 프랙탈적으로 이동한다. 국경은 더 이상 고정적이지 않으며 퍼포먼스 즉, 개인의 행위들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은 계절 노동자, 유연한 시민권(flexible citizenship)을 가진 이주민들, 더 이상 수용국가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고 "영구적인 일시성(permanent temporariness)"(Stevens, 2019)에 기반하여 끊임없이 이동하는 이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작용은 미국의 9.11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주로 이민과 난민의 흐름이 향하는 국가들이 인권과 안보의 두 축 중에 국가의 안보를 강조하면서 이주의 문제를 안보문제화(securitization)하기 시작하면서 이주는 급격히 안보의 문제로 이행되기 시작한다. 안보문제화는 실제 위협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대상이나 사안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주 수용사회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민자, 난민, 외국인, 소수자 등을 위협적 존재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능해진다(Waever, 1995). 이주의 문제가 안보문제화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과거 그들의 장기적 식민통치가 초래한 원주민의 강제 이주와 학살이라는 과거와 맞닿아 있다. 탈식민 이후 발생한 역이주에서 다시이주자들은 빈곤, 폭력, 인권의 부재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 프랑스 내 알제리 이민자들, 미국 내 아랍계 이민자들, 독일 내의 쿠르드족 터키인들, 유럽 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과 이민자들은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도시들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이후 핵심적인 안보 위협 대상으로 분류되어 감시의 대상이 되고 이주 이후에도 경찰과의 대치, 실업문제, 교외에서 방치되는 등 이주민의 이동성은 정착 이후에 오히려 경제적, 문화적으로 제한되거나 규제되고 있다(Castles et al., 2014).

한국에서도 현실에서 이주민에 의한 위협의 정도가 매우 미미한 가운데, 혹은 오

히려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이주민의 존재가 긴급히 요청되는 가운데에서도 이주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에서 사회적 위협으로서의 난민과 망명자에 대한 논의가 지난 몇 년 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2018년 전쟁을 피해 온 예멘인들의 제주도를 통한 입국을 둘러싸고 촉발되었다. 이미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인과 근본주의 기독교의 신인종주의 그리고 일부 청년과 여성들의 각각 일자리와 성범죄에 대한 잠재적 불안이 '감정적으로 연합'(김현미 2018)하여 이들을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치안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난민의 모빌리티에 대해서 기존의 절대적 환대를 둘러싼 논의들, 국제적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주의적 상상"을 넘어서는 탈국가적 윤리(Ethics of post-soverignty)(이병하 2017)에의 적극적인 논의와 새로운 상상이 요구된다. 이렇게 이주는 모빌리티의 형태 중에서도 거주와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두고 공존하며, 시민권, 환대의 문제, 문화적 동화와 차별, 가족 이주를 둘러싼 정동의 문제 등 모빌리티 이론에서 지속적으로 고찰해야 할 문제들이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이주의 이동성은 가장 첨예하게 정치적이자 윤리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Ⅳ. 이주 모빌리티의 윤리적 질문

앞에서 살펴본 모빌리티 턴을 전후로 등장한 각 논의들은 이제 모빌리티라는 주요 개념어 아래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로 분류되고 구분지어 지고 있다. 이는 주요 연구분야로서 모빌리티학(mobility scholarship)을 확립하려는 의도 하에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미미 쉘러는 이러한 기획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시에서의 이동처럼 반복적이고 단순한 걷기에서부터 초국가적 이주의 흐름처럼 정체성과 정주의 물음으로까지 나아가는 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동성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 성찰해야 할 지점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에 있을 것이다.

우선 모빌리티 담론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이동의 윤리적[5] 측면에 대한 성찰

가능성이다. 2000년대 초반 이미 홍콩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사스감염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에서도 세계 정부들은 더 이상 질병이 후진국의 미개한 누군가의 열악한 위생 관념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도시의 중심에서 하이퍼모빌리티를 지닌 이들과 함께 이동 혹은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항공 여행은 엄격히 규제되기 시작했고 크루즈쉽의 거대한 여행선은 바다 한 가운데 마치 난민선처럼 고립되었다. 여행이라는 모빌리티는 필수적이지 않은 '잉여'의 이동으로서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적 행위로서 강하게 비난받았다. 여행에 대한 윤리적 잣대는 앞에서 언급했듯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서구인들의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과거 식민지배 국가로의 여행이 가진 착취적인 식민경제적 성격의 관광은 미미셸러가 경제적 상위 계층의 글로벌 엘리트들이 팬데믹 시기에 보여준 "panic feeling" (Sheller 2021: 60)과의 연장선상에서 윤리적으로 비판받고 있다. 감염의 위험을 피해 대도시를 떠나 자신들의 요새와 같은 별장으로 여행과 구분되지 않을 피난을 가면서도 지역 노동자들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지역의 음식이나 의료 자원 등을 요구하면서 타인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이들의 모빌리티에 대한 윤리적 잣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이주 연구에서 주목해 온 환대의 문제, 칸트의 세계시민적 권리, 이방인을 둘러싼 주체와 타자 중심의 문제에 대해 모빌리티 논의는 어떠한 윤리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앞에서 살펴보았듯, 생기론 유물론이나 객체지향적 존재론의 경우 주체와 객체의 구분은 거의 무의미하며 행위소라는 지점은 일견 해방적 시점을 제시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절대적 환대가 불가능한 그 똑같은 이유로 현실정치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수많은 이주민과 난민의 모빌리티는 이동성 중심의 철학적 논의에서 형태적으로는 잘 설명될 수 있겠지만 특정 모빌리티의 역사적, 사회적, 지리적 맥락이 쉽게 지워질 경우 이는 그저 '편평한(flat)' 여러 모빌리티

5) 도덕이라는 말이 좀 더 전통적이고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느낌을 준다면, 윤리라는 말은 도덕에 비해 주관적이며 상대적이며 근대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서구적 어원에 따르면 도덕(morality)은 라틴어 mores에 어원을 두고 있고, 윤리(ethics)은 희랍어 ethos에 어원을 두고 있다. 두 어원 모두 풍속이나 관습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관습적인 질서나 그것을 지키는 일로 파악하면 된다. 그러나 기존의 정립되어 있던 규범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부정되는 근대에 있어서 상대적 의미의 윤리는 생명 윤리, 경제 윤리, 정치 윤리, 생태 윤리 등에서와 같이 윤리라는 말 자체가 상대적인 속성을 갖게 되었다 (서영채 2013: 198). 따라서 여기서는 '도덕적'이라는 표현보다 '윤리적'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회적으로 지켜져야 할 규범이나 가치 등을 언급하려고 한다.

중에 하나일 수 밖에 없다. 130여년의 프랑스 식민통치에 대한 기억 없이 1995년 파리 지역의 연쇄 폭발 테러는 이해될 수 없고 스페인의 필리핀 식민 지배에 대한 이해 없이 21세기 스페인의 필리핀 가사노동자의 초국가적 이동을 이해할 수 없다. 모빌리티 담론은 이주의 이동성이 복잡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잘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공간적 스케일이 중요하기보다 복잡한 이주의 모빌리티가 보여주는 초국가적 성격은 흔히 모빌리티 담론의 중요성을 설득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주의 경로 그 물리적 복합성에 대한 설명력 자체는 이러한 초국가적 이주가 야기하는 질적인 문제에 대한 윤리적 대답을 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동의 경로와 주요 노드를 따라 흐르는 상품, 지식, 사람 등의 흐름에 대한 지나친 낭만화 혹은 기계적 모델화는 이 모든 이동의 형태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윤리적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이동의 문제는 이동성 못지않게 정주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러 이동 형태들의 구분보다는 이형의 이동을 가로지르는 이동과 정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 더 긴박할 수도 있다. 모빌리티 턴에 의해 인류의 기본적인 모드가 정주가 아닌 이동이라면, 모든 것이 이동 중이고 언제나 이동 중 이라면 정주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앞에서도 보았지만 다양한 이동성 간의 경계는 여행과 이주 간의 관계처럼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 여행을 시작으로 혹은 가장한 이동이 이주민 혹은 난민의 이동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여행과 이주 노동자들의 경로 그리고 난민의 경로는 공항이나 해변 도심에서 겹쳐지기도 한다. 물론 그 이동의 강도와 목적 및 내용은 어느 시점에서 상이하게 달라지거나 결코 쉽게 겹쳐지지 않기도 하다. 스스로 자신의 이동성을 정주성으로 인식하거나 정주하기 위해 이동하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정주의 의미가 중요하다.

문화인류자인 제임스 클리포드(James Clifford)의 논의는 이 지점에서 유용할 수 있겠다. 그의 책 Routes(1997)의 시작은 영국에서 교육받은 인도인 인류학자의 이집트에서의 현장연구에서 마주하게 된 우화 같은 일화로 시작한다. 이집트의 한 마을에 도착한 인도인 인류학자는 자신의 메트로폴리탄적 배경과 대비되는 '전통적인' 고즈넉한 주민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마을의 모든 남성들은 비행기를 통해 누구보다 바쁘게 이동 중이거나 이동의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유일하게 그

마을을 한번도 떠나본 적 없는 노인에게서 시작한다. 자발적 정주를 선택한 그 노인의 정주는 이동하는 다른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후퇴하거나 마을에 고립된 존재라기보다 이동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저항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정주와 이동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실존적으로 정주를 통해 이동성에 대해 고찰하는 것, 혹은 이동성을 통해 정주에 대해 고찰하는 것의 필요성을 그는 정주 중의 이동(traveling-in-dwelling) 그리고 이동 중의 정주(dwelling-in-traveling)[6](1997: 36)으로 표현했다. 인류학자로서 그는 1990년대부터 학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여행하는 문화(Traveling Cultures)"에서 위기에 빠진 인류학과 초국가적 문화연구 사이에서 지역에 기반한 문화를 상정하고 그 지역에 잘 정주한 인류학의 에스노그라피적 현장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정주와 이동 간의 이분법을 해체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이동을 여행(travel)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이동과 조우로서의 인류학의 필드웍을 강조하며 전체 이동의 경로를 지도로 그려내는 것보다는 경로(paths)에 주목하기 위해 여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여행으로 표현된 인류학자의 이동은 자신의 목적을 좇아 자발적으로 집을 떠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20세기 인류학의 시작이 유럽의 식민지배에 합류하여 물질적, 정신적, 과학적 목적을 위해 공간적으로 이동함으로써 가능했고 지배적으로 서구, 남성, 지식인 혹은 상위계층의 전유물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인류학자의 통과의례와 같은 필드웍(fieldwork)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연구 대상을 하나의 정체된 문화적 구성체로 파악하고 그 고정된 지역에서 얼마나 잘 머무는가(dwelling)로 결정된다. 따라서 자신의 연구대상인 필드를 단일한 문화의 담지자로 혼동하고 있으며 연구자 그 지역의 언어와 관습 등을 잘 배우는 정주에 기반한 필드워크 이후 이를 담론적으로 구성해내는 담론적 실천의 완결로 이해되어 왔다(22). 여기서 잘 정주하는 것은 통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말하고 듣기 위한 '진실된' 소통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 지역의 문화가 그 언어와 등치된다는 오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필드에서 수행하게 되는 에스노그라피는 그래서

6) 제임스 클리포드는 이동, 움직임, 혹은 모빌리티 대신 여행(trave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동을 의미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여행이라는 것이 젠더/인종/계급 차이에 의해 그 자율성이 제한되어 왔던 점을 상기시키기 중립적인 이동의 의미보다는 이미 여러 사회적 의미로 오염(taintedenss)된, 이동성의 정치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이동의 과정과 경로를 드러내기 위해 '여행'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이동을 대신하고 있다.

여행보다는 잘 머무는 것에 특권을 부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행하는 신체로서의 인류학자의 이동은 지워지거나 무시되었다.

탈식민 시대에 그러나 인류학자가 우월한 관찰자로서 지역과 지역에 고착된 '순수한' 문화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가정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인류학자의 전통적 의미의 현장연구 역시 그가 아무리 관찰 대상자의 언어를 학습하고 장기간 그들의 장소에 머문다고 획득되지 않는다. 더 이상 지역에 고정되어 변화하지 않는 고유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가정, 긴 시간 동안 잘 거주(dwelling)함으로써 그 가정된 문화에 대한 전체적이며 완결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그 문화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확보된다는 가정 모두가 허물어지고 있다. 관찰 대상과 문화 역시 관찰자만큼 이동 중이기 때문이다. 관찰자와 그 대상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재협상되는 것이며 기록의 주체 역시 점점 더 관찰자로서의 인류학자가 아닌 관찰대상에게로 옮겨지고 있다. 이제 어떤 근원(roots)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동의 경로(routes)를 연구하는 것이며 이는 그 경로에는 이동과 정주 간의 복합적인 관계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인류학자의 잘 머물기를 도와주는 정보제공자인 인포먼트(informants)는 단순히 그 지역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들도 이동하며 복잡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여기서 여행의 비유를 통해 모두가 여행가라거나 이동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주와 이동 간의 역동적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한 점이다. 모빌리티의 담론 역시 이동을 강조하면서도 다양한 이동성이 어떤 다른 방식의 정주를 재정의하는데 관여하는지, 이동-정주 간의 끊임없는 재협상과 상호정의의 관계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발표 2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유입과 광주 '고려인 마을' 공동체의 확장

고 가 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목 차〉

Ⅰ. 머리말
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난민 발생 현황
Ⅲ.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과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환대
Ⅳ. 맺음말

Ⅰ. 머리말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표기)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외 전문가들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었고, 전쟁 발생 직후에는 단기간에 종식될 전쟁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그 누구도 종전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패권과 그것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가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수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왔으며, 이제 연구 논문들과 연구서들도 출간되고 있다.

신범식을 비롯한 국제정치학자들은 이 전쟁을 미·러 간의 국제질서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전쟁의 대리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국민국가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의 내전이라는 '삼중전쟁'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1] 이에 더하여 홍완석은 '가치 전쟁'의 차원을 포함시키기도 한다.[2]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치전쟁임을 보여주고 있는 저서로는, 이 전쟁이 합리적 담론의 영역을 오래전에 벗어났으며, 정치적 노선과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의 이해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내러티브 전쟁이라고 규정한 이해영의 연구서가 있다.[3] 이 책에서는 노엄 촘스키와 에티엔 발리바르, 슬라보예 지젝 등 현대의 좌파 지식인들 사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논쟁과 서구 시민사회의 반향 등을 소개하면서 전쟁의 성격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규명하고 있다.[4]

역사학에서는 도대체 이 전쟁이 왜 발생했는가? 그 원인과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두 나라의 주류 민족은 동 슬라브인이라는 민족적 근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동일한 종교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갈등과 분쟁의 배경들을 분석하기도 한다.[5] 전쟁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또 하나의 견해는, '전쟁을 다

---

1) 삼중 전쟁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좀 더 규명해보자면,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서방, 특히 러시아와 미국 간의 전쟁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둘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즉 국민국가 대 국민국가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뿌리 깊은 민족주의, 정체성 그리고 역사와 관련된 전쟁이라는 점이다. 셋째,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내부의 이질적인 정체성을 둘러싼 투쟁의 전쟁이기도 하다. 신범식「삼중전쟁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질서의 변화』(서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2), 8-24쪽.

2) 이러한 세 가지 측면(대리전, 전면전, 내전)의 성격에 '가치 전쟁(민주주의vs권위주의)'의 요소를 포함하여 4개의 층위를 설명하기도 한다. 홍완석,「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동학, 함의」,『슬라브연구』제38권 3호(2022)

3) 이해영,『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 질서』(서울: 사계절, 2023).

4) 노암 촘스키는 이 전쟁의 배경에서의 미국의 잘못을 명백하게 밝히며, 서방의 선택적 분노를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책으로 1. 우크라이나를 중립화하기, 2. 더 이상 크림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3. 연방제 협정을 통해 돈바스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되, 국제적 레퍼렌덤(referendum 국민투표)로 해결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에티엔 발리바르는 촘스키가 푸틴에 대해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며, 경제 제재가 러시아인의 과도한 반발을 초래해서도 안된다고 한 것은 틀렸다고 명백하게 지적하면서, 푸틴을 물러서게 하려면 강력한 타격이 필요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발리바르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민중이 푸틴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러시아 침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정당한 전쟁'이며, 이 전쟁에 정당성을 승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전해야 한다고 보았다. 슬라보예 지젝 역시『가디언』기고문에서 만약 좌파라면, 우크라이나 편에 서라고 촉구하면서, 더 강한 나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책, 16-22쪽.

5) 구자정,『우크라이나 문제의 기원을 찾아서』(서울: 박영사, 2023)

시 생각한다'라는 특별좌담에서 포스트콜로니얼 학자인 폴 길로이가 쓴 '포스트콜로니얼 멜랑콜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임지현의 분석이다. 그는 식민지를 상실한 구 제국들이 제국주의 시기에 대한 어떤 향수나 우울감과 유사한 감정에서 기인한 공격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현재 러시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6] 이에 덧붙여서 임지현은 나토 동진에 대한 국가 안보적인 관점에서의 위기의식도 당연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배경이 될 수 있지만, 스스로를 제국으로 여기고 있는 러시아를 미국이나 서유럽이 주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분노, 즉 '서발턴 제국(Subaltern empire)'으로서의 집단심성을 배경으로 주목하기도 한다. 여론조사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80%가 넘는 러시아 사람들이 전쟁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도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서발턴 제국'의 주민으로서 더 강한 제국에 대한 러시아 사람들의 소외감과,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영토를 상실한 것 등의 복잡한 심성들이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7] 이외에도 이 전쟁의 전투과정 자체[8]와 이 전쟁이 각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도 다루고 있다.[9] 특히 전쟁이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들을 다룬 학술논문들도 있다.[10]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인, 전개 과정,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쟁의 다양한 측면들 중, 전쟁 난민들을 다루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한국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주민 공동체인 사단법인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와 우크라이나 난민들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

---

6) 김현섭, 신범식, 임지현, 「특별좌담. 전쟁을 다시 생각한다」, 『철학과 현실』 133(2022), 23-24쪽.
7) 같은글, 23-24쪽.
8) 김규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작전 분석」, 『전략연구』 Vol.29 No.2(2022); 김규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정보전 활동」, 『슬라브연구』 Vol.38 No.4(2022); 두진호, 「우크라이나 사태 전훈 분석: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사적 담론」, 『국방정책연구』 Vol.38 No.4(2023).
9) 제성훈 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의 변화』 (서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2023)
10) 김영식, 김병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의 무기화 전략」, 『러시아연구』 제32권 제2호(2022); 성진석,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여파: 에너지 수급 안보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32권 제2호(2022); 정선미, 「에너지로 본 우크라이나 전쟁과 변화: 공공제론적 패권안정론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32권 제2호(2022); C. Kuzemko et al. "Russia's war on Ukraine, European energy policy responses &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transformation",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93(2022)

로 인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이다.[11]

유엔난민기구의 최고대표보인 질리언 트릭스(Gillian Triggs)에 의하면,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난민기구에서는 내부적으로 난민 대책을 수립했고, 이 대책은 플랜 A,B,C,D로 준비되었다. 담당자들의 다수는 대체로 플랜 A를 예상했다. 플랜 A는 난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플랜 B는 수십만 명 정도로 예상했으며, 플랜 D가 400만 명 정도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의 수는 예상을 훨씬 능가했다.[12] 이러한 난민들의 상황과 이를 수용하는 공동체를 통해 이 전쟁의 양상을 좀 더 다층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에 대한 연구로는 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난민들과 코비드-19 확산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13]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에 유입되었던 중동, 아프리카(MENA) 지역의 난민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의 차이점을 분석한 글들이 있다. 유럽의 언론, 특히 폴란드 언론에서 백인, 유럽인, 주로 기독교인이어서 문화적 친연성을 갖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메나 지역 난민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전혀 다른 언론의 태도를 분석한 글이 있다. 이 글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전통적으로 서유럽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러시아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이들 난민들에 대해 더 우호적이라는 견해도 표명하고 있다.[14]

---

11) 오늘날 난민은 광의의 의미로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협의의 의미, 즉 전쟁으로 인한 난민, 그중에서도 고려인 난민, 특히 광주 지역으로 유입된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12) 질리언 트릭스, 「난민의 국내정착과 보호 확대: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 2023 난민포럼 기조발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2023.4.28.)

13) Matthew Hodes, "Thinking about young refugees' mental health following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n 2022",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8-1(2023), pp. 3-14; Arash Javanbakht, "Addressing war trauma in Ukrainian refugees before it is too late",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13(2022); Wei Bai, Hong Cai, Yi Zheng and Ling Zha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addressing mental health crisis among child and adolescent refugees during the Russia-Ukraine war", *Asian Journal of Psychiatry* 72(2022); Zhaohui Su, Dean McDonnell, Ali Cheshmehzangi, Junaid Ahmad, Sabina ˇSegalo, Claudimar Pereira da Veiga, Yu-Tao Xiang, "Public health crises and Ukrainian refugees", *Brain Behavior and Immunity,* 103(2022), pp. 243-245.

14) 이를 위해 저자는 320개의 뉴스 기사를 분석했다. Natalia Zawadzka-Paluektau, "Ukrainian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현재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대부분 고려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예멘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구별되는 특성들이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대거 유입된 광주고려인마을은 매우 성공한 이주민 공동체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언론과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15] 그러나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난민을 환대하는 지역으로서의 광주 고려인마을에 대한 조망은 언론 기사들을 제외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이 글에서는 난민 유입과 지역 기반의 이주민 공동체의 관계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국내외 언론 기사 분석, 관련 기관인 법무부 및 지방자치체 발간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였다. 또한 광주 고려인마을 거주민과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생산된 구술자료를 활용하였다.[16] 광주 고려인마을 현지조사는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었다.[17] 심층인터뷰는 고려인지원센터 공동 대표 2인(고려인 1인, 선주민 1인), 우크라이나 난민 12명, 이들을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이주민 고려인 1인(올드커머), 고려인 4명, 광산구청 외국인

---

refugees in Polish press", *Discourse & Communication,* 17-1(2023), pp. 96-111.

15) 광주 고려인마을 관련 연구로는 김영술, 홍인화,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광주지역 이주와 문화변용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제7권, 제1호 (2013); 임영상, 정막래, "한국 속의 러시아, 고려인 마을을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52(2016); 김경학, 「국제이주 과정에서 아동의 정착 경험: 광주광역시 고려인 아동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30권 제2호(2018); 정막래, 주동완, "광주 고려인마을의 발전을 위한 위키백과 구축 연구", 『슬라브학보』 32-33 (2017); 정막래, 「광주 고려인마을 콘텐츠 연구: 〈나눔방송〉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 논문(2017.8); 윤승중 외, 『광주 고려인마을 사람들』 (광주: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2019); 이형하, 권충훈, "광주고려인마을 나눔방송의 주요 핵심어 변화 탐색",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 27, No.2(2019);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 엮음, 『광주 이주민의 삶과 문화』.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 총서 2 (광주: 도서출판루치카, 2021); 정종민, 김경학, 강영신, 김수정, 선봉규, 김나경, 팬데믹 상황에서의 광주 이주배경 고려인 아동의 정동적 연결성, 다문화와 평화 제16집 2호(2022) 등이 있다.

16) 구술자료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회상을 통해 현재로 불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신빙성'의 문제가 늘 대두되지만, 구술사 방법론은 개인을 통해 사회와 구조를 바라보는 연구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구조적인 문제와는 어떻게 상호연관 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17) 현지조사는 1차: 2021년 6월 24일~25일, 2차: 2021년 7월 13일, 3차: 2021년 8월 20일~22일, 4차: 2021년 10월 8일~10일, 5차: 2021년 12월 10~11일, 6차: 2022년 7월 23일~26일, 7차: 2022년 8월 13일~16일, 8차: 2023년 10월 15일~16일, 9차: 2023년 2월 20~21일, 10차: 2023년 4월 6일~8일에 진행되었다.

주민과 공무원 2인, 고려인마을 핵심 활동가인 선주민 4인, SBS 기자 2인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국으로 유입된 고려인 전쟁 난민들과 이들의 유입으로 인한 이주민 공동체의 확장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난민 발생 현황

1. 전쟁과 난민 발생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전쟁 첫날부터 수도 키이우, 서부 르비우, 동부 하르키우, 남부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전역의 대도시에 폭격이 행해졌다. 러시아는 이 명백한 침략전쟁을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명명해 왔다.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해 온,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받아온 러시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것이 러시아가 내세운 명분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명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2022년 봄부터 러시아 전역에서 개최되었던 사진전 "언제나 엄마가 있기를, 언제나 내가 있기를 (...Пусть всегда будет мама, Пусть всегда буду я!)"이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이르쿠츠크 등 대도시의 도심 거리에서 개최된 이 사진전에 게시된 사진은 2017년 돈바스 지역에 수개월 동안 체류했던 종군 기자 이리나 라쉬케비치(Ирина Лашкевич)와 다니일 보그단(Даниил Богдан)이 동부지역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찍어온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폭격에 의해 부숴진 유치원과 건물의 잔해 속에 나뒹구는 인형, 공포 속에서 공허해진 눈빛을 가진 아이들을 클로즈업한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2022년 러시아 정부가 벌인 전쟁의 당위성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18]

18) Юлия Сталина, "В Петербурге открылась уличная выставка с историями детей из Донбасса. Над экспозицией работали военные корреспонденты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27 марта 2022) https://www.spb.kp.ru/online/news/4681555/; https://mos.news/news/sankt_peterburg/pust_vsegda_budet_mama_pust_vsegda_budu_ya_deti_donbas

그러나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2022년 9월 21일에 러시아 정부가 30만 명을 징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내림으로서 깨어졌다. '특별 군사 작전'에 동원령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명분상으로도 스스로조차 부정할 수 없는 전쟁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쟁의 원인이 독일 통일 당시 고르바초프에게 나토는 1mm도 동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 때문이든,[19]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재편하고자 한 러시아의 열망이었든, 우크라이나 내부의 동·서 갈등이든, 전쟁으로 고통받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의 2023년 4월 23일 발표에 의하면, 현재까지 민간인 사상자는 23,015(사망자: 8,574, 부상자 14,441)명에 달한다.[20]

전쟁의 참상 속에서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 난민이 되어 국경을 넘고 있으며, 이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3월 8일에 약 200만 명이었던 난민이, 3월 12일에 약 250만 명, 3월 15일에 300만 명으로 증가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폴란드에 도착한 전쟁 난민들도 약 370만 명에 이르렀다.[21]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유엔난민기구의 2023년 4월 20일자 자료에 의하면, 유럽 내 우크라이나 난민은 8,172,189명이며, 우크라이나 내 실향민

---

sa_v_tsentre_sankt_peterburga/ (상트페테르부르크) "Фото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ная детям Донбасса, открылась в Иркутске", Иркутск Сегодня (2022.05.12.). https://irk.today/2022/05/12/fotovystavka-posvyaschennaya-detyam-donbassa-otkrylas-v-irkutske/ (이르쿠츠크) Наталья Стрелцова, Василий Иванов, "Дети Донбасса: «Пусть всегда будет мама, Пусть всегда буду Я!» — фото", Regnum (14 марта 2022); https://regnum.ru/news/society/3531798.html (모스크바);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открылась фотовыставка, посвященная детям Донбасса", ЕАН (8 Мая 2022) https://eanews.ru/news/v-yekaterinburge-otkrylas-fotovystavka-posvyashchennaya-detyam-donbassa_08-05-2022 (예카테린부르크); Анастасия Долгополова, Любовь Зубкова, "«Пусть всегда будет мама…»", Ангарские Ведомости, http://xn--80aagchebveo1advbvqjs.xn--p1ai/news/v-svezhem-nomere/4851-pust-vsegda-budet-mama (안가르스크)

19) 푸틴 자신은 이 '특별군사작전'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이를 들고 있다.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1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statements%20/67828

20) 이중 도네스크와 루한스크 지역의 사상자는 9,526(사망자 3,963, 부상자 5,563)명이다. Ukraine: civilian casualty update 24 April 2023,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https://www.ohchr.org/en/news/2023/04/ukraine-civilian-casualty-update-24-april-2023

21) Natalia Zawadzka-Paluektau, "Ukrainian refugees in Polish press", *Discourse & Communication* Vol.17-1(2023), p. 97.

은 5,352,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22]

그런데 몇몇 학자들이 주목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비교할 때 인근 국가들의 수용 태도는 차이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폴란드이다. 시리아 난민 수용을 거부한 바 있는 폴란드는 현재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OECD 대표부의 2022년 5월 23일 보고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크라이나 난민들 중 성인의 80-90%가 여성이며, 그중 절반 정도는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주로 여성, 아이들로 구성된 난민들에게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18세-60세의 전투 가능한 남성들의 출국을 막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23]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인근 국가들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전면에 드러내 놓고 거론하지는 않지만, 인종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같이 난민들 중 타지에 가족이나 지인들이 있는 경우 그곳을 목적지로 정하지만, 타국에 연고가 없는 경우 많은 이들이 인근 국가들의 난민 수용소에 체류하고 있다. 주로 러시아에서 발간되는 인터넷 저널들에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불가리아, 독일 등지에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조망하고 있으며, 경제위기로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영국의 상황들을 소개하고 있다.[24]

유엔난민기구가 2022년 12월~2023년 1월 우크라이나 주변국의 우크라이나 난민 3,9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향후 3개월 이내에 우크라이나로 귀환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은 12%이며, 언젠가는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65%, 귀환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 사람이 18%, 귀환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5%로 나타나고 있다.[25]

---

22) file:///C:/Users/SNU-User/Downloads/2023%2004%2020%20Ukraine%20situation%20flash%20update%20No%2045.pdf
23) 18-60세 사이의 남성들 중 아이가 셋 미만인 사람이라는 조건도 부여되어 있다.
24) “Беженцы в Германии живут в школах(독일 학교에서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 https://aussiedlerbote.de/2022/11/bezhency-v-germanii-zhivut-v-shkolax/; “Украинские беженцы с трудом адаптируются в Германии(독일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https://aussiedlerbote.de/2022/10/ukrainskie-bezhency-s-trudom-adaptiruyutsya-v-germanii/; “Беженцы из Украины остались без жилья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영국에서 거주할 곳이 없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https://aussiedlerbote.de/2022/10/bezhency-iz-ukrainy-ostalis-bez-zhilya-v-velikobritanii/“Украинские беженцы в шоке от Болгарии(불가리아에서 충격받은 우크라이나 난민들)”, https://aussiedlerbote.de/2022/06/ukrainskie-bezhency-v-shoke-ot-bolgarii/

물론 내전이나 국민국가 사이의 전쟁으로도 난민이 발생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처럼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이유는 이 전쟁이 대리전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을 병합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의 대 러시아 경제 제재가 시행되었고, 이는 러시아 경제에만 타격을 준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우크라이나의 노동 가능 연령의 남성들이 대거 폴란드, 체코, 독일을 비롯한 유럽으로 노동이주를 떠났다.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 21일 대국민 TV 연설문에서 푸틴은 2019년 발표된 국제기구의 발표를 인용하여,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는 6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26] 이처럼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상당수가 국외로 노동이주를 감행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던 고려인들 중에서도 대도시의 주류 사회로의 진입에 성공했던 이들은 다수가 우크라이나인들의 이주의 흐름 속에서 유럽으로 노동이주를 감행했고, 농촌 지역에서 농사짓던 젊은이들의 다수가 한국으로 들어왔다.[27]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이들의 가족들이 국경을 넘어 이들과 합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도 대규모 난민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2.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의 한국 유입

이처럼 대규모로 난민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고려인들 일부가 전쟁난민이 되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2023년 3월 26일에 배포된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쟁 이후 한국으로 유입된 우크라이나 고려인의 수는 약 1,2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28]

한국에서 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한국이 '난민지위에 관한

25) "A year of War in Ukraine", *With You* Vol. 48(2023 Spring) p. 7. https://www.unhcr.or.kr/unhcr/files/pdf/2023Q1_spring_withyou.pdf
26)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1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statements%20/67828
27)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고가영, 「접경지대 우크라이나의 국내·외적인 갈등 상황이 고려인 개인들의 삶에 미친 영향」. 『역사문화연구』 제71집(2019)을 참조할 것.
28)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법무부 보도자료』 (2023. 3. 26).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 난민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1992년부터였다. 이후 1993년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하여 난민 인정 규정이 마련되었다.[29]

그러나 난민 규정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난민 인정에 대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 한국에서는 난민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초로 난민을 인정한 것은 2001년이었으며, 26세의 이디오피아인 전도사 한 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30] 이후 2002년에 1명, 2003년에 12명, 2004년에는 18명을 인정했다. 점차 난민신청은 폭주했으나, 2015년까지 난민 인정율은 2%에 불과하며, 세계 난민협약국 평균인 38%보다 현저하게 낮은 비율이었다.[31] 2023년 3월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1994년 이후 2023년 말까지 난민신청자는 88,979명이며, 이 중 1,363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2,511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3,874명이 난민인정(보호)를 받고 있다.[32] 난민법 제정 이후 한국의 난민 인정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건)

구분 / 연도	심사완료[34]	난민인정(보호)					불인정[35]
		소 계	인 정	인도적체류	인정률	보호율	
총 계	**47,735**	**3,874**	**1,363**	**2,511**	**2.9%**	**8.1%**	**43,861**
1994~2015년	7,498	1,488	580	908	7.7%	19.8%	6,010
2016년	5,665	350	98	252	1.7%	6.2%	5,315
2017년	5,874	437	121	316	2.1%	7.4%	5,437
2018년	3,954	651	144	507	3.6%	16.5%	3,303
2019년	5,060	308	79	229	1.6%	6.1%	4,752
2020년	6,236	223	69	154	1.1%	3.6%	6,013
2021년	6,851	124	72	52	1.1%	1.8%	6,727
2022년	4,912	242	175	67	3.6%	4.9%	4,670
2023년 1~3월	**1,685**	**51**	**25**	**26**	**1.5%**	**3.0%**	**1,634**

<난민신청 심사결과> 출처: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23년 3월호 42쪽

29) 조영관, 「국내 보호 체류자격 및 처우 개선방향」, 『난민의 국내정착과 보호 확대: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 2023 난민포럼 발표집』 (2023.4.28.). 4-5쪽.
30) 이재호, 「줌머족을 아시나요」, 『한겨레 21 1264호』(2020.5.1.). 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7111.html
31) 옥영혜, 「한국의 난민정책 -재정착난민제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5), 191~192.
32)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23년 3월호, 3쪽.

현행 난민법(제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의 정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라고 규정되는 사람들이다.[33] 2023년 3월 기준으로 난민 신청사유는 종교(19,064), 정치적 의견(16,771명),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8,835명), 인종(4,443명), 국적(561명), 기타(3,585명)이다.[34]

2022년 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고려인들과 그 가족들인 우크라이나인들이다. 2014년 크림 병합 이전에는 고려인들이 이곳에 약 3만 명가량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전쟁 발발 당시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은 약 12,000명으로 집계되었고, 실제로는 약 2만 명 정도가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세기 후반 한반도를 떠나 연해주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중앙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주했던 고려인들이 이제 전쟁 난민이 되어 다시 한반도로 귀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함으로써,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2015년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대비 난민보호 수용력은 189개 국가 중 119위이다. 난민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킨 예멘 난민의 경우,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하다.

전쟁 난민이 된 우크라이나 고려인들도 주로 난민 비자보다 재외동포 취업 비자(H-2 혹은 F-4)를 발급받고 있다.[35]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할 경우, 정부는 난민협

33) 난민법 (시행 2016. 12. 2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9C%EB%AF%BC%EB%B2%95 국제적으로 난민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이 만들어진 것은 1951년이었으나, 시간적 지리적 한계가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난민의 범주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1967년 UN 총회 결의 2189호에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가 채택되었다. 알리야 바쓰타우바예바((ALIYA BASTAUBAYEVA) 독일과 영국의 난민보호정책 비교 연구: 난민인정 중심으로

34)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23년 3월호, 3쪽.

35) 방문취업 비자인 H-2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최초 입국 시 최대 3

약에 따른 난민 지원의 의무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들을 제도적으로 전쟁 난민이라기보다 취업을 위해 들어온 재외동포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난민 인정을 받는 것보다 재외동포 취업 비자를 받는 경우 체류기간이 훨씬 길어지고(원칙적으로 3년), 이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을 정부로부터 전혀 받을 수 없다 하더라고 체류의 안정성의 보장이라는 측면 때문에 대부분의 고려인들도 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36]

Ⅲ.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과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환대

2023년 3월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 사회에는 외국국적동포가 812,693명이 체류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체류외국인(2,335,596명)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37] 고려인은 약 105,321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38]

1. 고려인 이주사와 광주 고려인마을의 형성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귀환이주를 감행한 것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연해주에 거주하는 조선인-이주민에 대해서 1850년대 이 지역을 여행한 러시아 여

년 기간 부여 후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출국없이 추가로 1년 10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재외동포 비자인 F-4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연장 시마다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체류기간 만료전 연장신청을 통해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다. F-4비자로는 '단순노무 직업 41개와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중 국내 취업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직업 12개에 한해 취업활동이 제한을 받는다. 이외에도 재외동포 방문 비자인 C-3-8과 동포 영주 자격 비자인 F-5 비자가 있다.『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12~17쪽.

36) 박 빅토리아 인터뷰(1987), 2023년 8월 14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37) 국적별로는 중국이 630,461명으로 전체의 77.6%, 미국 46,488명(5.7%), 러시아 41,390명(5.1%)이다.

38) 이 숫자는 구소련지역 외국국적 동포 수를 합산한 것이다. 이는 2021년 4월 법무부 외국인출입국 통계자료에서 76,880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증가한 것이다.

(2023.3.31. 현재, 단위 : 명)

계	중 국	미 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카자흐스탄
812,693	630,461	46,488	41,390	35,493	18,016	20,345
	호 주	키르기즈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기 타
	5,083	3,816	3,472	426	379	7,324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별 한국 체류 현황>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3년 3월호 44쪽

행가들이 목격담을 남기기도 했지만, 러시아 극동문서보관서에 보존된 연해주 군무지사 카자케비치에게 보낸 동시베리아군 레자노프 중위의 보고서와 이주민 대표 최운보의 청원서와 같은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1863년에 13가구의 조선인-이주민이 연해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다.[39]

이후 스스로를 '고려사람'으로 불렀던 조선인-이주민들의 이주사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월경민으로서 살아가던 시기(1863~1937)로서 정치적·경제적인 원인으로 조선인-이주민들은 국경을 넘어 연해주에 정착했다.

둘째는 유형민의 시기(1937~1956)였다. 2차 대전의 전운이 감돌던 극동에서 조선인들을 '일본의 스파이'라는 구실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시킨 시점부터, 중앙아시아에서 유형민족으로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이다.

셋째는 소비에트 국민으로 인정받았던 시기(1956~1991)이다. 1953년 스탈린 사후 소련 사회의 해빙의 분위기와 탈스탈린 운동의 기조 속에서 당시 서기장이었던 흐루쇼프에 의해 1956년에 "특별이주자들의 법적 지위상 특별 거주에 따른 제한조치 해제에 관해서"라는 법령이 공표되어 스탈린 시기에 정해졌던 거주제한이 철폐되었다. 이때 고려인들은 신이주를 감행하여 거주지를 확대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고려인들의 이주는 세 방향으로 시행되었다. 첫 번째 방향은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

39) E.G. Ravenstein, The Russians on the Amur(London, 1861), p.231, 강주진, 한국과 소련(중앙출판인쇄주식회사, 1979), p.117에서 재인용; 반병률, "러시아 최초의 한인마을 地新墟", 『한국근현대사연구』, 26(2003), 226쪽; А.И. Петров.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60-90-е годы XIX века. (Владивосток : ДВО РАН, 2000), p. 85; Торопов, А.А., "Документы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ихв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к источник по изучению иммигр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на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их участия в антияпонском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м движение", 『한국사회사학회·러시아 극동역사문서보관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3.

소련의 대도시로 이주한 것이다. 이들은 대학교육을 마친 이후 소련의 주류사회로의 진입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 방향은 러시아 남부 지역과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으로 계절 노동인 고본지[40]를 떠난 것이다. 세 번째 흐름은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강제이주 이전 거주 지역인 연해주로 귀환한 것이다.

네 번째 시기는 독립국가들의 국민으로 살게 된 시기(1992-현재)이다.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된 이후 신생독립국가가 된 중앙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 강화정책과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고려인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으로 재이주했으며, 이에 더하여 역사적 고국인 한국으로의 귀환이주를 선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에서 고려인을 밀어내는 유출 요인은 신생 독립국가의 정부들이 국민국가 정체성을 확립(Nation-state building)하기 위해 자국어와 자민족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삼은 소수민족인 고려인들이 겪게된 어려움이었다. 한편 한국 내에서 고려인들의 유입을 끌어당긴 원인은 재외동포법의 제정이었다. IMF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야 했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6월 재외동포의 경제회생 동참 및 거주국 정착 유도, 애로사항 선별 수용을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안)' 입안을 시도했다. 이 법안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제2조 제2호)로 제한했다. 이 법안은 1998년 8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9월 2일에 제정·공포되었고, 12월 3일 시행되었다.[41]

---

40) 고려인의 고본질의 기원은 연해주 이주 초기 시기 북한 거주민들이 봄철에 두만강을 넘어 러시아 연해주에서 농사를 짓다가 가을이면 북한으로 돌아가는 계절노동으로 보기도 한다. 임영상,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북한, 그리고 다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고려인 김 레오니드의 살아온 이야기-」, 『역사문화연구』 제35집(2010).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주로 '고본지'라고 부르고,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고본질'이라고 부른다. 농업 분야에서의 토지 임차-경작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고본질은 10-20명 정도로 구성되며, 대표(브리가질)가 먼저 경작할 토지를 물색하여 계약을 한다. 고본질은 봄철에 집을 떠나 가을에 수확한 이후 되돌아 오는 고된 노동이지만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었기에 많은 고려인들이 고본질에 나섰다. 권희영, 『중앙아시아 초원의 유랑농업: 우즈베키스탄 고려사람의 고본지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p. 39; 이봄철, 「고려인 농업형태인 고본질의 변화와 시설농업의 전망」, 『전남대학교 세계 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7), p. 50; Герон Н. Ли, *Гобонди(고본지) Записки наблюдателя о любви корейцев к земле* (Бишкек, 2000).

41) 김봉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3369

그런데 이 법안의 문제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라'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 시기 한반도에서 이주했던 주로 조선족과 고려인들은 재외동포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일제의 강제징용·수탈을 피해 중국 만주로 이주했던 한인 2세로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중국 국적자 3인(조연섭·문현순·전미라)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1999년 8월 23일 법 제2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 29일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2004년 3월 5일 법 제2조 제2호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개정(법률 제7173호)되었다.[42]

이러한 재외동포법 제정으로 고려인들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후 2019년 고려인 4세대들도 동포로 인정됨으로써 가족단위의 이주도 가능해지자, 고려인들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국내로 유입된 고려인들은 안산시 땟골, 인천광역시 함박마을, 광주광역시 월곡동, 안성시 내리, 경주시 성건동 등에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에 형성된 고려인 집거지들 중에서 주목할만한 장소는 광주광역시 월곡동의 고려인 집거지이다. 이곳은 안산시 땟골마을, 인천시 연수구 함박마을과 함께 국내 3대 고려인 집거지 중 하나이다. 광산구 월곡 1동과 2동을 중심으로 약 7천여 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43] 사단법인을 설립한 광주의 고려인 집거지인 고려인마을은 응집력과 체계적인 마을 운영 면에서 매우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고려인 집거지가 공단 근처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과 달리 광주 고려인마을의 경우 이천영, 신조야 두 사람의 설립자들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물론 월곡동 역시 광주의 하남공단과 평동공단 인근이며, 광주시 외곽이어서 농촌으로의 접근성도 편리해, 공장과 농가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유리한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선주민 설립자인 이천영 교장은 여러 매체를 통해 잘

42) 같은 글.
43) 김명식, 「[광주고려인마을 우크라이나 난민보고서] 고려인 오자 역사는 깊어지고 미래는 밝아졌다」, 『남도일보』(2022.11.02.).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1489

알려진 바와 같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일어선 입지전적 인물이다. 1988년부터 전남여상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그는 1998년에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 노동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이때부터 그는 이주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광주전남 교사들로 구성된 교직자 선교회 회원들과 동료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광산구 하남공단에 창고를 임대해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를 개원했다. 이후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소, 인권상담소, 광산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공단교회, 한반도사랑교회, 외국인 노숙자쉼터, 무료급식소 등을 세웠다. 외국인 노숙자 쉼터에는 주로 아프리카인 노동자들이 많이 찾아왔다. 이들을 돕는 일을 20여 년 동안 지속했다.[44]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활동을 하던 중인 2002년에 이천영 교장은 현재 고려인 지원센터의 공동 대표인 고려인 신조야와 만나게 되었다. 신조야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딸을 만나기 위해 2001년에 입국한 후 전남 함평의 콘크리트 회사에서 일했다. 함평에서 임금 체불을 겪게 되었고, 광주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즈베키스탄 여성으로부터 전해 듣고 2002년에 광주에서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를 운영하던 이천영 대표를 찾았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고려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동행하게 됐다. 신조야 대표가 월곡동에 도착하던 2002년에는 카자흐스탄 남성과 결혼한 고려인 여성 한 명밖에 없었다.[45]

이천영과 신조야 대표의 만남은 고려인 이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일에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냈다. 이들은 2004년에 고려인 공동체를 구성하여, 2005년부터 상담소를 개소했고, 2009년 1월부터는 고려인 지원센터를 개설하였다. 이러한 고려인마을 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월곡동 고려인 집거지에는 고려인들의 한국에서의 삶을 지원하는 많은 기구들이 조직되었다. 그 기구들은 첫째는 생활지원, 둘째는 교육시설, 셋째는 홍보시설, 넷째는 문화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이후 새롭게 형성된 기구들이다.

---

44) 이천영 인터뷰, 2021년 6월 24일, 2021년 8월 21일, 22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고려인마을 교회, 방송국, 고려인 문화관); 고가영, 「왜 고려인마을에는 코로나 19가 없나: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 새날학교 설립자인 이천영 교장의 네 번의 운명적 만남」, 『한겨레 21』 1379호 (2021.09.03.).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78.html

45) 신조야 인터뷰, 2021년 6월 24일, 2021년 10월 9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1) 고려인 지원센터와 우크라이나 난민 정착지원

먼저 생활 지원 부분에서는 고려인 지원센터는 가방 하나만 들고 월곡동 지원센터로 찾아온 고려인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구해 주었다. 이 일은 지원센터 개관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찾아오는 고려인 이주민들을 받아주고 있는데, 이들이 첫 월급을 받게 되면 다음 사람들을 위해 숙소를 떠나는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이주민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고려인 노동자들 역시 빈번한 임금 체불 문제를 겪고 있다. 센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변호사, 노무사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법적인 문제들 과 관련하여 고려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46] 또한 코비드 19가 성행하던 시기 고려인을 포함한 이주 노동자들 백신 접종 및 위생관리를 위해 광산구청은 고려인마을 신조야, 이천영 대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47]

이러한 고려인마을 공동체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고려인마을은 폴란드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의 난민 수용소 등에서 도움을 요청한 고려인들의 국내 입국 항공권을 구입하여 보내고 있다. 사단법인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의 항공권 지원으로 국내 입국한 고려인은 2022년 12월에 875명이었다.[48] 광주 고려인마을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항공권을 보내게 된 계기는 고려인 가족 카페에서 낸 천만 원이 마중물이 되었다. 이처럼 고려인마을 공동체는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당 보증금 2백만 원, 두 달치 방세 80만원, 생계비 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매주 생필품들을 무상으로 나누어주기도 한다. 이 모든 비용은 모금을 통한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49]

또한 고려인마을 지원센터는 이주노동자들의 정착에 매우 시급한 문제인 의료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광주지역 의료진들과의 협업 속에서 지원센터는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의료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6개월이 지나야 의료보험 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 이전

46) 이천영, 신조야 인터뷰, 2021년 6월 24일, 2021년 8월 21일, 22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47) 김양숙, 박진 인터뷰, 2023년 4월 7일 (광산구청 외국인 주민과 사무실).
48)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https://www.koreancoop.com/sub.php?PID=0506
49) 이천영, 신조야, 박 빅토리야 인터뷰, 2022년 7월 23, 24, 25, 26일, 2022년 8월 14일, 16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에도 환자들이 생기고, 수술이 필요한 위급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고려인 지원센터는 월곡동 거주민에 한해 국적(민족), 병명, 액수 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의 병원비를 전액 지원해 왔다. 병원비는 월곡동에서 자리를 잡은 고려인 상인들만이 아니라 선주민 개인이나 단체들도 참여한 모금활동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50] 이처럼 고려인마을은 광주시민과 고려인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에서 광주 고려인마을로 들어온 난민들의 경우도 시급한 수술을 포함한 긴급한 의료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도착과 동시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안 엘레나의 어머니인 안 예프로시냐의 경우 22년 동안 허리가 아파서 고생했다. 협동농장 일을 처음으로 착수했던 김씨의 경우도 입국 당시 심각한 치질 상태여서 도착 즉시 수술을 받았다. 폭격으로 원래 약했던 청력이 더 손상된 안 엘레나의 딸의 경우는 고성능의 보청기를 고려인마을로부터 제공받기도 했다.[51]

2) 언론 홍보 인프라와 우크라이나 난민 청년들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기관 중 하나는 홍보 시설이다. 홍보 시설은 인터넷 신문 '나눔 방송'과 라디오 방송국 'GBS FM고려방송'이 있다. 라디오 방송국은 2016년 인터넷 마을 방송으로 개국하여 소규모로 운영되다가, 2021년 7월 정식 주파수를 가진 지상파 방송으로 허가를 받았다. 2022년 3월 1일 고려방송(FM93.5Mhz) 개국식을 갖고 러시아어 70%, 한국어 30%로 24시간 방송되는 정규방송이 되었다. 현재 가청지역은 광주시와 전남 일부이다. 이 방송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무연고이지만,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를 찾아오는 이들도 있다.

'GBS FM고려방송'은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 동포 자녀를 위한 방송교육을 시행하였다. 이 교육은 2022년 8월부터 5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3명의 방송 진행자를 배출했다. 이 중 최 빅토리아(20세)와 이 다리아(22세)는 고려방송 프로그램 중 '타임 오브 드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2022년 10월 6일 오후 4시에 첫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 진행자인 최 빅토리아는 "지난 4월 전쟁의 참화를 피해 폴란

50) 이천영 인터뷰, 2021년 8월 22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51) 박 빅토리아, 안 엘레나, 이천영 인터뷰, 2022년 7월 24일, 2023년 4월 7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드로 피신한 후 난민센터에 머물며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으나 고려인마을이 지원하는 항공권을 받아 가족과 함께 국내에 입국했으며, 광주에 정착할 수 있게 됐다"며 "광주 정착 후 고려방송이 전하는 방송을 들으며 많은 위로와 희망을 갖게 됐기에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며 국내외 거주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52]

이처럼 고려인마을의 기존 인프라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들의 초기 정착과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교육 인프라와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아동, 청소년들

고려인들의 한국 사회의 정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녀들을 위한 교육 문제이다. 광주 고려인마을에는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국내 유일의 학력인가 중고등학교인 '새날학교'가 있다. 새날학교는 2007년에 이주 노동자의 자녀 2명을 돌보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 동사무소내 광산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교실 2칸에서 시작한 새날 학교는 2009년에 폐교된 삼도남초등학교 장소로 이전하여 개교식을 가졌다.[53]

2011년 6월에는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 과정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로 인가되었으며, 고려인마을 자녀는 물론 국제결혼을 통해 입양된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했다.[54] 2021년 1월 졸업생 23명 중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13명 모두가 연세대학교, 외국어대학교, 한동대학교, 국민대학교,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대학교, 동신대학교 등에 입학했으며,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학교를 통해 광주 인근 산업단지 기업에 입사했다.[55] 2023년 4월 현재 재학생은 72명이고, 10명의 교사와 9명의 강사가 근무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생

52) 박 빅토리아, 「"아픔을 함께 이겨요" 우크라 탈출 고려인동포 자녀 고려방송 진행자로 나서」,『한국협동조합방송』(2022년 10월 11일). http://www.k-coop.com/board_view_info.php?idx=4690&seq=83

53) 폐교된 삼도남초교 총동문회장은 새날학교에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윤종채, 「박중석 삼도남초교 총동문회장, 새날학교에 장학금 전달」, 『남도일보』(2023.01.09.)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892

54) http://www.saenalschool.com/school/06.html

55) 김혜경, 「광주새날학교, 제10회 졸업식 비대면 온라인 개최」, 『한국타임즈』(2021.01.08.). http://www.hktimes.kr/read.php3?aid=1610059202136634006; 박호재 「다문화 대안학교 '광주 새날학교' 풍성한 졸업식」, 『The Fact』(2021.01.08.). http://news.tf.co.kr/read/national/1836192.htm

30명이 대기 중이며, 2023년 2학기에는 1개 반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56]

구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합계
남	7	8		7	4	1	3	1	1	32
여	12	5	2	6	6	2	6	1		40
합계	19	13	2	13	10	3	9	2	1	72

<2022학년도 나라별 현황> 출처: 새날학교 홈페이지 http://www.saenalschool.com/index.html

새날학교는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 청소년들을 수용하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난민 학생들은 20명이다.[57] 새날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례로 한국인 예술가 7명과, 난민 학생들과 함께 학교 식당 건물 벽화 그리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도 했다. 벽화의 주제는 인종의 다양성이며, 예술가들이 기본 도안을 그려 넣은 후, 학생들이 각자 좋아하는 색을 채워 벽화를 완성했다.[58]

이외의 교육시설로는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해 2012년 10월에 개원한 어린이집이 있으며, 2013년 7월에 개원한 고려인마을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광산구 외국인 지원과의 관할 하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한글, 영어, 수학 등의 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고려인 청소년문화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22년에는 청년들을 위한 〈버들시내〉 센터를 개소하였다. 이곳에서는 올드커머로 전쟁 이전 한국에 들어왔던 우크라이나 출신 대학생이 이제 막 전장을 빠져나온 난민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며, 간식을 챙겨주기도 한다.

이처럼 정부의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새날학교〉부터 광산구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고려인마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버들시내〉 청년 센터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교육 인프라는 난민 지원이 정부, 민간의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난민 전문가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

56) 이천영 인터뷰, 2023년 4월 7일 (새날학교 교장실)
57) 이천영 인터뷰, 2023년 4월 7일 (새날학교 교장실)
58) 김용희, 「벽화로 꽃핀 '우크라 고려인 어린이들의 꿈'」, 『한겨레』(2022.05.31.)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45040.html

4) 문화 시설과 난민의 고려인 정체성 확립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과 그 이전에 구소련 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고려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취업, 거주지 확보 등의 경제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가족 단위의 이주가 증가하고 이주기간도 점차 장기화되고,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의 일부도 전쟁 이후에도 고려인마을에 정착하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려인마을 공동체에서는 문화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고려인마을 어린이 합창단, 고려인마을 극단, 학술기관(고려인마을 연구소)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중 가장 구심점이 되고 있는 것이 고려인 박물관 〈월곡 고려인 문화관 '결'〉이다. 박물관의 김병학 관장은 1992년부터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에서 한글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카자흐스탄의 한글문화센터 소장, 고려일보 기자 등으로 활동하며 2016년까지 카자흐스탄에서 근무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체류한 24년 동안 그는 고려인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귀중한 유물 12,000점을 수집했다. 그의 개인 소장품을 바탕으로 2021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월곡 고려인 문화관 '결'을 개관했다. 월곡 고려인 문화관 '결'이 소장한 자료들 중 23권의 자료집이 국가기록물 제13호로 지정되기도 했다.[59]

특히 2021년 8월 14일~31일에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를 개최했으며, 2022년 8월 15일에 월곡동 어린이 공원에서 홍범도 장군 제막식이 있던 날에는 박물관에서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단막극을 전시실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이때 공연을 담당한 배우들은 호남대학교 연극 전공 학생들이었다. 이처럼 고려인 박물관은 고려인마을 거주민인 고려인들과,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의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주민들이 고려인 역사와 문화에 관해 이해할 수 있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5) 난민 유입으로 신설된 기구들

협동 농장

우크라이나 난민으로 들어온 노년층들은 공장, 식당 등에서 힘든 노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려인마을은 2023년 2월 광산구 새마을회

59) 김병학 인터뷰, 2021년 7월 13일, 8월 21일, 2022년 8월 15일 (월곡 고려인 문화관 '결')

소유의 농지를 임대해 고려인 협동농장을 출범했다. 지역사회 후원금과 마을 주민들의 지원을 통해 마련된 농사자금을 기반으로 기본 자재를 구입하여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했다. 월곡동 고려인마을 내 35개 식당들과 계약재배를 통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판매망을 구축해 안정된 수입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고려인마을 협동농장은 우크라이나에서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난민들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60]

그런데 협동농장 건립 당시 최초로 농업을 담당했던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 김씨와 토지를 대여해 주는 광산구 새마을회 지도부 사이에 농법의 차이로 인한 이견도 발생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우크라이나 남부로 고본지를 다니면서 농사일을 시작한 이래로 일생을 농업에 종사해 온 김씨는 자신만의 농법으로 농사를 짓기를 원했다. 그러나 광활한 대지에서 대규모 농사를 지어온 이들의 농법을 인정하지 않는 토지 주인인 새마을회 지도부 사이의 이견으로 결국 김씨는 협동농장 업무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61] 협동 농장 내 농업은 다른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에게로 넘어갔으며, 2023년 4월 현재 김씨는 새날학교에서 일자리를 주어서 학교 교정 관리를 하고 있다.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협동 농장을 통한 농업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의 생계를 위한 터전 마련에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길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양계장

고려인마을의 양계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양계장을 운영해온 박 에릭이 고려인마을의 지원을 받아 입국하여 광주 고려인마을 쉼터에 거주하게 되면서 형성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 양계장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산구 새마을회 소유 임야의 일부를 대여하여 양계장을 시작하였다. 낡은 가정용 냉장고를 부화기로 활용하여 2023년 4월에는 하루에 250-300마리의 닭들이 부화하고 있다. 자연 방목으로 관리되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계란과, 닭들은 고려인마을 식당들에 납품되기도 하고, 별도의

60) 윤종채, 「광주 고려인마을 협동농장, 특화작물 '씨뿌리기' 한창」, 『남도일보』 (2023.04.18.)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1458
61) 김씨 인터뷰 (1955), 2023년 4월 8일 (광주 고려인마을 쉼터, 신안 튤립축제 현장).

판매 루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박 에릭은 전쟁이 끝나도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62] 이처럼 고려인마을 인프라를 난민들이 활용함과 동시에 난민들의 유입으로 공동체가 확장되고 있다.

2. 우크라이나 난민 개인의 삶

1) 가족 전부 입국

고려인마을의 지원으로 입국한 난민들 중 일가족 전부가 광주로 들어온 사례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안 엘레나의 가족이다. 1979년생인 엘레나는 광주의 공장에서 6년 동안 힘겹게 번 돈을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인 미콜라이우에 살고 있는 부모님과 청각장애인인 딸에게 송금해왔다. 엘레나는 지난 2022년 1월 가족들을 만나러 우크라이나로 입국했다. 이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다. 그녀가 송금한 돈으로 마련한 미콜라이우의 예쁜 집은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적십자의 도움으로 버스를 타고 몰도바-루마니아-헝가리-슬로바키아를 거쳐 폴란드 난민 수용소에 도착했다. 난민 수용소의 상황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았고, 그곳으로 취재하러 나왔던 한국 기자들이 한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엘레나의 가족은 그곳에서 고려인마을에서 보내준 항공편으로 함께 입국했다. 청각 장애가 있는 딸의 경우 우크라이나에서는 장애인 무용수로서 콩쿨에서 우승을 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었으나, 한국에서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이처럼 전쟁을 계기로 가족 전부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경우, 이들은 전후에도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엘레나의 부모님은 둘 다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했으며, 엘레나는 2007년에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여, 딸도 러시아 국적자이다. 당시 러시아 정부에서 구소련 지역민들에게 국적 부여를 간소화하였는데, 이때 엘레나는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63]

62) 박 에릭 인터뷰 (1954), 2023년 4월 7일 (광주 고려인마을 양계장).
63) 안 엘레나 인터뷰 (1979), 2022년 7월 24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2) 노년층

엘레나와 유사한 상황을 맞은 이들은 박 에릭과 니 엘자 부부가 있다. 박 에릭은 1954년에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주의 레닌 콜호즈에서 태어났으며, 니 엘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주의 아꾸르간에서 태어났다. 레닌 콜호즈에서 지인을 통해 만나서 결혼한 이들은 1983년에 결혼했으며, 딸 둘과 아들 1명이 있다. 이들은 1983년부터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로 고본지를 다녔고, 1995년에 미콜라이우로 완전히 이주했다. 이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좋은 집과 자동차 3대를 소유했고, 이 차량들을 위한 커다란 주차장 겸 창고를 건축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집과 차고가 집중적으로 폭격을 당한 이유가 차고가 커다란 규모였기 때문에, 그곳에 무기를 쌓아두었을 것이라고 러시아군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들은 2022년 6월에 우크라이나를 떠났다. 우선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장녀인 사미라의 집으로 갔다. 사미라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항공사에 근무했고, 그곳에서 만난 독일 사람과 결혼하여 독일에 거주하고 있다.

독일에서 거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박 에릭은 광주 고려인마을의 항공권 지원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양계장을 운영했던 그는 광주에서도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아들은 미콜라이우에서 지역 방위군으로 자원하여 근무하고 있는 중이다. 전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이들 부부는 젊은 날에 고된 노동으로 마련했던 모든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으며, 종전이 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연금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다.[64]

이들 부부와 함께 고려인마을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씨(본인 스스로 익명을 요청)도 1955년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주에서 태어났다. 1971년부터 어머니와 외삼촌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고본지를 다녔으며, 1984년부터 우크라이나에 정착했다. 일생을 농부로서 살아온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수박, 오이, 토마토 등의 농사를 지었다. 그의 사위는 이 전쟁에서 전사했으며, 그는 두 딸과 아내와 함께 폴란드 난민 캠프에서 체류했다. 폭격 당시 지하실에 피해 있던 그와 그의 가족은 몰다비야 – 루마니아 – 헝가리를 거쳐 폴란드에 도착했다. 폴란드에서 그는 단신으로 그

64) 니 엘자 인터뷰 (1957), 2023년 4월 7일 (광주 고려인마을 양계장)

의 누이가 거주하는 이탈리아로 갔다. 그의 누이는 이탈리아 사람과 결혼하여, 이탈리아 농촌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폴란드로 돌아왔고, 폴란드 난민 캠프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목사의 도움으로 광주 고려인마을의 항공권 지원을 받고 2022년 8월 1일에 한국으로 입국했다. 그는 헝가리, 폴란드 등 그동안 여정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65] 유럽의 각 국가들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 또한 이 전쟁이 펼치고 있는 가치전쟁의 단면인 것으로 여겨진다.

인천 공항에서 광주로 직행한 그는 고려인마을에서 막 시작한 협동 농장에서 농업을 시작했으나, 땅을 제공한 새마을회와 농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23년 4월 현재는 새날학교를 관리하고 있다. 무연고로 입국한 그에게 고려인 지원센터는 매달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그의 아들은 미콜라이우에서 지역방위군으로 자원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폴란드에 체류하고 있는 몰다비아인인 아내와 두 딸은 한국으로 입국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받는 지원금을 모아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들에게 송금하고 있다.[66]

3) 여성과 아이들

우크라이나 난민의 90%는 여성과 아이들이다.[67] 김 옥사나는 이러한 전형적인 난민 구성에 부합하게 가족들 중 세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주에서 출생한 옥사나 역시 우크라이나로 이주했고, 남편과 사별한 옥사나는 징집대상이라 출국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두 아들과 결혼한 두 딸을 우크라이나에 남겨놓고, 나머지 딸 셋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옥사나는 전쟁 발발 이전까지 한국으로 오겠다는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었다. 미콜라이우에서 함께 교회에 다니던 친구가 광주 고려인마을에 거주하고 있어서 고려인 지원센터로부터 세 딸과 자신의 항공료를 지원받아 광주로 들어왔다.

고려인마을 쉼터에서 세 딸과 함께 3주 정도를 지내다가,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65) 헝가리 길에서 만났던 사람은 의사였는데, 핸드폰 통역 어플을 사용하여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김씨, 2023년 4월 8일 (광주 고려인마을 쉼터)
66) 김씨 인터뷰, 2023년 4월 8일 (광주 고려인마을 쉼터).
67) "A year of War in Ukraine", p. 7.

2022년 7월 25일에 월곡동 내 월세방으로 이사를 나왔다. 이들 역시 초기 정착금과 두 달치 월세를 지원받았으며, 당장 생활에 필요한 이불, 쌀, 그릇 등을 지원받았다. 2007년생인 딸 박 알렉산드리아와 2010년생인 딸 릴리야는 새날학교로 전학을 했다. 7월에 입국한 두 아이는 처음으로 겪어보는 한국, 특히 광주의 더위에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농사를 짓던 옥사나는 식당 주방 보조원으로 취업을 했으나, 알러지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다가, 이후 공장에 일자리를 얻어서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 가족 중 여성과 아이들만 국경을 넘어왔기에, 종전이 되면 이들은 가족들이 있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68]

4) 무국적자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은 무국적자로 신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다. 2018년 당시에 4대 우크라이나 고려인 협회장이자, 키예프 외국어대학 한국어과 학과장인 강정식 교수는 우크라이나 고려인 협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를 무국적자들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90년대 초반 소연방 해체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한 고려인들 중 우크라이나 입국 이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냥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크베키스탄 국적도 상실되고, 우크라이나 국적도 취득하지 않아 무국적자가 된 이들이 많았으며, 고려인 협회가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과 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이야기했다. 2018년 당시 '합법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무국적자 문제를 90%가량 해결했다고 말한 바 있다.[69]

무국적자의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은 2018년 당시 오데사에 거주한 마리나 신이었다. 마리나는 소련시기 패스포드를 갱신하여 우즈베키스탄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녀의 남편은 소련시기 발급된 패스포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1997년까지는 소련 시기 발급된 패스포드로 우크라이나에서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것과,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1998년부터 소련 패스포드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때부터 마리나의 남편은 무국적자가 되어

68) 김 옥사나 (1973), 박 율리야 (1993), 박 알렉산드라 (2007), 박 릴리야 (2010) 인터뷰, 2023년 7월 25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69) 강정식 인터뷰 (1948), 2018년 9월 25일 (키예프, 외국어대학 한국어과 학과장실).

거리에도 마음 편히 나갈 수 없었으며, 생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70] 이처럼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에는 다수의 고려인들의 국적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국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광주 고려인마을로 들어온 전쟁 난민들 중 무국적자들도 있다. 그 중 우크라이나인 아내와 18개월(22년 7월 기준) 된 딸과 함께 입국한 김 발레리(1988년)도 있다. 젊은 남성들의 경우는 출국이 금지되어 있지만, 김씨의 경우는 8세에 부모님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이주했으나, 우크라이나에서 무국적자로 살아왔다.[71] 무국적자이기에 많은 제약 속에 살아왔으나, 오히려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 정부의 동원령에 해당되지 않아 출국할 수 있었다. 무국적자들은 일생 거주 지역을 벗어날 꿈도 꾸지 못하다가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해진 것을 다행으로 여기기도 한다. 우크라이나인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입국한 김 발레리가 당면한 문제는 취업의 어려움이었다. 무국적자들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이 발행한 동포 방문비자(C-3-8)로 국내 입국하였다. 이로 인해 취업 제한과 6개월 단위로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2022년 8월 무국적자인 고려인은 약 60여 명으로 추산되었다.[72]

5) 유사 이주 노동자

리 드미트리는 2년 전 키예프로 일하러 갔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체르카스의 집으로 돌아왔다. 반년 동안 일거리도 없어서 수입이 없이 지냈다. 그는 아이들을 우크라이나에 남겨둔 채 우크라이나인 아내와 함께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다른 사람들이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에서 들어온 것과는 달리 이들은 직접 피해지역이 아닌 곳에서, 자비로 국내로 입국했다. 한국으로 오는데 아이들과 동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아이들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라고 답했다.[73] 이들은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수입이 끊어지자 한국행을 감행했다.

---

70) 신 마리나 인터뷰 (1966), 2018년 9월 27일 (오데사, 한인교회)
71) 김 발레리 인터뷰 (1988), 2022년 7월 24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72) 이천영 인터뷰, 2022년 8월 16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73) 리 드미트리 인터뷰 (1984), 2022년 8월 15일 (광주 고려인마을 지원센터).

이처럼 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한 다양한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쟁의 단면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난민과 동포 사이의 광주 정착 우크라이나 고려인들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에서 민간 모금을 통해 항공권을 지원하고, 초기 정착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을 받는 대상인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고려인들은 분명 전쟁 난민이다. 러시아의 폭격으로 사위가 전사하기도 하고, 또는 일생을 일군 집과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비극적 현실에 처해 있는 전쟁난민이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받기 위해 1/4 고려인임을 증명하여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했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전쟁난민으로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들의 입국부터 정착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해온 광주 고려인마을 지도부 역시 이들을 전쟁 난민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예멘 난민 사건의 사례로 인한 것이었다. '2023 난민 포럼' 개회사에서 인권위원장인 송두환은 "2018년 4월, 제주도로 입국한 500여 명의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언론, 우리 정부에게 매우 놀랍고 당황스러운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난민법 폐지, 난민수용 반대 등 국민청원에 71만 이상이 동의했고, 예멘 난민신청자 관련 기사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는 경쟁적이고 자극적이었으며, 국회에서는 난민 유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 되기도 했습니다"고 언급하였다.[74] 당시 연합뉴스를 비롯한 10개 이상의 한국 언론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다루는 보도를 폭발적으로 쏟아냈다.[75] 이는 한국 사회 내에 난민 문제가 조명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무슬림 혐오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는 사건이 되기도 했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2021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철수할 때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 378명을 '특별기여자'라는 호칭으로 특별

74) 『난민의 국내정착과 보호 확대: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 2023 난민포럼 발표집』 (2023.4.28.).

75) 고은지, 「제주 예멘 이슈를 통해 본 한국 난민 정책」 난민인권센터 (2019.2.4.) https://nancen.org/1859

전세기를 통해 2021년 8월 26일에 한국으로 입국시켰다. 아프가니스탄 내전으로 인한 난민들 중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들을 '특별기여자'라고 부름으로써, 예멘 난민들을 향했던 부정적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향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광주 고려인마을에서는 이들을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이 아닌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으로 부른다.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동포, 특히 고려인들을 홍범도 장군의 후예인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임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돕자는 캠페인을 벌였고, 이는 한국 사회 내에서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그런데 동포 돕기 차원이라는 점에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주도성은 현저하게 낮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정부는 르비우에 중앙 기구를 설치하고[76] 유대기구(Jewish Agency)를 통해 폭격 대상 지역으로 450대의 특별 버스를 배치했으며, 알리야 센터(Aliyah center)[77]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6개국에 개설했으며, 호텔과 다른 숙소, 음식, 상담을 제공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 유대인들을 위해 '알리야 익스프레스 프로그램(Aliyah Express program)을 시작하여 바로 항공기를 준비하고, 도착 이후 숙소와 정착을 도왔다. 북미 유대 기구의 대표인 단 엘바움(Dan Elbaum)은 "오로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아메리카 유대인 공동체와 이스라엘 정부와 다른 유대인 조직들이 단합된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인 역사적인 순간에 직면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유대인들을 위해 전세계 유대인 조직들과 개인들이 보낸 후원금이 6천만 달러 이상이 모금되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부터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59,870명에 이른다.[78] 2023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유입될 유대인의 수를 약 30,000명으

76) http://www.onenewman.net/107

77) 알리야는 히브리어로 '(시온산에) 오른다'라는 의미로서 고향땅에 돌아간다는 '귀환'을 의미한다. 즉 해외 거주 유대인의 이스라엘 복귀와 정착을 일컫는다. 홍인화, 임채완 이스라엘 귀환동포의 알리야와 지원정책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35집 1호(2017), 168쪽

78) "UKRAINE CRISIS", https://www.jewishagency.org/2022-ir-ukraine/ 우크라이나에 스스로를 유대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 4만 5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http://www.onenewman.net/107

로 예상하고 있다. 이스라엘 도착 이후 이들에게는 임시 거주지가 제공되며, 이스라엘 사회 통합에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 언어 교육, 직업 훈련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 아이들의 학업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 및 복지 활동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세대에 맞는 다양한 정착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받는다.[79]

물론 국가 자체가 이민자로 구성된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관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과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이 된 이들 고려인들을 보편 인권의 문제로 난민 문제에 접근하기보다, 불쌍한 동포 돕기라는 민족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향후 난민 수용 등 한국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난민 수용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Ⅳ. 맺음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고, 2차 대전 이래 유럽에서 최대 규모로 전쟁 난민이 발생했다. 물론 한 국가 내에서의 내전이나, 국민국가들 사이의 전쟁에서도 난민들은 발생하지만, 대리전의 성격을 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초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난민들을 발생시켰다.

기존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같은 무슬림, 유색인종의 난민과 달리 80-90%가 여성과 아이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소수민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백인들인 이들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인근 국가들에서 환대를 받았다. 물론 전쟁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난민의 규모 역시 예상을 벗어난 규모로 확대되면서, 이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대한 피로감이 인근 국가들에서 표출되고 있기도 하지만,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자유를 갈망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79) http://www.onenewman.net/107

지지, 즉 가치전적인 측면도 이들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형성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그동안 난민 인정에 매우 인색한 태도를 견지해 온 일본 정부조차도 특별 항공편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일본으로 데려왔고, 이에 대한 여론도 매우 긍정적이었다.[80]

이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중 유대인과 고려인들은 재외동포로서, 귀환이주의 형태로 이스라엘과 한국으로 유입되었다. 단지 이스라엘의 경우 이 모든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적인 행위 주체로 나선 반면, 한국은 민간차원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들의 한국 입국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이다. 계기는 고려인마을이 위치한 월곡동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자녀들을 입국시킨 것이었다. 초기에는 단지 미성년 자녀들을 항공권을 제공하여 데려왔지만, 점차 일가족 전체, 여성과 아이들, 무국적자인 고려인들, 노년층들이 광주 고려인마을의 항공권 제공으로 입국했다.

광주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들은 다수가 미콜라이우(니콜라예프) 출신이다. 이는 전쟁 이전에 경제적인 이유로 광주로 들어와 노동을 하던 고려인들이 미콜라이우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들의 가족, 그 이웃들에게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한 이후 요청하면 무료로 항공권을 구매해 준다는 정보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는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이전에도 생활지원, 법률, 의료, 교육 분야와 문화적인 부문에서도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전쟁 직후 광주 고려인마을은 난민들의 입국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모금을 통해 약 900명 가량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하여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게 했으며, 이들의 정착과정에도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되어 한국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을 광주 고려인마을의 올드커머인 고려인들과 선주민인 활동가들이 다방면에서 돕고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난을 겪는 이들을 향한 지역사회의 후원 물품과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다. 난민들이 유입됨으로써, 고려인마을 공동체는 확장되었으

80)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37769.html

며, 오히려 선주민들의 과거 고려인 공동체를 향한 부정적인 태도들도 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들에 대한 선별적 환대가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난민'에 대한 편견을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해 표출된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데려오면서 '특별기여자'란 호칭을 부여하여 이러한 부정적 시선을 피하고자 노력했고 성공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고려인마을 활동가들도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들을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으로 명명하며, 이들을 난민이라기보다는 재난을 당한 동포로서, 특히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인 고려인들을 도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운 캠페인을 벌여 왔다. 향후 한국 사회는 '특별기여자'나 '재난당한 동포'라는 특별한 수식어를 필요로 하는 선별적 환대에서 벗어나, 단지 '난민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2세션

문종현 (세종대학교)
식민지 시대 알제리로의 여성 이주
– 프랑스 만들기와 여성

이찬행 (충북대학교)
갱스터 랩과 로스앤젤레스 인종 갈등

발표 3

식민지 시대 알제리로의 여성 이주
- 프랑스 만들기와 여성

문 종 현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의 알제리 이주
Ⅲ. 알제리 여성 이주 계획
Ⅳ. 나가며

Ⅰ. 들어가며

식민지 알제리의 역사는 프랑스 현대사의 중요 분야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그 시기 동안 알제리에서 살았던 유럽계 여성에 관한 연구는 오래되지 않았다. 1962년 독립 전 알제리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성별 인구 조사에서 비무슬림 여성 인구는 알제리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었다. 프랑스 제국이 급속하게 해체되면서 약 100만 명의 피에 누아르로 불린 유럽계 이주자는 갑작스럽게 귀환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유산과 흔적을 알제리에 남기지 못했다. 유럽계 정착민(colon européen)의 역사는 오랫동안 소홀히 다루어 졌다.[1] 식민지 시절 유럽 정

착민을 향한 관심은 주로 인구 통계학에 집중되어 있었다.[2]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알제리에 정착한 유럽 공동체의 이민과 정착, 생활이 연구되기 시작했다.[3] 하지만 이러한 알제리 이주사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 이주민의 흔적과 유산은 그 발자취를 찾기 어려웠다. 대부분 무성적, 중립적인 이주사를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성 이주자에 대한 연구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정복, 지배, 약탈, 개척, 발전 등으로 재현되는 알제리 식민화 과정은 남성적 권력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유럽계 정착민의 역사는 남성 중심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에서 여성사 연구는 여성주의 운동의 성장과 함께 1970년대 시작되었지만, 알제리 역사는 알제리 전쟁과 식민주의에 관련된 주제에 집중되어 있어 여성 이주자 연구는 가장 늦게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식민지 여성사 속에서도 피에 누아르 여성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프랑스 제국에 포함되어 있었던 모로코, 튀니지, 아프리카, 아시아 원주민 여성에 관한 연구가 먼저 활발히 진행되었다. 알제리는 1848년 프랑스의 도로 편입되어 행정적으로는 식민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식민지 중 가장 많은 유럽계 여성 인구가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주변에 머물렀다.[4] 지금까지 생략되고 외면되어온 유럽계 여성 정주민의 역사는 새롭게 알제리 식민지 역사와 이주의 역사에 대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

1) Hugo Vermeren, “Les migration françaises et européennes vers l’Algérie au début de la IIIe République”, dans Abderrahmane Bouchène dirs., *Histoire de l’Algérie à la période coloniale*(Pairs: La Découverte, 2014), pp. 194-200.

2) 식민지 알제리 인구변동에 관한 19세기, 20세기 초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L. E. Foley et V. Martin, *Histoire statistique de la colonisation algérienne au point de vue du peuplement et de l’hygiène*(Paris: Baillère, 1851); R. Ricoux, *La démographie figurée de l’Algérie, étude statistique des populations européennes qui habitent l’Algérie*(Paris: Masson,1880); R. Ricoux, *La population européenne en Algérie pendant l’année 1884. Étude statistique*(Paris: Masson, 1885); V. Demontès, *Le peuple algérien, essai de démographie algérienne*(Alger: GGA, 1906).

3) 식민지 알제리에 정착한 스페인계 정착민에 대해서는 크리스티앙 플로레스(Christian Flores)와 장 자크 조르디(Jean-Jacques Jordi)의 연구로 알려졌고, 이탈리아계는 조르주 크레스포(Georges Crespo), 몰타계는 마크 도나토(Marc Donato), 독일계에 대해서는 모리스 디 코스탄조(Jean-Maurice Di Costanzo)의 연구가 중요하게 언급된다.

4) 프랑스에서 식민지 여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0년 엑상프로방스에서 일군의 여성사학자들이 ‘여성과 식민주의’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영미권에 비해 늦은 식민지 여성 연구는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특히 2000년 이후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Pascale Barthélémy, Luc Capdevila and Michelle Zancarini-Fournel, “Femmes, genre et colonisations”, *Clio. Femmes, Genre, Histoire*(n. 33, 2011), pp. 7-22.

식민지와 정착지의 지위를 가진 알제리에 유럽 이민자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유럽의 젠더 질서가 식민지에도 이식되었다. 알제리는 프랑스에게 원주민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땅이자 이주의 영토였기에 이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영토였기에 유럽 여성 이주자들은 여성이자 동시에 식민지 개척자였다.

원주민의 저항을 봉쇄하기 위한 알제리 정복 전쟁은 길고도 지루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전시 상황이 지속하면서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는 가운데 여성의 권리와 지위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1870년까지 알제리는 군부가 통치하고, 군대가 상시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군사적 질서는 민간 질서보다 사회적으로 여성을 위한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었다. 또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고 여성이 아버지, 형제 또는 남편의 모든 권위에 복종하고,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오로지 가정만이 허용되는 무슬림 문명이 지배하는 알제리에서 유럽계 여성 이주자는 유럽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식민자였다. 식민지 알제리의 인종적 사회 질서에서 원주민 무슬림 여성은 프랑스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프랑스인이 될 수 있었고, 유대인 여성은 1870년 크레미유 법령(décret Crémieux) 이후 프랑스인 국적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은 '1889년 국적법' 제정으로 국적 획득의 기회가 넓어졌다. 프랑스 국적에 대한 개방성은 인종, 민족적으로 구분되는 여성들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 문화적, 사회적 '유럽 여성'으로 빠르게 만들었다.

Ⅱ. 프랑스의 알제리 이주

1830년 프랑스의 침공으로 알제리를 식민화한 이래 프랑스 정부는 꾸준히 이주 장려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제3공화정이 수립된 후 시민권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완료되면서 새로운 식민지 정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5] 즉, 이주를 통해 프랑스인을 늘리는 것, 프랑스 농부를 이주시켜 농업을 발전시키고 무슬림 원주민보다

5) 프랑스령 알제리 원주민에 대한 신민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정비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박 단, 「프랑스 내 무슬림 차별 기원으로서의 식민주의 유산」, 『통합유럽연구』 11권, 3집 (2020).

더 많은 프랑스인이 알제리에 거주하게 하여 수적으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식민지로 만들기(coloniser)기 위해서는 프랑스인을 이주시키는 것(peupler)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였다.

제3공화국 이전 알제리에 대한 자본 투자와 이주 정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1848 혁명 이후 국가가 주도해 이주를 실행했지만, 그 효과는 대도시의 인구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뿐 식민지와 식민 모국을 연결하는 분업과 교역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 민간영역의 경제적 발전은 더디게 나타났다.[6] 알제리는 그다지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투자 대상은 아니었다.

프랑스 이주, 인종, 식민사 전문가인 리오주(Claude Liauzu)는 그의 저서 『서지중해 이민사』(Histoire des migrations en Méditerranée occidentale)에서 프랑스가 추진한 이주 정책은 상대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농촌 지역까지 포함하는 알제리 전역을 식민화하는 연속적 정책 추진은 목표와는 달리 스페인, 이탈리아의 해안지역, 몰타에서 온 이주민 유입을 증가시켰다. 프랑스 식민정부의 인구조사에 따라면, 1866년 217,099명의 유럽계 이주민 중 프랑스인은 56%에 머물렀고 1872년에는 245,117명 중 53%가 프랑스인, 60%가 도시에 거주하였다. 결국, 프랑스 정부의 노력에도 유럽계 외국인(Euro-étrangers)이 지중해 연안지대의 도시인 알제, 본(Bône), 필립빌(Philippeville)에 정착한 것을 보여준다.[7]

1871년 엘-모크라니(El-Mokrani) 반란은 프랑스의 식민화, 즉 토지 약탈에 좋은 구실을 제공하였다. 반란을 일으킨 부족에게는 무거운 벌금과 함께 약 450,000헥타르의 토지를 몰수하였고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몰수된 토지를 분배하면서 수많은 프랑스계 가족의 식민지 정착이 실행될 수 있었다. 1871년~1895년 사이 약 5,655가구가 알제리 농촌에 정착하였다. 1871년 '6월 21일 법안'이 제정되면서 알자스 로랭(Alsatians-Lorrains) 주민들이 이주하였고, 1889년 아베롱(Aveyron)의 광부 등 13개 이상의 지역에서 대규모 이주계획이 식민지 정부에 의해 조직되었다.

---

6) 알제리로 이주한 여성의 일부는 정치적 이유로 추방된 사람들이었다. 물론 대다수가 알제리에 단기간만 머물렀고 다른 이주민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었지만, 1848년, 1851년 그리고 1859년 오르시니의 쿠데타(coup d'état d'Orsini) 이후 이루어진 정치범에 대한 알제리로의 강제이주 중 1851년 추방에서만 여성이 포함되었다.

7) Claude Liauzu, *Histoire des migrations en Méditerranée occidentale*(Paris: Eiditions Complexe, 1996), pp. 25-44.

제3공화국의 첫 10년은 알제리를 향한 '이주의 황금기'였고, 두 번째는 10년은 이주자의 정착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간이었다. 19세기 말에 알제리로 이주한 프랑스인의 대다수는 코르시카(Corse), 피레네조리앙탈(Pyrénées-Orientales), 오트잘프(Hautes-Alpes)로 대표되는 지중해 지역 출신이었다. 알제리에 한 번도 발을 디딘 적이 없는 '식민지 개척 자원자'들이 이주한 데는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캠페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공짜 땅에 대한 약속은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였는데, 식민지 이주에 대한 정보와 이주 신청은 도의 담당 부서에서 요청할 수 있었다.

1870년대부터 알제리 식민정부(Gouvernement Général de l'Algéie: GGA)는 파리와 지역 언론을 통해 '식민지 이주민 구함'(appels aux colons)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 이주에 대한 소책자, 안내서, 포스터 등을 제작했다. 이주자를 확대하기 위해 맞춤형 캠페인도 전개되었는데 포도나무 뿌리 진디병(phylloxéra)로 인해 크게 피해를 본 포도 재배지역의 농민을 위한 이주 안내도 실행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주요 이민 국가인 미국이나 아르헨티나가 주도한 이주 캠페인에 비하면 알제리를 향한 이주는 큰 효과를 달성하진 못했다. 이주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불명확해 지원자의 불안감을 상쇄시킬 수 없었기에 프랑스인에게 알제리는 매력적인 이주지가 아니었다. 알제리 출신 역사가 자비에 야코노(Xavier Yacono)는 "이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습니다. 국가는 농부, 노동자, 상인으로 건너온 이주자의 정착을 후원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8] 1880~1890년 알제리 농촌 및 해안 지역의 식민지화를 위한 많은 정부 계획이 추진되었지만, 프랑스인의 상당수가 알제리 이주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인, 스페인인에 비해 적은 수가 알제리에 정착하였다.[9]

---

8) Xavier Yacono, *Histoire de la colonisation française*(Paris: PUF, 1992).

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Emile Temine, "La migration européene en Algérie au XIX siècle: migration organisée ou migration tolérée", *Revue des mondes musulmans et de la Méditerranée*, No. 43, 1987; Hugo Vermeren, "Pouvoirs et pratiques de l'expulsion des étrangers en Algérie au XIX^{e} siècle: un outil colonial de gestion des flux migratoires", *Le Mouvement social*, No. 258, 2017.

이상과 같이 프랑스인의 이주 정책도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알제리로 이주한 프랑스인의 성비는 매우 불균등하였다.[10] 미혼 독신 남성 이주자가 정착민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가운데 여성은 식민지 알제리에서 안정적으로 백인 인구증가를 가져오고, 프랑스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간주되었다.[11] 특히 여성에게는 인종적으로 우수한 아동을 낳고 길러 식민지의 번영과 민족을 재생(régénérer)시키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이주의 역사에 있어 여성은 이주 목적지와 관계없이 항상 남성보다 이주 가능성이 적었다. 교통수단의 열악함, 정보의 부족, 전통, 관습의 걸림돌로 인해 19세기 이주 현상 속에서 여성은 낯선 이주 주체였다. 당시 여성에게 이주를 실행한다는 것은 가족, 고향, 익숙한 환경과 결별하고 미지의 세계와 마주하는 두려운 운명적 결단이었다. 또한, 이주는 여성에게 전통과 관습을 위반하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용기, 가정과 가족을 떠나는 도전을 의미했다.

여성 이주는 대부분 가족과 함께 떠나거나 이주 목적지에 먼저 정착한 친척, 지인, 친구와 합류하는 방식이었다. 출신 국가와 이주지 사이의 거리도 영향을 미쳤다. 익숙한 환경, 가족과 분리되어 떠나는 이주는 신속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귀환이 가능하다면 더 쉽게 실행될 수 있었다. 특히, 지중해 주변 유럽인들에게 알제리는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는 최적의 이주지였다. 하지만, 알제리는 유럽 여성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이주지는 아니었다. 남유럽 사람들에게 알제리는 여성을 납치해 노예로 팔고 때로는 하렘에 가두는 바바리 해적의 거점으로 알려져 왔고, 19세기 내내 프랑스군의 정복에도 불구하고 치안이 매우 불안정하고 유럽인을 환대하지 않는 야만적인 무슬림 원주민의 땅이었다.

1830년 7월 알제(Alger)가 프랑스군에 의해 함락된 이후 알제리 전역을 프랑스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원주민의 반란과 이를 토벌하는 식민지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1857년 카빌리(Kabylie)에서 랑동 장군(général Randon)이 이끈 군사작전 이후 사하라 사막을 제외하고는 정복 작전은 완전히 종료되었지만, 안정적 통치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1871년의 대규모 반란과

10) 1833~1856년 남성 1,000명당 여성의 인구비율은 300~800명 사이였다.
11) Martine Spensky dir., *Le contrôle du corps des femmes dans les Empires coloniaux*(Paris: Editions Karthala, 2015), pp. 18-21.

1876~1879년 오레스(Aurès) 지역 반란은 혼란스러운 식민화 초기를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 알제리에 대규모 군대가 지속해서 주둔할 필요성은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원주민 반란이 격화되는 시기마다 알제리로 이주한 여성들은 안전의 위협받았고 때로는 생사를 넘나들었다.

식민화 계획이 시작된 해인 1842년 12월 31일, 알제리의 여성 정착민 수는 남성 정착민의 50%에 불과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여성의 식민지 이주를 알제리 식민화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였다. 인구를 안정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여성이 없이는 성공적인 식민화는 실현될 수도 지속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실패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1840년 이후 알제리 정복에 군사적으로 큰 역할을 한 뷔조(Thomas-Robert Bugeaud) 장군은 칼뿐만 아니라 쟁기를 통해 식민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내 기대와 달리 우리 병사들이 여성을 찾지 못하면 내 시스템은 기초에서부터 훼손될 것이며 버려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여성 정착민의 필요성을 선언한 바 있다.[12)]

알제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식민모국 프랑스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나타났다. 전쟁부 소속 알제리 담당 부서는 알제리 총독에게 시민 식민지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하루를 밭을 개간하거나 경작하는 데 힘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때 음식을 준비해 기다리는 동반자를 찾아야 합니다 [...] 그가 집에서 가사노동, 위로 또는 기분전환, 사회적 소속감 등 적절한 만족감을 찾지 못하면 그는 다른 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노동, 청결, 안녕, 도덕, 등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13)]

---

12) 재인용, Christelle Taraud, "Prendre femme dans les colonies", *L'Histoire*(n. 340, mars 2009). Bugeaud (Maréchal), *Le Peuplement français de l'Algérie par Bugeaud d'après les écrits et discours du maréchal. Mémoire sur la colonisation de l'Algérie, 1847*(Tunis: Éditions du Comité Bugeaud, s. d.)

13) ANOM(Archives nationales d'outre-mer) Algérie, F 80 1425, Instructions relatives à l'admission d'anciens militaires dans les colonies (1849-1851). 재인용, Claudine Robert-Guiard, *Des Européennes en situation coloniale Algérie 1830-1939*(Aix-en-Provence: Presses universitaires de Provence, 2009). p. 33-41.

이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는 식민지 이주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은 명확하다. 원주민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가정 및 공적 도덕의 수호자로서 배우자,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알제리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한 의사 카브롤(Hyacinthe Cabrol)은 1863년에 출간된 『알제리의 위생과 식민지화에 대한 보고서』(De l'Algérie sous le rapport de l'hygiène et de la colonisation)에서 다음과 같이 식민지에서의 여성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남자가 매일 자기 일을 계속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용기와 힘을 끌어내는 것은 결혼이라는 성소이며, 가족이 그의 힘든 삶에 끊임없는 목표이기에 가족이 없다면 낙담할 수밖에 없다. 여성 없이는 정착민도, 가족 없이는 식민화도 있을 수 없다"[14]

식민지 행정을 담당한 고위 장군, 관료들은 공통으로 민간인 또는 전직 군인 독신 남성이 알제리로 파견되어 정착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였다. 결혼한 가부장보다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미혼 남성 중심의 이주민 구성은 식민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사실, 유럽 식민자들이 식민지에서 여성 동반자를 찾는 경우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에서는 흔치 않게 나타난다. 하지만 알제리에서는 원주민 여성과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이 어려웠다. 알제리 무슬림 여성들은 12세부터 가정 이외의 공간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과 접촉하고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혼인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웠다.[15] 더욱이 프랑스군 지휘관들은 알제리 원주민과의 관계의 악화를

---

14) J.-F. Cabrol, *De l'Algérie sous le rapport de l'hygiène et de la colonisation*(Nice, 1863), p. 9. En ligne: https://gallica.bnf.fr/ark:/12148/bpt6k63720348.texteImage(검색일: 2023년 4월 13일)

15) 알제리에 대한 군사적 정복이 한창 진행되던 1830~1860년 사이, 다수의 프랑스 장교와 부사관, 관료, 정치인이 개종한 무슬림 혹은 유대인 여성과 혼인하였다. 19세기 중반까지 원주민 여성과의 결혼이 군인으로서의 경력과 공무원으로서의 승진에 큰 장애일 수 있다는 것은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1870년대에 이르러 인종 간 결혼에 대한 개방성은 점차 약해졌다. 위에서 아래로 식민주의 이데올로기가 식민지 정부에 의해 주입되면서, 유럽계 정주민은 인종 간 결혼을 한 남녀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결혼한 남녀는 식민자, 원주민 각각의 사회에서 배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인종 간 결혼에 대한 인식전환은 알제리가 정주식민지(settlement colony)로 본격 개발되면서 나타났다.

피하려고 종교와 관습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병사들이 무슬림 여성과 접촉을 권장하지 않았다.[16] 결국, 프랑스인 여성 이주 확대는 식민지 발전보다 초기 식민지 생존의 필요조건인 것처럼 보였다.

Ⅲ. 알제리 여성 이주 계획

뷔조는 군사적 식민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군인들이 프랑스로 귀국하지 않고 알제리에 남아 예비군으로 편성된 식민지 군단에 복무함으로써 알제리 식민화에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식민화 정책이라 생각하였다. 1842년에서 1847년 사이에 그는 자신의 원대한 군사적 식민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했지만 모두 승인되지 않았다. 뷔조는 하원의 승인을 얻고자 1844년에서 1847년 사이에 사엘(Sahel)과 미티자(Mitidja) 지역에 세 개의 군사 식민지를 건설하여 자신의 계획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려 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정착지는 알제에서 35km 떨어진 해안 도시 푸카(Fouka)이다.

뷔조는 자신이 수립한 식민화 계획, 즉 군사적 식민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남성 군인들에게 여성 동반자를 찾아주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생각해 알제리에 여성 구호소와 보육원 설치를 검토하였다.

> "구호소에는 타락하지 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그곳에 가게 된 여성들이지만, 그녀들은 여전히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가족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 식민지가 성공하면 사회에 짐이 되기만 하는 여성과 아이들을 이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17]

---

16) Martine Spensky dir., *Le contrôle du corps des femmes dans les Empires coloniaux*, p. 242.

17) Extrait du Mémoire sur notre établissement dans la province d'Oran, écrit par Bugeaud en juillet 1837, dans V. Demontès, *La colonisation militaire sous Bugeaud*(Thèse, Alger, 1917), 634 p.

1847년 하원에서 군사 식민화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받지 못했지만, 구호소와 보육원을 통한 군인 정착민 가족 만들기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여성 이주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 "이 군 정착민 남성들을 따를 충분한 수의 여성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이 걱정을 갖지 않습니다. 10헥타르의 땅을 가진 남성과 결혼을 거부하는 가난한 시골 여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모험심이 강합니다. 결혼하는 데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모범사례가 나타나면 장애물은 사라지고 원하는 만큼의 여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들은 서로를 끌고 갈 것입니다."[18]

뷔조가 여성 이주계획을 우선하여 실행하려 했는지는 불분명한데, 군사 식민화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는 문제가 더 절실했기 때문이다. 한데, 1842년 파리 언론에서 '공개 결혼'(mariages au tambour)라고 묘사한 중매결혼을 살펴보면 여성 이주계획은 포기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의 관심사였다. 정부의 승인과 지원금을 기다리지 않고 뷔조는 12월에 푸카 군사 식민지를 추진하였다. 그는 자신의 실험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에 보여주고 싶었는데, 결혼할 여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정을 이루지 못해 탈영하는 군인 정착민이 속출하고 있었기에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했다.

식민지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자 했던 뷔조는 "아랍인들은 여자들을 우리의 눈길에서 피하게 하려고 숨겨 버렸다"라며 식민지 젠더, 인종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을 남겼을 만큼 혼혈을 낳는 인종 간 결혼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인종적, 혈통적 순수한 경계가 흐려지고, 프랑스 혈통에 근거한 시민권이 도전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알제리 무슬림 여성들과의 결혼은 식민화 계획에서 배제했다. 무슬림은 동맹을 맺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대인은 종교적, 인종적 편견으로 토착 여성과의 결혼을 먼저 거부했다. 또한, "우리 병사들에게 여성을 제공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이러한 외국 요소의 중요성을 높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페인, 이탈리아 및 몰타 여성과의 통혼도 꺼렸다.

---

18) Bugeaud (Maréchal), *Le peuplement français de l'Algérie d'après les écrits et discours, op. cit.* supra n. 2.

1842년 7월, 뷔조는 퇴역 장군이었던 툴롱(Toulon) 시장에게 "보육원에서 자란 젊은이들 또는 정직한 장인과 농부 가정에서 고른 겸손하고 근면한 소녀들"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시장과 교분이 두터운 친구의 딸이 결혼할 여성 지원자를 찾는 일을 담당했는데, 그녀는 중매쟁이로 나서 툴롱의 부르주아 가정의 하인 중에서 가톨릭 신자이며, 프랑스인 신부 후보자를 찾아내어 만남을 준비하였다. 중매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해군 담당자는 20명의 병사를 데리고 왔는데, 툴롱 시의회는 뷔조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총 4,000프랑을 20명의 어린 소녀들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예비 신랑, 신부의 만남은 호텔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여성들이 배우자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라고 해군 담당자가 기록했는데, 여성들은 자신에게 맞는 남자를 선택했고, 서로를 알기 위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중매의 노력으로 17쌍의 결혼이 성사되고, 배우자를 찾지 못한 나머지 3명의 군인은 자신의 고향에서 아내를 찾는 것으로 시의회가 준비한 중매는 끝을 맺었다.[19]

하지만, 이러한 뷔조의 개인적 노력으로 이루어진 중매결혼 사업은 다시 실행되지 못했다. 이미 뷔조의 군사 식민지화 프로젝트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전쟁부 장관 술트(Soult)는 툴롱에서 이루어진 결혼이 파리의 신문을 통해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키자 더는 허용하지 않았다.[20] 장관은 '이미 준비된 가족들과 함께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한데, 당시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중매결혼이 매매혼에 지나지 않아 실패가 예정된 것은 아니었다. 1844년 푸카 식민지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툴롱에서의 중매결혼으로 탄생한 가족 중 몇 가구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렸다.

뷔조가 여성 이주를 위해 한창 노력 중이던, 1841년 몽펠리에 수도원 신부 쿠랄(abbé Coural)은 수용된 여성들의 재활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마리-조셉(Marie-Joseph) 수녀의 의지에 따라 설립된 '나사렛 은거(Solitude de Nazareth)'

19) 알제 고등학교의 교사로 출발해 꼴레쥬 드 프랑스의 교수를 역임한 빅토르 드몽테스(Victor Demontès)는 이러한 배우자 찾기 운동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V. Demontès, *La colonisation militaire sous Bugeaud, op. cit.,* supra n. 6.

20) 알콜 의존증을 보인 한 부부와 경솔한 행동, 즉 가출한 두 명의 여성이 툴롱 여성에 대한 나쁜 평판을 낳았고, 실패한 결혼에 대한 소문을 낳았다. 언론은 소문을 기사화해서 결혼한 여성들의 위법 행위를 부풀렸다.

라는 이름의 구호소는 경비 지출의 부담 때문에 항상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 운영 보조금을 받기 위해 쿠랄 신부는 1842년 7월 프랑스의 여러 도지사와 알제리 총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구호 기관의 안내문을 보내었다.

쿠랄 신부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된 뷔조는 '나사렛 은거'가 군인 정착민들을 위한 결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관이라 판단해 쿠랄 신부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 "만약 당신의 시설에 머물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온 소녀 중에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한 가정에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군부대와 다른 마을에 거주하기 시작한 식민지 주민 중에서 당신이 남편으로 지명해 줄 사람들을 그녀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이번 기회를 효과적으로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21]

쿠랄 신부는 이 제안에 매우 만족하였다. 그는 어린 소녀들이 알제리에 도착하면 예비 신랑이 결혼을 요청하기 전에 수녀들이 알제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교 시설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1842년 8월 29일에 "두 시설을 통해 몇 명의 여성이 아니라 수백 명의 여성을 약속한다"라고 답장하면서 젊은 여성들의 집단 이주를 계획했다.

뷔조는 처음에는 편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툴롱의 '공개 결혼식' 사건으로 인해 언론으로부터 심한 조롱을 당했고, 전쟁부 장관 술트(Soult)가 결혼식을 심각하게 비난했기에 자신의 계획에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군사 식민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1845년 봄, 쿠랄 신부와 다시 접촉하였다. 1845년 5월 7일, 쿠랄 신부는 회개한 소녀들을 알제리로 이송하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 "알제리에 한 곳, 프랑스에 여러 곳을 같은 종교 법인 소속 아래 두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 그들이 과거의 얼룩을 지웠다는 충분한 보증을 할 수 있다면 아프리카로 보내질 것이며, 항상 그녀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여러 수녀의 지도를 받게 될

21) ANOM Algérie, F 80 1647.

것입니다. 알제리에 도착한 어린 여성들은 즉시 식민지 수녀원으로 옮겨져 같은 수녀원의 수녀들 지도로 기독교인, 아내, 어머니로서의 훈련을 마칠 것입니다."[22]

그러나, 계획은 실행될 수 없었다. 먼저, 비용의 문제와 뷔조와 쿠랄 신부의 목표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고, 진행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뷔조에게는 식민지 주민들을 위한 배우자를 빨리 찾는 것이 절실했고, 쿠랄에게는 수많은 여성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했다. 쿠랄 신부는 군사 식민지화 프로젝트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자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 뷔조의 제안에 더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구호소의 여성들을 알제리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은 포기되었고 다시는 재개되지 못했다.

한편, 19세기에 걸쳐 식민모국에서 알제리로 고아와 버려진 아이들을 이송하는 또 다른 식민화 계획이 추진되었다. 알제리에서는 언제나 일손이 부족했던 반면, 프랑스에서는 농업 혁명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망률 감소, 핵가족화,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도시에서 버려지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한 와트빌의 보고서(rapport de Watteville)에 따르면 1833년에 129,699명의 아동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분한 이주자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아동 이주계획에는 성직자, 상원 의원, 하원 위원회, 코뮌의 시장, 심지어 개인으로부터도 제안되었다. 고아 이주계획은 소년, 소녀 모두를 포함했기에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 당국의 주요 목표는 미래의 방랑자 또는 문제아로 간주하는 유기된 아이들을 본토에서 식민지로 배출하는 것이었다. 고아 대부분을 알제리의 농업 시설로 옮기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구상되었다. 1851년 일부 제안서에서는 매년 남녀 6천 명을 농업 식민지로 보내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다른 제안서는 고아를 위한 86개의 정착촌을 설립할 계획이 세워졌다.[23]

가장 야심 찬 이주계획은 보나파르트 황제의 요청에 따라 상원이 주도적으로 착수하였다. 이 계획은 12세 미만의 고아 10만 명을 수용하기 위해 알제리에 각각 500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22개의 시설을 즉시 설립 하는 안을 담고 있었

22) *ibid.*
23) 다음을 참고하시오. L. de Baudicour, *La colonisation de l'Algérie, ses éléments,* chap. VIII, Les orphelinats(Paris: Lecoffre, 1856).

다. 농업 식민지에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분리 수용하는 각각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했다.[24]

하지만, 규모가 너무 커져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알제리에 고아를 보내는 데 찬성하는 사람들조차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아동 이주계획 수립을 담당한 상원 위원회는 알제리에 점진적으로 보내질 6,000명의 소년과 1,500명의 소녀로 규모를 축소했는데, 아이들은 12세 이전에는 보내지 않기로 하였고, 이주와 정착을 위한 비용은 보육원, 코뮌, 각 부처 및 도가 분담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상원은 최종적으로 계획을 폐기했다.

한편, 아동 이주계획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심을 보인 집단은 성직자였다. 알제의 주교 뒤퓌슈(Dupuch)는 1843년 고아들을 데리고 알제리를 식민지화하자는 계획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알제 주교는 기독교적 식민화를 통해 선교를 확대할 수 있는 정착지를 원했다. 1843년 10월 16일, 그는 뷔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 "프랑스와 각 도에서 남자아이 백 명과 여자아이 백 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스타파(Mustapha)에 있는 고아들을 위한 집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 결혼하고, 정주민과 결혼시키면, 그들은 종교적이고 정직하며 진실하고 독특한 프랑스 가정을 이룰 것이며, 그들에게 프랑스-아프리카 이외의 다른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25]

당면한 군사 식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교의 제안은 너무나 장기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뷔조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교회는 식민지와 어린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자선 사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프랑스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온다는 것은 아동 개개인에 대한 공적 지원자금을 확보하는 기회였다. 또한, 수용 시설은 미래의 식민지 주민들에게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농지양도를 받거나 양도의 규모를 늘리기를 위한 명분으로

24) Claudine Robert-Guiard, *Des Européennes en situation coloniale Algérie 1830-1939,* p.39
25) ANOM Algérie, F 80 1644.

적합했다. 그들은 알제리의 보육원들의 성직자 운영자가 제공받은 토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모국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얻으려고 했다.[26]

Ⅳ. 나가며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알제리를 포함한 해외 영토로의 여성 이주를 위한 협회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단체는 파리에서 민간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그 성격과 목표가 이전 정부가 추진한 양상과는 달랐다. 단체의 창립 목적은 프랑스 국내에서 점점 더 많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식민지에서 직업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레클레르』(L'Éclair)신문이 "농부와 상업에 종사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뉴칼레도니아로, 요리사와 객실 청소부는 튀니지로, 조산사와 간호사는 알제리로 떠났다"[27] 라며 여성 이주의 증가를 선전했지만, 실제로 지원자는 거의 없었고 제공된 일자리는 그 수가 적어서 지원자에 미치지 못했다. 20세기 초까지 대부분의 여성은 알제리보다 유럽 여성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던 다른 지역의 식민지를 선호했다.

알제리로의 여성 이주 캠페인을 조직할 때마다 알제리로 떠난 여성의 수는 항상 여론에서 조롱을 받으며,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툴롱에서 이주한 17명의 신부와 이주 단체가 유치한 극소수의 여성만이 국가가 추진한 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으며 이주했을 뿐이었다.

알제리로의 프랑스 여성 이주는 남성과 동일한 이주 지원을 받았다. 알제리로의 이주에서 국적은 성별보다 우선하는 요소였는데, 토지 개발을 목표로 농촌 식민지화를 추진하던 식민 국가는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이주한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여성은 여행과 정착 과정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주비용과 주택에 대한 국가 지원은 농촌 및 해안지역 식민화에 조직적으로 동원된 프랑스인에게만 제공되었다. 하지만

---

26) 1842년부터 알제시 고아들을 책임지고 있던 예수회의 브뤼몰드 신부(Père Brumauld)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1851년 벤-아크눈(Ben-Aknoun)과 부파릭(Bouffarik)에 399명의 하숙생을 수용하기 위해 두 개의 큰 농지를 구매했다. 또한, 구엘마(Guelma) 근처의 메제즈-아마르(Medjez-Amar) 수용소에 15명의 고아를 수용하고 더 많은 고아를 희망했던 랑드망 신부(abbé Landman)의 계획이기도 했다.

27) *L'Éclair* du 1er juin 1897.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지만, 대다수의 프랑스 여성과 남성 이주자는 국가의 지원이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알제리로 이주했다. 1870년 이후 프랑스계, 유럽계 정착민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주된 요인은 이주와 더불어 인구의 자연 증가였다. 191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알제리에서 137,746명의 스페인인, 36,795명의 이탈리아인, 492,660명의 프랑스인이 용광로(melting-pot)를 형성해 유럽계 정주민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인구의 압도적 다수는 4,740,000명의 무슬림 원주민이었다.

발표 4

갱스터 랩과 로스앤젤레스 인종 갈등

이 찬 행
충북대학교 사학과

1

아이스 큐브. 본명이 오셰이 잭슨인 그는 단연코 최고의 힙합 뮤지션 가운데 한 명이다. "힙합은 곧 아이스 큐브이고 아이스 큐브는 곧 힙합"이라는 어느 한 문화 평론가의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아이스 큐브 없는 힙합 음악이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는 그룹 NWA(Niggaz With Attitude)의 멤버로서 과격하고 폭력적인 가사를 마치 입에서 내쏟듯이 노래함으로써 훗날 "갱스터 랩"(gangsta rap)이라고 알려질 새로운 힙합 음악 장르를 개척하였다. 특히 NWA가 내놓은 첫 번째 앨범 Straight Outta Compton(루스리스/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 1988)은 힙합 음악의 권력을 동부에서 서부로 옮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1]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 힙합이 그룹 퍼블릭 에너미(Public Enemy)의 흑인 민족주의와 부드럽고 시적

1) David J. Leonard, "Ice Cube," Mickey Hess, ed., *Icons of Hip Hop: An Encyclopedia of the Movement, Music, and Culture* (Westport, CT: Greenwood Press, 2007), Vol. 2, p. 294, p. 300. NWA가 결성되기 전 힙합 음악 산업은 뉴욕의 래퍼들이 주도했다. 뉴욕의 힙합 뮤지션 중 KRS-One(로렌스 파커)은 1987년에 첫 번째 앨범인 *Criminal Minded*를 발매했다. 그의 앨범은 갱스터 랩의 선구자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미국 대중문화에서 힙합은 여전히 소외된 장르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중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David A. Canto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Tensions in Gangsta Rap," *Reviews in American History*, Vol. 34, No. 2, 2006, p. 244.

인 라킴(Rakim)의 노련하고 풍부한 경험으로 가득찬 영적인(spiritual) 읊조림을 특징으로 한다면, NWA는 이를 길거리로 끌어내려 로컬 상징과 거친 언어로 새롭게 코드화함으로써 청중을 사로잡았다.[2] 역사가 로빈 켈리의 말처럼, 그들은 "모험, 억제할 수 없는 폭력, 그리고/또는 에로틱한 판타지, 서버브의 지루함에 대한 상상적 대안"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청중, 특히 백인 청중을 게토로 끌어들이기도 했다.[3]

아이스 큐브의 솔로 데뷔 앨범인 AmeriKKKa's Most Wanted(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 1990)는 그가 갱스터 랩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물론 음반의 지배적인 목소리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었다. 그러나 힙합 저널리스트인 앨런 고든이 주장하듯이, 애리조나에 있는 대학에서 건축 도면을 전공하기도 했던 갱스터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와 자신의 사회적 조건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했다. 흑인 민족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이스 큐브는 두 번째 솔로 앨범인 Death Certificate(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 1991)에서 이 같은 힙합 음악의 정치화를 더욱 철저하게 추구하기에 이른다.[4] 음악적으로 Death Certificate는 아이스 큐브가 다른 래퍼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경쾌한

2) Jeff Chang, *Can't Stop Won't Stop: A History of the Hip-Hop Generation* (New York: Picador, 2005), p. 321.

3) Robin D. G. Kelley, *Race Rebels: Culture, Politics, and the Black Working Class* (New York: Free Press, 1996), p. 191; Kelley, *Yo' Mama's Disfunktional! Fighting the Cultural Wars in Urban America* (Boston: Beacon Press, 1997), p. 39. 적어도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갱스터 랩은 지배적인 사회 질서에 대한 상상적인 전복을 시도하는 정치적 장으로 기능했다. 예를 들어, NWA의 앨범 *Straight Outta Compton*에 실린 "Fuck Tha Police"에서 NWA의 멤버 Dr. Dre(본명 Andre Romell Young)는 판사로 등장한다. 피고인이 LAPD 소속 경관인 이들의 모의 법정에서 아이스 큐브는 검사의 역할을 맡았다. 1990년대 초 트리샤 로즈가 쓴 것처럼 힙합 음악은 "힘없는 자들의 연극"을 위한 "무대"였다. 그러나 14년 후 그녀가 고백하듯이, 힙합 음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윤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갱스터나 거리의 사기꾼 같은 인물의 사회적, 예술적, 정치적 중요성이 비정치적(apolitical)이고 단순하며 거의 희극적인 고정관념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른바 "하이퍼-갱스터화"(hyper-gangsta-ization)를 경험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힙합 음악은 S. 크레이그 왓킨스가 "힙합 자신의 파우스트적 거래"라고 불렀던 이러한 상업화 경로로 말미암아 흑인들에 의해 공연된 청각적 민스트럴쇼(sonic minstrelsy)로 퇴보하고 말았다. Tricia Rose, *Black Noise: Rap Music and Black Culture in Contemporary America* (Hanover, NH: Wesleyan University Press, 1994), p. 101; Rose, *The Hip Hop Wars* (New York: Basic Books, 2008), p. 2; S. Craig Watkins, *Hip Hop Matters: Politics, Pop Culture, and the Struggle for the Soul of a Movement* (Boston: Beacon Press, 2005), p. 2, p. 119.

4) Allen Gordon, "Ice Cube: Death Certificate," Oliver Wang, ed., *Classic Material: The Hip-Hop Album Guide* (Toronto: ECW Press, 2003), p. 87.

소리를 내다가 커다란 경적을 울리고, 삐걱거리지만 박자를 따라가면서 이를 되살리는 트럼펫처럼" 여느 래퍼들이 감히 시도할 수 없었던 능수능란한 래핑을 보여주었다.[5] Death Certificate는 또한 주제별로 구성된 앨범이었다. 앨범은 죽음과 삶이라는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전반부 오프닝 트랙에는 "The Funeral"이라는 제목의 곡이 배치되어 있고, 후반부는 "The Birth"라는 곡으로 시작한다. 아이스 큐브와 안젤라 데이비스 사이에 있었던 인터뷰에 따르면, 앨범의 이러한 구성은 매우 의도적이었다. 아이스 큐브는 죽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파트를 통해 흑인들의 정신적 죽음을 이야기하고자 했으며, 삶을 뜻하는 다른 파트에서는 운명과 스스로에 대한 흑인들의 의식을 일깨우고자 했다.[6]

음반이 발매되자마자 십만 장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진 Death Certificate에서 아이스 큐브는 흑인들에게 사망 진단서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 그의 노래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게토의 언어로 쓰였지만, 아이스 큐브는 더 이상 길거리의 싸움꾼이 아니다. 그는 심지어 이제 사회정치적인 가스펠송을 부르는 흑인 민족주의자로 등장한다. 아이스 큐브는 "The Funeral"에서 "깜둥이"(niggas)가 "비상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면서 앨범의 재킷 커버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기 때문이다. "내가 깜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1991년에도 우리는 정신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지식이 제한되어 있고, 그 결과는 깜둥이 멘탈리티이다. 젊은 흑인 남성이나 여성에게 가장 좋은 장소는 네이션 오브 이슬람(Nation of Islam)이다. 우리가 하나의 민족(people)으로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때 비로소 흑인이 될 수 있고 흑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7]

앨범 재킷 이미지는 아이스 큐브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그는 당시 로스앤젤레스 갱단의 상징과도 같았던 헤어스타일인 제리 컬(jheri curl)을 짧게 잘랐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스 큐브는 갱 스타일 복장을 하고 무표정하게 서 있거나 여기저기 앉아 있는 십여 명의 흑인 남성들과 정장과 나비넥타이를 매고 세 줄로 도열한 아홉 명의 네이션 오브 이슬람 보안 요원들 사이에 서서 "단결 아니면 죽음"이라는 글귀를

5) Brian Cross, *It's Not about a Salary…Rap, Race and Resistance in Los Angeles* (London: Verso, 1993), p. 63.
6) Ice Cube and Angela Y. Davis, "Nappy Happy," *Transition*, No. 58, 1992, p. 180.
7) Ice Cube, *Death Certificate* [CD] (Los Angeles: Priority Records, 1991).

1면 전체에 걸쳐 크게 게재한 흑인 민족주의 단체의 격주간 간행물 Final Call(『파이널콜』)을 읽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 장치들은 아이스 큐브가 민족주의자로 변모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흑인 민족주의에 비판적이었던 많은 로스앤젤레스 갱스터 래퍼들과 달리, 아이스 큐브는 다양한 이미지 전유를 통해 흑인의 민족주의적 자각과 부활을 촉구한 것이다.[8]

하지만 제프 창이 지적했듯이 아이스 큐브의 흑인 민족주의 전유의 이면에는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그의 반감이 담겨 있었다. 거기에는 또한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아시아계 상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불거진 흑인들의 "뿌리 깊은 지워짐(erasure)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었다. 삶이라고 명명된 앨범의 후반부에 수록된 곡 "Us"에서 아이스 큐브는 이러한 두려움과 반감을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일본놈들(Japs)이 내 동네의 모든 공터를 사들여 가게를 짓고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있지."[9]

이민자에 대한 아이스 큐브의 분노는 "Us"보다 앨범의 열다섯 번째 트랙인 "Black Korea"에서 더 격렬하게 폭발하였다. "Black Korea"는 스파이크 리 감독의 1989년 영화 Do the Right Thing의 한 대사로 시작한다. 영화에서 건장한 체격의 젊은 흑인 남성 라디오 라힘(Radio Raheem)은 항상 퍼블릭 에너미의 노래 "Fight the Power"가 크게 흘러나오는 붐박스를 들고 다닌다. 어느 날 붐박스에 사용할 D형 건전지 20개를 사기 위해 한인 이민자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게 된다. 그는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에 결국 부부에게 폭언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한인 부부의 남편은 라디오 라힘이 내뱉은 것과 같은 종류의 비속어를 반복하며 그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응한다. "Mother fuck you." 아이스 큐브의 "Black Korea"에는 바로 이 한인 상인의 욕설이 배경의 후렴구로 등장한다. 아이스 큐브는 또한 퍼블릭 에너미의 "Fight the Power"에서 "호른과 전자 기타의 날

8) 흑인 민족주의에 대한 서부 지역 래퍼들의 반감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Kelley, *Race Rebels*, p. 212.

9) Jeff Chang, "Race, Class, Conflict and Empowerment: On Ice Cube's 'Black Korea,'" Edward T. Chang and Russell C. Leong, eds., *Los Angeles: Struggles toward Multiethnic Communit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4), p. 88; Chang, *Can't Stop Won't Stop*, p. 346.

카로운 소리가 겹쳐진" 빠른 속도의 비트를 차용함으로써 곡의 경쾌함과 박진감을 높이는 데 있어 누구보다도 탁월한 솜씨를 보여주기도 했다.[10]

"엘비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웅이었지 / 하지만 그는 내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지 / 그 자식은 너무나도 명백한 인종차별주의자지 / 단순하고 분명하지 / 빌어먹을 그 녀석[엘비스]과 존 웨인 / 난 흑인이고 자랑스러우니까."[11] 퍼블릭 에너미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존 웨인 등 미국의 문화적 상징을 공격하며 백색 아메리카에 저항하는 노래를 불렀지만, "Black Korea"에서 아이스 큐브가 겨눈 총구는 흑인 커뮤니티에서 일하는 한인 상인을 향해 있었다.

Every time I wanna go get a fucking brew
I gotta go down to the store with the two
Oriental one penny counting mother fuckers
They make a nigger mad enough to cause a little ruckus
Thinking every brother in the world's on the take
So they watch every damn move that I make
They hope I don't pull out a gat and try to rob
Their funky little store, but bitch, I got a job
So don't follow me up and down your market
Or your little chop suey ass will be a target
Of the nationwide boycott
Juice with the people that's what the boy got
So pay respect to the Black fist
Or we'll burn your store, right down to a crisp
And then we'll see ya
'Cause you can't turn the ghetto into Black Korea
엿같은 맥주를 사고 싶을 때마다

10) Mina Yang, *California Polyphony: Ethnic Voices, Musical Crossroad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8), pp. 122-124.
11) 퍼블릭 에너미의 "Fight the Power" 가사는 다음 책에서 인용하였다. David Samuels, "The Rap on Rap: The 'Black Music' that Isn't Either," Murray Forman and Mark Anthony Neal, eds., *That's the Joint!: The Hip-hop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2004), p. 150.

두 인간이 있는 가게로 가야 해
동전 하나하나 세는 빌어먹을 동양인들
작은 소란이 일어날 정도로 깜둥이를 미치게 하지
세상의 모든 흑인들이 물건을 훔칠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내 염병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내가 총을 꺼내 강도짓을 하지 않길 바라지
그 인간들의 냄새나는 쪼그만 가게, 하지만 이 년아, 난 직장이 있어
그러니 가게에서 날 졸졸 따라다니지 마
안 그러면 찹수이나 먹는 너희 작은 동양놈들이 표적이 될 거야
전국적인 보이콧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힘, 그게 바로 그 녀석이 가진 것이야
그러니 흑인 주먹에 경의를 표해
안 그러면 네 가게를 가루가 될 때까지 불태워버릴 거야
그럼 잘 가라
너희들이 게토를 블랙 코리아로 바꿀 순 없으니까[12]

"Black Korea"는 1980년대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지역 흑인들의 억눌린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 노래는 무례하고 돈만 챙기는 한인 상인들에 대한 흑인 커뮤니티의 분노를 대변하였다. 아이스 큐브가 포착한 것은 작은 가게에서 흑인 고객의 움직임을 의심스럽게 곁눈질해 보면서 범죄시했던 한인 상인들에 대한 적개심이었다. "난 직장이 있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Black Korea"는 흑인 청년 실업자를 무시하는 한인 상인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곡이다. 나아가 흑인들의 외국인 혐오란 사실상 유색인종이 미국의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주인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Black Korea"는 이처럼 흑인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외국인 배척 정서에 목소리를 부여하기도 했다.[13] "Black Korea"는 또한 한인 상인들에게 흑인을 존중하도록 강요하면서 폭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

12) Ice Cube, *Death Certificate* [CD] (Los Angeles: Priority Records, 1991).
13) Regina Freer, "Black-Korean Conflict," Mark Baldassare, ed., *The Los Angeles Riots: Lessons for the Urban Future* (Boulder: Westview Press, 1994), p. 191.

니라 아이스 큐브는 한인 상인을 중국 음식 "찹수이"에 비유하는 인종적 욕설을 퍼부었으며, 흑인 게토를 지키고자 외지 상인들을 인종주의적인 방화로 위협하는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Black Korea"에 만약 들리지 않는 후렴구가 있다면, 그것은 25년 전 로스앤젤레스 왓츠 지역의 유태인 상점들을 불태웠던 시위대가 외친 "Burn, Baby, Burn"(모조리 훨훨 태워버려라)이라는 구호였을 것이다.

2

아이스 큐브의 음반이 발표되자마자 한인 커뮤니티는 정치적 힘을 발휘하였다. 1991년 11월 4일, 한미연합회(Korean American Coalition)는 다른 한인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업체에 해당 앨범의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아이스 큐브의 노래가 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계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종 혐오와 폭력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한미연합회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법률센터(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enter), 중국계 미국인 시민연합(Chinese American Citizens Alliance), 일본계 미국인 시민연맹(Japanese American Citizens League) 등 여러 단체의 지지를 받는 데 성공했다. 라티노 단체인 멕시코계 미국인 변호 및 교육 기금(Mexican American Legal Defence and Education Fund), 그리고 심지어 흑인 단체인 로스앤젤레스 어번 리그(Los Angeles Urban League), 남부 기독교 리더십 컨퍼런스(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등의 지원도 받았다.[14] 또한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은 해당 앨범이 매장에 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음반 유통회사인 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를 대상으로 한 항의 서한 보내기 캠페인을 촉구했으며, 톰 브래들리 시장에게는 앨범 배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11월 4일에

14) Korean American Alliance, "Press Release: Rap Album Denounced for Promoting Racial Violence," November 4, 1991 and "Press Release: KAC Releases Statement on Ice Cube Album," November 13, 1991, folder 9, box 4248, Tom Bradley Administrative Papers, Department of Special Collec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는 시장실의 김윤희 보좌관도 유통사에 "현재 매장에 진열된 모든 앨범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브래들리 시장에게 조언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무려 한 달 넘게 침묵으로 일관하던 시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요구를 받아들여 브라이언 터너 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 회장에게 "기업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냈다.[15]

한인 커뮤니티는 아이스 큐브의 앨범을 격렬하게 규탄했던 로스앤젤레스 유태인 커뮤니티에서 또 다른 동맹을 발견했다. 아이스 큐브의 매니저였던 유태인 제리 헬러의 살해를 부추긴 마지막 트랙 "No Vaseline"은 로스앤젤레스 유태인 인권단체 사이먼 비젠탈 센터(Simon Wiesenthal Center)의 부주임 사제 랍비 에이브러햄 쿠퍼가 전국 4대 음반 유통회사인 뮤직 랜드, 타워 레코드, 웨어하우스 레코드, 뮤직 플러스에 앨범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사태를 초래했는데, 이는 분명 한인들의 캠페인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16] 그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는 음악 산업 전문지 『빌보드』로부터 외곽 지원을 받기도 했다. 『빌보드』는 Death Certificate 앨범이야말로 "가장 악취가 나는 인종주의와 증오심 유발"을 표현했다는 혹독한 비판을 했으며, 소매업체와 음반사에 아이스 큐브가 표출한 증오심에 항의할 것을 촉구하였기 때문이다.[17] "Black Korea"가 유발한 한인들의 집단적인 대응은 이러한 지원을 무기로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11월 초까지 앨범의 선주문은 이미 100만 장 이상 쏟아졌다. 혹평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혹평 때문에 아이스 큐브의 앨범은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렸

15) *Korea Times*, November 11, 1991; A letter sent to Mayor Bradley by Korean Restaurant Owner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November 15, 1991; Yoon Hee Kim, "Rap Group Ice Cube's New Album Entitled 'Death Certificate' (Latest Incident of Current B/K and Race Relations Issues)," November 4, 1991; A letter sent to Bryan Turner by Mayor Bradley, December 12, 1991, folder 9, box 4248, Tom Bradley Administrative Papers.

16) *Los Angeles Times*, November 2, 1991. 사이먼 비젠탈 센터는 이전에 건즈 앤 로지스(Guns N' Roses), 퍼블릭 에너미, 마돈나의 노래에 반유태주의가 담겨 있다고 항의한 적은 있지만, 이들의 노래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한편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유태인이 사이먼 비젠탈 센터의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록 음악 매니저이자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남가주 지부 의장인 대니 골드버그는 사이먼 비젠탈 센터가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Korea Times*, November 25, 1991 (Reprinted from Naomi Pfefferman's date unknown article in the *Jewish Journal*).

17) *Billboard*, November 23, 1991.

다. 한인타운의 어느 한 대형 쇼핑센터 벽에 붙어 있던 자필 포스터에 따르면, 몇몇 한인 상인들은 매출 손실이 사업에 타격을 줄 정도로 클 것이라는 이유로 앨범 불매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다.[18] 전국 4대 음반 유통회사는 계속해서 앨범을 판매했다. 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의 브라이언 터너는 아이스 큐브의 수사가 "일종의 마초적인 욕지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를 옹호하였다.[19] 미 서부 지역 힙합 역사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했던 이 음반 유통사는 『빌보드』 전체 역사상 공식적인 비난의 표적이 된 앨범은 Death Certificate가 유일하다고 불평하면서, 이 앨범은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래퍼의 좌절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0]

한인 커뮤니티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비록 아이스 큐브의 앨범 유통을 막지는 못했지만, 한인들은 이제 맥주회사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McKenzie River Corporation)을 상대로 경제적 힘을 발휘해 아이스 큐브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이 주류회사는 40온스 병으로 판매되는 몰트 리커 맥주(malt liquor beer) 세인트 아이즈(St. Ides)를 제조하고 각종 광고에 아이스 큐브를 등장시켰다. 미국 평균 맥주의 알콜 도수가 3.5%이던 198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콜트 45(Colt 45)처럼 알콜 함량이 높았던 몰트 리커 맥주는 주로 흑인 노년층이 선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몰트 리커 맥주 선전에는 R&B/소울 뮤지션이 등장하곤 했다. 1986년 세인트 아이즈를 출시했던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도 소울 그룹인 포 탑스(Four Tops)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새롭게 대두한 힙합 음악이 인기를 모으기 시작하고, Run DMC, NWA와 같은 래퍼들이 자신들의 노래에서 Olde English 800 등 몰트 리커 맥주의 실명을 언급(name check)하는 관행이 확산되자, 몰트 리커 시장은 1980년대 후반에 크게 확장되었다. 급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은 포 탑스를 광고 모델로 더 이상 기용하지 않고 급성장하고 있던 서부 갱스터 래퍼들을 광고에 등장시켜 세인트 아이즈에 "게토중심적"(ghettocentric) 이미지를 새겨 넣음으로써 새로운 소비자, 특히 저소득층 지역의 젊은 흑인 소비자들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

18) 『한국일보』 1991년 11월 9일.
19) *Los Angeles Times*, November 2, 1991; *Korea Times*, November 25, 1991.
20) *Billboard*, December 14, 1991.

덕분에 세인트 아이즈는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고 1991년에는 몰트 리커 맥주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다.[21]

세인트 아이즈라고 하는 몰트 리커 맥주의 브랜드 이미지 변화를 이끌었던 아이스 큐브. 그가 부른 "Black Korea"에 항의하기 위해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인 식료품점 상인들은 자신들의 구매력을 총동원하였다. 11월 초, 이들은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이 광고에 아이스 큐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인트 아이즈 판매와 주문을 중단하고 배달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세인트 아이즈 불매 운동은 롱비치, 파코이마, 샌퍼난도 밸리,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수많은 한인 식료품점으로 확산되었다.[22] 한인식품상협회(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는 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회원들에게 세인트 아이즈 불매 운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지는 않았지만, 맥켄지 리버가 아이스 큐브와의 관계를 끊기를 원했던 것은 매한가지였다. 한인식품상협회가 불매 운동을 발 벗고 조직한다면,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분명했다. 1990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협회는 총 매출 규모가 16억 달러에 달하는 3천여 개의 한인 식료품 및 주류 소매업체들을 대표하고 있었다. 이처럼 커다란 매출액 가운데 주류와 맥주가 무려 26%를 차지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북미 지역으로 범위를 확장시켜보면, 총 1만 5천여 개의 한인 식품상점들이 연간 1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었다.[23]

세인트 아이즈 불매 운동에 화들짝 놀란 맥켄지 리버의 사장 마이노트 웨싱어(Minott Wessinger)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급히 로스앤젤레스로 날아와 한인식품상협회 이사들과 회의를 가졌다. 오리건주의 유명한 독일계 양조업자 헨리 와인하드(1830~1904년)의 후손인 웨싱어는 아이스 큐브가 갈등을 조장하는 앨범을 제작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아이스 큐브의 모습이 담긴 홍보물을 주류 판매점에서 철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웨싱어는 아이스 큐브가 등장하는 모든 광고를 중단하고 그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확답을 망설였다. 또

---

21) Eithne Quinn, *Nuthin' but a "G" Thang: The Culture and Commerce of Gangsta Rap*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pp. 1-3.

22) 『한국일보』 1991년 11월 8일.

23) National Korean-American Grocers Association, "Organization Profile," *National KAGRO Journal*, Vol. 1, No. 1, 1991, pp. 30-31, folder 24, box 4245, Tom Bradley Administrative Papers.

한 11월 12일자 『한국일보』에 실린 대형 광고에서 그는 맥켄지 리버는 아이스 큐브에 힘을 쓸 수 없는 작은 기업이라고 변명하였다.[24] 사태가 결국 이 지경에 이르자 전국한인식품상협회(National 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는 여러 지역에 있는 협회 지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맥켄지 리버가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짧은 시간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시애틀, 타코마, 포틀랜드,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리치몬드, 워싱턴 DC 등에 있는 약 5~6천 개의 한인 상점들이 세인트 아이즈 불매 운동에 동참했고, 이로 말미암아 맥켄지 리버는 700만 달러의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25]

11월 20일,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은 한인식품상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스 큐브가 등장하는 TV 및 라디오 홍보물을 중단하고 더 이상 그를 광고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26] 맥켄지 리버는 또한 아이스 큐브에게 연락해 "Black Korea"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입장을 알리겠다고 약속했다.[27] 나아가 맥켄지 리버는 아이스 큐브가 한인식품상협회의 임원인 김양일과 데이비드 김 등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식품상협회의 간부에 따르면, 1992년 2월 3일에 열린 이 회동에서 아이스 큐브는 자기 음악의 특징을 흑인들의 "과도한 표현"(excessive expressiveness)으로 설명하면서, 결코 한흑갈등에 기름을 부을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였다. 아이스 큐브는 회동 5일 후 김양일 회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의도가 한인들을 불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 한인들을 존중한다고 강조하였다.

---

24) 『한국일보』 1991년 11월 9일; 『한국일보』 1991년 11월 12일; *Korea Times*, November 18, 1991.

25) Jeff Chang, "Race, Class, Conflict and Empowerment," p. 97; Pyong Gap Min, *Caught in the Middle: Korean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p. 147.

26) 『한국일보』 1991년 11월 22일. 한편, 『빌보드』에 따르면 웨싱어는 이러한 조치를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그는 "Black Korea"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면 아이스 큐브와 계속 작업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Billboard*, December 14, 1991.

27) 『한국일보』 1991년 11월 22일.

"저는 앨범 Death Certificate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거나 어떤 종류의 폭력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한국계 미국인이나 모든 한국계 미국인 상인들을 겨냥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인들을 존중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실제 문제를 겪었던 몇몇 가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커뮤니티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 과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국을 순회할 때 저는 팬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상점주나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당부할 것입니다.[28]"

28) A facsimile message sent to Yoon Hee Kim by Annie E. Cho,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March 6, 1992, folder 24, box 4245, Tom Bradley Administrative Papers. 아이스 큐브의 편지는 애니 E. 조가 보낸 팩스 메시지에 첨부되어 있다.

제3세션

김만권 (경희대학교)

다원성과 공동체 : 이주민과 '겹' 공동체

발표 5

다원성과 공동체 : 이주민과 '겹' 공동체

김 만 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열린 경계'를 향한 백래시
Ⅲ. 마이클 월저의 자유주의 공동체론
Ⅳ. 이주노동자와 공동체: 네팔 이주노동자의 사례
Ⅴ. '국가' 공동체 위의 공동체: 유럽연합의 사례
Ⅵ. 나가며: 이주민과 '겹' 공동체

Ⅰ. 들어가며

이 발표문은 21세기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치공동체가 맞고 있는 두 가지 도전, '다원성'(plurality)과 '열린 경계'(open border)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입장에서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한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에 일어난 '열린 경계'를 향한 백래시를 통해 '정치공동체로서 국가', '다원성', '열린 경계'가 어떤 역학 관계에 놓여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자유주의 공동체 문화에 기반해 다원성을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마이클 월저'(Michael Walzer)의 논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왈저의 다원적 평등 이론의 입장에

서 열린 경계와 다원성을 수용하는 방안으로서 우리나라의 네팔 이주노동자의 사례를 살펴본다. 넷째, 지구화 시대에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열린 경계와 다원성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관련하여 국가공동체보다 수준을 높여 대응한 '유럽연합'의 사례를 '아미타이 에치오니'(Amitai Etzioni)의 이론과 연계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례들을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를 '겹'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Ⅱ. '열린 경계'를 향한 백래시

1980년대 들어서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체성을 갖춘 정치공동체는 두 가지 새로운 도전 앞에 놓이게 되었다. 첫 번째 도전은 개인의 다원성이 집단의 문화적 다원성의 문제로 확장되며 생겨난, '정치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집단이 지닌 정체성의 다원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두 번째 도전은 지구적 시장의 구축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이자 동조 현상으로 부상한 포스트베스트팔리아(post-Westphalia)의 이상이 요구하는 '열린 경계'(open border), 특히, 국민국가의 경계를 개방하라는 요구였다.[1] 이 두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구화 현상과 함께 일어난 거대한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국가공동체 내에서 집단 정체성의 다원성을 더욱 확장하고 동시에 열린 경계에 대한 요구 역시 증폭했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열린 경계'에 대한 요구는 많은 국가에서 백래시에 처하게 되었다. 저개발 국가의 거주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로의 이주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였던 반면,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의 노동계급은 이를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이 이렇게 느낀 데에는 명백히 이유가 있었다. 지구적 시장이 구축되며 본격적으로 제기된 열린 경계에 대한 요구는 자본계급에게 부와 소득을 몰아준 반면, 노동계급의 부와 소득은 정체되거나 실질적으로는 감소했기 때문이

1) 베스트팔렌과 포스트베스트팔렌의 구분은 Richard Falk, "Revisiting westphalia, discovering post-westphalia" in *The Journal of Ethics* 6 (4): 311-352 (2002)을 참조하라.

다. 한편 자본으로부터 열린 경계에 대한 요구를 마주했던 국가는 노동계급에 대한 공적 보호 체계를 낮추거나 해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열린 경계'의 요구 앞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의 미숙련 노동자들은 실업의 위기에 내몰렸고, 이들은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의 지적처럼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와는 달리) 국경 안에 갇혀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일이 일어났다.[2)]

이런 열린 경계가 만든 경제적 모순은 자본계급이 만든 것이었지만, 자본은 이미 초국적 존재가 되어 영토 내 갇힌 노동자들이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본이 영토 내 노동자의 저항을 마주한다면, 그 영토를 떠나는 것으로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거대한 규모의 초국적 자본을 잃는다는 것은 국가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는데, 이 거대 자본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본에 대한 효과적 저항의 통로가 막힌 입장에서, 열린 경계가 만들어내는 고통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발전한 국가의 영토로 이주한 이주민들에게 전가되었다. 이주자들과 함께 들어온 문화적 '이질성'은 당연히 손쉬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문제를 만든 이는 따로 있고, 문제를 만든 이들이 이윤을 내기 위해 이용한 이들에게 그 비난이 전가된 셈이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런 비난의 전가에 대한 옹호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라는 입장으로 포장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명백히 '공동체주의'는 정치공동체에서 '성원권'(membership)을 강조하기 때문에 '열린 경계'에 대한 요구에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는 문화적 특수성과 그 방어의 논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하지만 이런 방어 논리가 '공동체주의'만의 것은 아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치공동체라 할지라도 '시민권'은 배제의 논리를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그리고 아무리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지켜온 문화적 정체성을 방어하려고 한다. 극단적 세계시민주의의 입장에서 국민국가의 시민권과 문화적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권 차원에서 배제의 논리와 문화적 차원에서 정체성의 논리는 어느 정치공동체나 작동하기 마련이다.

---

2) Bauman, *Collateral Damage* (2011)을 참조하라.

그렇기에 공동체주의 이론에서 이런 배제와 정체성의 논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생산적 논의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공동체주의 내에는 다원성과 열린 경계에 대한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론적 탈출구가 존재하는 것일까? 만약 그런 이론적 탈출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논리로 구성되고, 어떤 사례로 증명될 수 있을까?

Ⅲ. 마이클 월저의 자유주의 공동체론

1. 공동체주의 이론의 다양성

많은 이들이 공동체주의를 하나의 일관적 이론이 있는 정치 사조로 보지만, 실제 공동체주의를 관통하는 독자적이며 체계적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이론적 입장이 존 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 대해 비판하는 이론적 흐름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공동체주의가 형성될 무렵 이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알러스터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마이클 왈저 등이 있었다. 이 세 학자는 각자의 고유한 이론적 입장에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고, 그 과정에서 롤스와 자유주의 입장의 권리주의자들을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서 최소한 공통점을 뽑아내어 이를 '공동체주의'라고 불렀던 이가 바로 마이클 샌델이다. 흔히 공동체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로 이 네 명이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체계적인 이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입장을 관통하는 중요한 몇 가지 기조가 있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공동체는 개인이 좋은 삶(good life)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다. 둘째, 이런 이유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가 형성해 온 사회적 가치와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때 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셋째, 각각의 공동체마다 공유된 사회적 가치는 다르므로, 보편적인 권리와 자원의 분배 원칙이나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이런 이유로 각각의 정치공동체는 영토와 구성원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자율성을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공동체주의는 열린 경계와 함께하는 지구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정치 사조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런 일반화는 공동체주의를 오해한 방식일 수 있다. 오히려 공동체주의의 이론을 조금만 엄격하게 따져보아도, 하나의 정치공동체가 열린 경계에 얼마나 개방적인지는 어떤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동체주의는 다른 사회적 가치, 이로 인해 다른 문화적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공동체에 그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보편적인 권리와 자원의 분배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주장할 뿐이다.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 및 문화와 전혀 상관없는 보편적 분배원리는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폭력적일 수 있다. 이들이 문화적 맥락에 상관없이 개인의 권리 차원에서 "정의의 두 원칙"이라는 보편적 원리에 따라 권리와 자원을 분배하는 롤스의 자유주의를 한결같이 비판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은 각 국가의 경제체제나 역사적 맥락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처방하는데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평가하자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는 '열린 경계'와 '다원성'에 대한 요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누가 우리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아닐지는, 우리 정치공동체를 이루는 역사적 맥락, 문화적 맥락, 더 나아가 구성원 다수들이 공유한 가치에 달려 있다.

현실에서 보면, 포스트베스트팔리아 시대의 '다원성'과 '열린 경계'에 대한 동시적 요구는 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로 향한다. 아주 간략히 그 이유를 말하자면 권위주의 국가들이 주로 저개발 국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공동체주의 입장은 '자유주의 문화'를 배경으로 구축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공동체주의를 대변해 온 대표적 이론가가 마이클 월저(Michael Walzer)다. 그렇다면 마이클 월저는 이 문제에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

2. 월저와 영역의 정의

월저의 이론은 자유주의 공동체 입장에서의 다원성과 이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 간의 평등을 옹호한 대표적 이론이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월저는 공동체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체계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분배과 다원성을 옹호하는 이론을 제시했다.

월저의 분배 정의론은 한마디로 '다원적 가치의 평등한 영역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자유주의 정치공동체에는 정치는 정치에 적합한 가치(권력), 경제는 경제에 적합한 가치(돈), 교육에는 교육에 적합한 가치(명예) 등 각각의 영역에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존재하고, 이 가치들이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에서만 역할을 다할 때 사회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월저는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이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형성되어 아주 다양하기에 다른 가치를 압도할 수 있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럼에도 단일한 가치가 다른 가치를 부당하게 이용하기 위해 독점하는 현상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존재해 왔다. 예를 들어 신체적 힘, 가문의 명예, 종교적 정치적 공직, 토지 재산, 자본, 전문 지식 등과 같은 것들이 시대를 달리하며 지배적이었다. 월저는 어떤 하나의 지배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를 독점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데올로기라 부르며, 이데올로기를 통해 다른 사회적 가치를 장악하는 일은 정의가 아니라 강탈이라 규정한다.[3] 다행히도 자유주의 정치공동체는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를 지배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해 왔다. 더하여 자유주의 사회는 정치적 평등주의를 수용했기 때문에 지고한 강자도 없고, 공포도 없어서 약자가 아부해야 하고 노예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4] 이런 맥락에서 월저는 자유주의 공동체에서 국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이 독점적으로 소유되어 있으면서 어떤 특정한 가치도 일반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사회를 생각해보자. 만약 이러한 사회에서 국가의 개입을 계속 금

3) Michael Walzer, *Spheres of Justice*, p. 12.
4) Walzer, *Spheres of Justice*, p. xiii.

지할 경우 사회적 가치들은 지금도 사실상 그렇지만 앞으로도 독점적으로 소유될 것이다. 반면 다원적 평등주의 사회에선 소규모의 불평등이 다수 존재할 것이지만, 불평등이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증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이 상이한 가치들을 아우르면서 통합되지도 않을 것이다."[5]

간략히 말해 왈저의 입장에선, 각 영역에서 소규모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하나의 지배적 가치가 다른 영역의 사회적 가치를 독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월저는 지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이나 복종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파스칼의 "전제는 하나의 수단을 통해 그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자 하는 바램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지배적 가치로 다른 가치를 종속시키는 것을 '전제'(tyranny)라고 규정한다.[6]

이런 영역 간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의 다원성을 방어해야 한다는 정의의 입장은, 집단 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특히 자유주의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예를 들어, 다문화주의)을 다루는 사회적 가치는 관용(toleration)이다.[7] 물론 각각의 정치공동체마다 다른 형태의 관용이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과 같이 이주민이 이룬 사회에서 관용은 문화적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로서 실천적 차원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어 왔으며, 더하여 이런 관용의 가치가 제도로 구현되어 왔다.

하지만 관용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다른 시대, 다른 공간의 공동체에 존재하는 만큼 관용의 한계는 언제나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특정 시기, 특정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사회적 가치이다. 자유주의 공동체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면,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를 지배하는 일, 특히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일이다. 그 가운데 소규모의 불평등은 존재할 수 있다.

---

5) Walzer, *Spheres of Justice*, p. 17.
6) Walzer, *Spheres of Justice*, p. 18.
7) Walzer, *Toleration*.

3. 월저와 성원권, 열린 경계: 난민과 이주노동자

월저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국가들은 자신들의 영토로 이주하길 바라는 사람들, 이민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마주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주를 바라는 모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공동체로서 각 국가는 자국의 규모와 특성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풍요롭고 자유로운 국가들은 이방인들(strangers) 중 누구를 '우리'의 구성원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리고 이 결정은 이미 멤버십을 소유한 이들, 즉 시민권을 소유한 이들이 내린다.

물론 월저는 위험에 처한 이방인을 도와야 할 의무를 인정한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도움은 일시적이다.[8] 특히 이방인에 대한 도움이 성원권(시민권) 분배 문제와 연결될 때, 이 일시성은 공동체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안전히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a. 난민의 경우: 그렇다면 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방인으로서 난민들의 경우는 어떨까? 자신이 살던 국가가 가하는 박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로서 난민들이 무엇보다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할 권리, 시민권이다. 월저는 자유란 특정 국가의 보호가 있는 영토에서만 유지될 수 있기에 이들을 영토적으로 수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 난민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국가 안에서 기존 성원이 누리는 자유가 반드시 감소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난민 수용에 어느 정도 적극성을 보인다. 난민들의 숫자가 적다면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난민의 숫자가 증가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선별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선별기준은 난민들이 수용하는 국가에서 '기존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생활방식과 얼마나 더 직접적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는가이다. 예를 들어, 월저는 "권위주의와 편협한 신앙의 희생자들 모두가 자유주의적 시민들의 도덕적 동지들"이라 말한다.[9] 그리고 1956년 헝가리 혁명의 예를 들며, 미국이나 영국이 헝

8) Walzer, *Spheres of Justice*, p. 33.
9) Walzer, *Spheres of Justice*, p. 49.

가리에서 자유를 추구하다 쫓겨난 난민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국가들이 축출된 스탈린주의자들에게까지 피난처를 줄 필요가 없다. 월저는 난민들이 호소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런 정치적, 문화적 접점이라고 주장한다.[10]

월저는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안전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지만, 이 권리가 특정 국가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난민들이 처한 고난의 상황은 일시적 수용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 더하여 이들을 보낼 수 있는 곳에 여전히 박해의 위험이 있다면, 결코 이들을 추방해서도 안 된다는 조건도 덧붙인다.[11]

b. 이주노동자의 경우: 월저는 더하여 이방인들이 특정 정치공동체(국가) 안에 정당하게 거주하고 있다면, 자신이 사는 공동체 내에서 주어지는 "시민권과 제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가?" 질문한다. 이에는 난민과는 전혀 다른 승인과정, 귀화가 요구된다.[12]

월저는 한 정치공동체가 자신의 영토 안에 누군가 발을 들여놓도록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정이라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입국을 승인한 기존 구성원들은 승인을 받아 입국한 이방인들을 의무를 분담하는 평등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13] 이주해 온 이들 역시 의무를 분담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다수 국가가 자국민들을 힘들고, 어렵고, 불쾌한 노동에서 벗어나도록 입국을 승인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들이 영토 밖에서 온 손님, '이주노동자들'(Guest Workers)의 존재다.

월저는 이런 방식의 이주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하는데, 이는 "국가가 마치 하인을 거느리고 사는 가족"과 같은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월저가 볼 때 이것은 자신이 가장 경계하는 '전제'의 방식이다. 내가 잘사는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자격만으로 그렇지 못한 구성원을 하인으로 부릴 자격을 얻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외국인을 이런 방식으로 대우하는 방식은 고대 아테네 시대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10) Walzer, *Spheres of Justice*, p. 50.
11) Walzer, *Spheres of Justice*, p. 50.
12) Walzer, *Spheres of Justice*, p. 52.
13) Walzer, *Spheres of Justice*, p. 52.

만, 그때는 시민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랐다. 아테네인들은 시민권이 자신들이 분배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출생과 혈통에 관계된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 있던 외국인들이 아테네인에게 요구했던 것은 공정한 대우였다.[14] 그러나 근대 이후의 세계는 다르다. 더는 이런 인식적, 개념적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정치공동체는 자기 판단에 따라 시민권을 분배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풍요한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미래에 시민권을 소유할 수도 있는 잠재적 구성원이 아니라 '손님'이어야만 한다.[15]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는 세력으로 합류한다면 이들은 일시적으로 낮은 지위를 차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노동세력의 일부가 될 것이다. 최악의 상태는 이들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기존의 노동자들과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언제나 정해진 기간에 특정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만 머물 수 있다. 노동에서 벌어들이는 임금만이 유일한 보상인 경우가 허다하다.

월저는 이런 외국인 노동 체제를 경제적으로는 노동의 유연성에 기반한 국제연대체제이지만 정치적으로는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국가적 현실이 서로 결합해 탄생한 것이란 발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면 아무리 손님일지라도 외국인 노동자 역시 정치공동체 내에서 통치를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압제자로서 일군의 시민들의 통치를 받고 있다."[16]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약을 맺을 때 이런 현실을 다 알고 있다는 논변도 가능하다. 하지만 월저는 이것이 단기적 시장 거래를 정당화할 수 있어도 '민주정치'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결정하고 실행하고 규칙까지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서 정치권력은 피통치자들의 지속적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때 피통치자란 영토 안에서 정치권력의 결정과 실행에 강제되는 모든 이들을 포괄한다.[17] 국가권력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수용된 영토 내에서 삶의 틀을 형성하고 일거수일투족까지 규제한다. 그런데도 국가 권력은 이들에게 어떤 견해도 묻지 않는다.[18]

---

14) Walzer, *Spheres of Justice*, p. 53-54.
15) Walzer, *Spheres of Justice*, p. 56.
16) Walzer, *Spheres of Justice*, p. 58.
17) Walzer, *Spheres of Justice*, p. 58.
18) Walzer, *Spheres of Justice*, p. 59.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진정한 정체성은 '손님'이 아니다. "그들은 노동자다." 우리가 그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기에 이곳에 와 있다. 그 이유로 와서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계급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적실한 원칙은 상호 부조(mutual aid)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정의(political justice)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노조원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월저는 이 정치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쓴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내부의 삶을 형성하는 자치의 과정들은, 그 영토 안에 살면서 그 지역 경제에서 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 법률의 지배를 받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19]

간략히 말해, 외국인 노동자로서 입국을 승인받은 자들에게 한정하여 2차 승인과정인 귀화의 과정, (잠재적) 시민권을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시민권 개방의 핵심 이유는 이방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전제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Ⅳ. 이주노동자와 공동체: 네팔 이주노동자의 사례

이주노동자에게 (잠재적)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월저의 주장은 상당히 급진적이다. 영토에 기반을 둔 정치공동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점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각각의 공동체마다 내려온 정치문화적 전통이 있다. 자유주의 정치문화에서는 한 가치가 다른 가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가치가 다원적 평등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월저에게 이런 요구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시민권이라는 권리로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한 마디로 자유주의적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시민권을 주어야 한다는 정치적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

19) Walzer, *Spheres of Justice*, p. 60.

특히 이 발표문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국가에서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왈저의 주장에 주목하는데, 이와 관련해 유의미한 사례가 우리 정치공동체에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자신들을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 했던 사례다.[20]

1990년대 초,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수용하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착취를 경험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주노동자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법과 제도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관광비자, 편법적 상업연수생 제도 등으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노동시장이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사업주의 감시와 같은 일상적 인권 유린과 노동 착취에 쉽게 노출되었다."[21]

이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조직적인 저항을 전개했다. 이중 네팔 노동자들이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이들은 "산업재해 보상을 요구하는 농성 외에 산업연수제도 폐지 농성, 강제추방반대 농성, 노동조합 설립 운동 등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투쟁"을 이끌었다.[22] 한국에서 벌어진 인정투쟁은 네팔에서도 이어졌다. 이들은 네팔의 입국 브로커들의 횡포에 맞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네팔과 한국 양쪽의 공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대표적 사례로 가장 악명 높았던 인력송출회사 룸비니를 퇴출했다. 이뿐 아니라 네팔의 노동조합총연맹 지펀트(GEFONT)와의 연계도 형성하고, 네팔 정치권에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한국에 대사관 설치를 촉구했다.[23] 지역적으로는 자기 고향 마을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도로와 수도를 건설하는 기금도 조성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서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는 투쟁의 경험은 이들이 한국이라는 공동체에 더 애착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더하여 본국의 가족, 시민사회, 정치세력과 교류하면서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네팔인으로서 정체성 역시 강화되었다. 이들이 경험한 이중적 정체성의 강화는 귀환 이주노동자들이 만든 예커타 신용협동조합에서 잘 드러난다.

---

20) 이 사례는 양혜우 (2021), " '이주노동 없는 공동체'를 위한 귀환 이주노동자의 꿈 - 네팔 다목적 협동조합 에커타(Ekata)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77호: 147-175에서 왔다.
21) 양혜우, 148쪽.
22) 양혜우, 148쪽.
23) 양혜우, 148-149쪽.

‘에커타’(Ekata)는 ‘우리’라는 뜻이다.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라는 말에 감정적으로 크게 공감했는데, 카스트제도가 존재하는 네팔인들에게 ‘우리’라는 말이 보여주는 평등한 결속력이 호소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에커타의 창립자는 한국에서 일했던 동료들과 친척들 65명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주노동으로 더는 존엄성이 짓밟히지 않고, 노동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으며 이주로 인한 가족의 해체로 고통당하지 않는 사회를 ‘우리’ ‘다 같이’ 만들자”는 의도였다. 현재 에커타는 단순한 귀환 이주노동자들의 플랫폼을 넘어 한국의 여성단체와 연결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가부장적 생활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24]

이처럼 이주노동자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은 네팔에 돌아간 이후에도 한국에서 만든 인연을 발판 삼아 학교설립, 장학금 지원, 지역개발 운동에도 나섰다. 이는 한국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초국적 차원에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한 사례라 볼 수 있다.

V. ‘국가’ 공동체 위의 공동체: 유럽연합의 사례

20세기 들어 공동체주의 이론이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 정치공동체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다. 예를 들어, 아미타이 에치오니(Amitai Etzioni)는 『제국에서 공동체로』(2004)에서 지역 공동체들에서부터 지어지는 ‘글로벌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를 제안한 적이 있다.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지구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들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동체의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는 발상이 담겨 있다. 이런 발상과 서로 상응하는 사례가 1992년에 만들어진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다. 제임스 골드가이어(James M. Goldgeier)는 유럽연합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공동체주의 이론이 국제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이론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25]

현재 유럽연합은, 역사적으로 볼 때 회원국 간의 적대 관계를 넘어 정치공동체에

24) 양혜우, 158-163쪽.

25) Goldgeier (2005), “A Communitarian Future: What Can the EU Experience Teach U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48 No. 12: 1547

까지 이른 가장 적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두 번의 세계 대전의 유산으로 만들어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1952)에서 출발해,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1957)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작에는 참여국가들이 맺은 약속의 실체로서 파리조약, 로마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있었다. 2009년에는 리스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의 주요기구들 간의 관계, 그리고 주요기구들과 유럽시민들 간의 관계가 다시 재구성되었다. 단계적 계약을 통해 정치적 공동체로 진화한 사례다.

유럽연합은 초기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모순적인 체제일 수 있다. 회원국들이 자기 정치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가치를 자율적으로 분배할 권리를 더 상위 공동체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피상적 분석일 뿐이다. 유럽연합을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보조성'(subsidiarity)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회원국에게 개입하는 경우는, 회원국이 맞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이다. 유럽연합은 문제 해결의 차선책이다. 고유한 정치공동체로서 회원국의 자율성을 우선으로 하여 최대한 존중하면서 개입하는 방식이다.[26] 한편 이 원리는 큰 공동체와 작은 공동체가 갈등할 경우, 큰 공동체에서 널리 공유된 가치가 더 존중받는다는 실천적 문제 해결 방식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반대로 국가 공동체보다 더 작은 소수자 공동체 역시 존중받는다는 점도, 월저의 다원적 평등의 이론에서 볼 수 있는 전제를 거부하는 자유적 공동체의 가치와 상응한다.

무엇보다 각 정치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유럽연합의 정신은 언어정책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현재 24개의 언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받고 있으며 EU의 모든 정책은 이 공식 언어를 포함하여 소수집단이 쓰는 언어로까지 옮겨진다. 언어가 유럽의 국가 및 공동체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요소라는 점에서, 각 정치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존중하는 공동체주의 입장과 상응하는 중요한 접점이다.

여기에 더해 유럽연합이 '유럽 시민권'을 회원국의 시민들에게 분배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요소다. 회원국 시민들은 유럽 시민권을 통해 이중의 보호망을 획득했

26) Goldgeier, 1548.

다. 무엇보다 유럽시민권은, 시민권이란 국가공동체가 독점하는 권리란 편견을 깨뜨렸다. 더하여 셍겐 조약을 통해 국경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리는 이동의 자유뿐 아니라 회원국 간에 이주노동 자체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유럽연합의 시민들은 어느 회원국에서든 회원국 자국 노동자들과 동등한대우를 받는다.[27] 또한 "「유럽경제지역수립협정(Agreement creating the European Economic Area)」 및 「자유로운 인적 이동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the Free Movement of Persons)」에 따라 이동의 자유가 적용되는 영역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4개국(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을 포함"하고 있다.[28]

이런 유럽연합의 결속력은 브렉시트 이후에 탈퇴가 이어지리라던 예상과 달리 더 이상의 탈퇴국이 없다는 데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Ⅵ. 나가며: 이주민과 '겹' 공동체

21세기 들어 다원성과 열린 경계를 수용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많은 국가에서 백래시가 일어났다. 이 백래시는 우파 포퓰리즘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를 통해 어려움에 빠진 자국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지지를 얻어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공동체의 이익과 문화'의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웠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트럼프와 브렉시트의 사례였다.

하지만 왈저의 다원적 평등 이론에서 볼 수 있듯, 자유주의적 공동체 이론은 국경에 대한 통제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국경 내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노동력을 제공하러 온 이들에 대한 (잠재적) 시민권 부여를 옹호한다. 월저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잠재적) 시민권을 부여하고, 노동의 계약이 끝났을 경우 돌아갈지 남을지 결정할 권리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7) 'EU기능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45조에 근거한 것이다.

28) 조동희 외,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년 12월 24일)

한편 에치오니의 '지구적 공동체'론에서 볼 수 있듯 지구화 시대의 공동체가 국가공동체를 넘어 더 확장된 형태로 나아가는 것에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 역시 각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지구적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이것을 국가공동체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제 국가보다 확장된 가치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 두 공동체주의 이론에 상응하는 각각의 사례로서 '한국의 네팔 이주노동자'와 '유럽연합'을 살펴보았다.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사례는 (시민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자라는 지위에 상응하는 권리를 얻으려는 노력 자체가 정치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자신이 출생한 공동체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네팔 노동자는 두 정치공동체에 동시에 속하는 경험을 하고 정체성 역시 두 공동체에 동시에 뿌리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서로 다른 정체성의 동시성에 상응하는 사례로서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여 베스트팔리아에서 확보된 국가 정치공동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연합차원에서 시민권을 분배하며 포스트베스트팔리아의 이상에 한발 다가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성 속의 조화'(In varietate concordia)라는 슬로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들은 자국의 보호, 더하여 유럽연합의 보호를 받으며 두 가지 다른 수준의 정치공동체에 동시에 속하는 드문 경험을 하고 있다. 이 체제 내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은 타 회원국에서 노동자로서 해당 국가의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다.

공동체주의는 각각의 정치공동체의 영토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이 개인에게 하나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충성을 요구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주의 공동체는 개인이 머무는 공간에서 다른 이들의 삶에 종속되지 않는 좋은 삶을 지지한다. 그렇기에 자유주의 공동체는 자기 영토 안에 머무는 모든 이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공동체주의는 개인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공동체(예를 들어 네팔과 한국)에 동시에 속할 권리를 지지한다.

더하여 지구화 시대의 문제를 접한 공동체주의는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서 공동체 규모의 확대를 모색한다. 이런 맥락에서 베스트팔리아를 지배한 제국의 역사를 탈피해 포스트베스트팔리아의 '서로를 지배하지 않는 공동체의 연합'을 지지한다. 유럽

연합을 지지하는 공동체주의의 입장은, 개인이 기존에 속한 국가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보다 수준이 높은 지역정치공동체에 동시에 속할 권리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이런 공동체주의의 입장을 '겹'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이 '겹' 공동체의 개념은 이주노동자를 문화적으로 다른 공동체를 겉도는 이주민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 규정한다. '겹' 공동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신이 자라난 공동체와 일하는 공동체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때로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공동체라 할지라도 동시적 애착이 가능함을 인정한다. 이런 맥락에서 '겹' 공동체의 개념은 다양성을 기본조건으로 하며, 열린 경계에 호의적이다.

하지만 공동체주의가 각각의 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생겨난 사회적 가치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한 배제와 경계의 닫힘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히 공동체주의의 한계이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한계이기도 하다. 어쩌면 지금의 공동체주의는 베스트팔리아의 현실과 포스트베스트팔리아의 이상 사이에서 때로 한발 나아가고 때로 한발 물러서는 우리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023 공동학술대회
글로벌 이주시대 공동체 이론과 실제

학술대회 일자: 2023년 5월 13일.
자료집 제작: 2023년 5월 9일.
자료집 인쇄: 2023년 5월 10일.

본 자료집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NRF-2022S1A5C2A02093524)